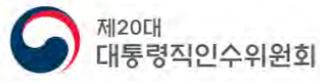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18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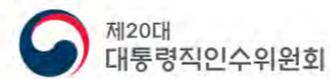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2022.3.18)
3. 대통령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2022.3.18)

I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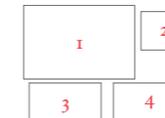


1. 서울 통의동 '프레스 다방' 방문(2022.3.24)
2.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기자회견(2022.3.20)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2022.3.26)





1.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봉사활동(2022.3.30)
2.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 접견(2022.4.6)
3. 인수위 지도부와 오찬 후 산책(2022.3.20)
4.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 참석(2022.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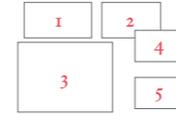
1. 당선 후 첫 공식일정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2.3.10)
2.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브리스' 방문(2022.4.7)
3. 국립4·19민주묘지 참배(2022.4.19)
4.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2022.4.3)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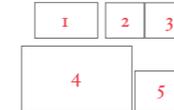


1. 두 번째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2022.4.19)
2. 경남 진주 중앙 논개시장 방문(2022.4.21)
- 3, 4.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2022.4.29)
5.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 방문(202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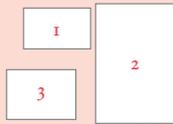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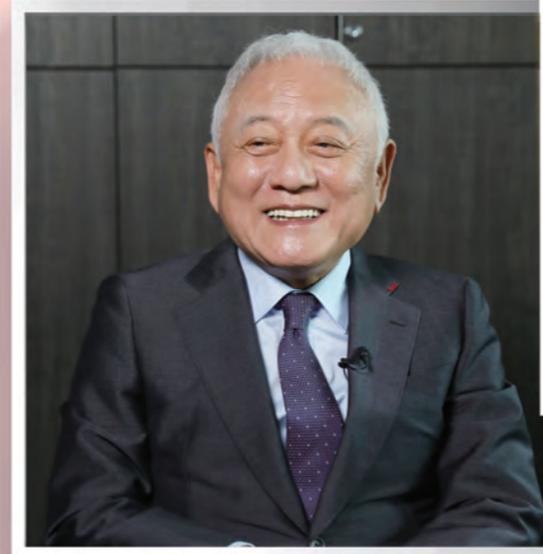
1. 첫 번째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참석(2022.4.13)
2.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2022.4.21)
3.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방문(2022.4.25)
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2022.4.22)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방문 간담회(2022.4.15)





1. 대전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022.4.29)
2. 새만금 지역 일대 시찰(2022.4.20)
3.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참석(202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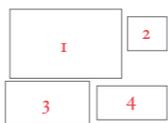




1	4	5
2	6	7
3	8	9

1. 안철수 인수위원장
2. 권영세 부위원장
3. 원희룡 기획위원장

4.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5.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6.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7.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8. 이철규 당선인비서실 총괄보좌역
9. 서일준 행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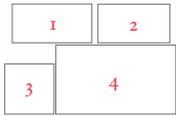


1, 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그림판 전달식(2022.5.3)
 3. 강원 춘천역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 점검(2022.5.4)
 4. 어린이날 행사 참석(2022.5.5)





- 1,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2022.5.6)
- 2. 군 통수권 인수 및 첫 집무 시작(2022.5.10)
- 4. 취임식 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2.5.10)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The 20th 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y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202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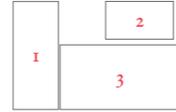


1. 제20대 대통령 취임식(2022.5.10)
2.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카퍼레이드(2022.5.10)
3. 청와대 개방 행사(202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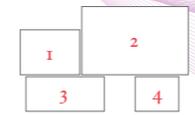


1.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2022.5.10)
2. 취임식 후 참석자들과 인사(2022.5.10)
3. 제20대 대통령 취임식(2022.5.10)





1. 서울 용산구 주민 환영행사(2022.5.10)
2. 1호 법안 서명(2022.5.10)
3.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2022.5.10)
4.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022.5.11)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향한 여정

“신승(辛勝)은 용기를 낳고, 낙승은 게으름을 낳고, 완승은 교만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국민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시작도, 끝도 민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새 정부 앞에 펼쳐진 시대적, 국제적 도전의 파고는 높습니다.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제 시대가 자국우선주의와 이익블록화 시대로 변하고, 기술패권주의가 발흥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재도약해야만 합니다.

시대적 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첫 번째 원칙은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무능한 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 있고 개혁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 잘하는 정부’가 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제 분야의 국정목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전략을 재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규제혁파를 통해 창의와 자율 중심의 경제 운영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혁파기구를 만들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할 때만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는 생산적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튼튼하게 만드는 맞춤형 복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경제이고, 경제가 과학기술인 시대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만들고 그 기업들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5위 경제 강국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연구개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감사’를 통해 실패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한 연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 하나만 성공해도 전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의 강화입니다.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북문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면서 상호주의와 실사구시(實事求是)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정운영의 기초를 관통하는 원칙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고 실용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50여 일 동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런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설익은 정책이나 개인의 의견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치열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도약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애써 주신 인수위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차례



- 권두화보 00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화보
- 발간사 033.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향한 여정

제1부 시대가 택한 윤석열정부의 첫걸음

시대정신과 새로운 비전

- 040. 제1장 (시대적 소명)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041. 제2장 (국민의 요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041. 제3장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비전
- 045. 제4장 (국정운영 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 ### 제2부 다시 대한민국, 어디로 향하는가?
-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 048. 제1장 국정목표의 설정
 - 051. 제2장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067. 제3장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094. 제4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27. 제5장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147. 제6장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발행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행인 안철수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편집인 박보균
발행일 2022년 6월 3일
제작협력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03 제3부 내일을 위한 고민, 50일의 낮과 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과 정책

- ### 168.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 내용
- ① 개관
 - ② 위원장실
 - ③ 부위원장실
 - ④ 기획위원회
 - ⑤ 기획조정분과위원회
 - ⑥ 외교안보분과위원회
 - ⑦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 ⑧ 경제1분과위원회
 - ⑨ 경제2분과위원회
 - ⑩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 ⑪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 ⑫ 대변인실
 - ⑬ 행정실
 - ⑭ 국민제안센터

- ### 258. 제2장 특별위원회 및 TF 활동
- ① 국민통합위원회
 - ②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 ③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 ④ 청와대이전TF

- ### 286. 제3장 주요 정책
- ① 청와대 이전
 - ② 코로나19 손실 보상
 - ③ 코로나19 비상 대응
 - ④ 국민통합
 - ⑤ 지방시대 개막
 - ⑥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
 - ⑦ 부동산 세제 정상화
 - ⑧ 디지털플랫폼정부
 - ⑨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⑩ 탄소중립 정책
 - ⑪ 인구 정책
 - ⑫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획기적 보장
 - ⑭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⑮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집) 청년소통

제4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 360. 제1장 활동 방향
- 374. 제2장 국정운영 기조
- 392. 제3장 주요 연설문
- 402. 제4장 당선인 주요 일정



- ### 제5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 대통령 취임행사
- 408. 제1장 개요
 - 416. 제2장 추진 과정
 - 428. 제3장 취임행사
 - 438. 제4장 취임사

- ### 부록
- 44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44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 45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 45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분장업무

- 45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근무자 현황
- 46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 466. 편집후기
- 467. 백서 편찬위원회



01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시대가 택한 윤석열정부의 첫걸음

제1장 **시대적 소명**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제2장 **국민의 요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제3장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비전

제4장 **국정운영 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01.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시대가 택한 윤석열정부의 첫걸음 | 시대정신과 새로운 비전

제 1 장 시대적 소명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의 변혁기에 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3년째 지속된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탈냉전 이후 형성된 세계질서가 깨지면서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제가 자국우선주의와 이익 블록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어느 블록에 편입되는가에 따라 글로벌기업도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분단 상황 및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의 방식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했던 대한민국이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청년세대의 기회

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국가안보에 위기가 닥쳤고,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우리는 빚더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을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제 2 장 국민의 요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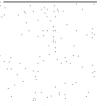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경제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한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협회의회(UNCTAD) 설립 이래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지위가 변경된 나라이다. 이처럼 국가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국민 삶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고, 국민행복지수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무엇이 '잘'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이념과 진영 중심의 분열과 대립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주거비용 폭등으로 절망하는 서민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분열된 정치권이 청구하는 시대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일자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계층과 세대에 따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국민은 이제 자신의 삶의 문제가 나아지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 국민은 나라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

제 3 장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비전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편향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염원이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먼



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국정비전은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살기’ 위한 분야별 비전은 다음과 같다.

01. 일 잘하는 정부

모든 국정 의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지표를 중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가 바로 일 잘하는 정부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일하는 자세와 시스템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문에서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등용해야 한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인재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과 필요한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해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해 나가면 국정과제 추진의 성과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 것이다. 그 결과로 저 성장과 양극화 등 오래된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도 완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 진전되고, 그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민의 삶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2. 역동적 혁신성장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다.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활기차게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 없이는 역동적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민간이 앞에서 끌고 정부는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며 뛰는 민간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03.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다.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는 바로 일자리다. 윤석열정부는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고 믿으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생산적인 복지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는 사회서비스가 특히 중요하다. 간병, 가사, 간호, 보육, 노인수발, 저소득가정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크게 늘려야 한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동력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려운 국민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 더 많은 기회를 더 공정하게 제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

04.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

가가 될 수 없다.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 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

선진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경쟁에 돌입하였다.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내야 대한민국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해야 한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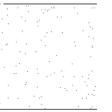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연구 관리시스템도 정부가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며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도 획일적인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05. 글로벌 중추국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경제 안보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 감아서는 안된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인류의 기후위기 등 세계적인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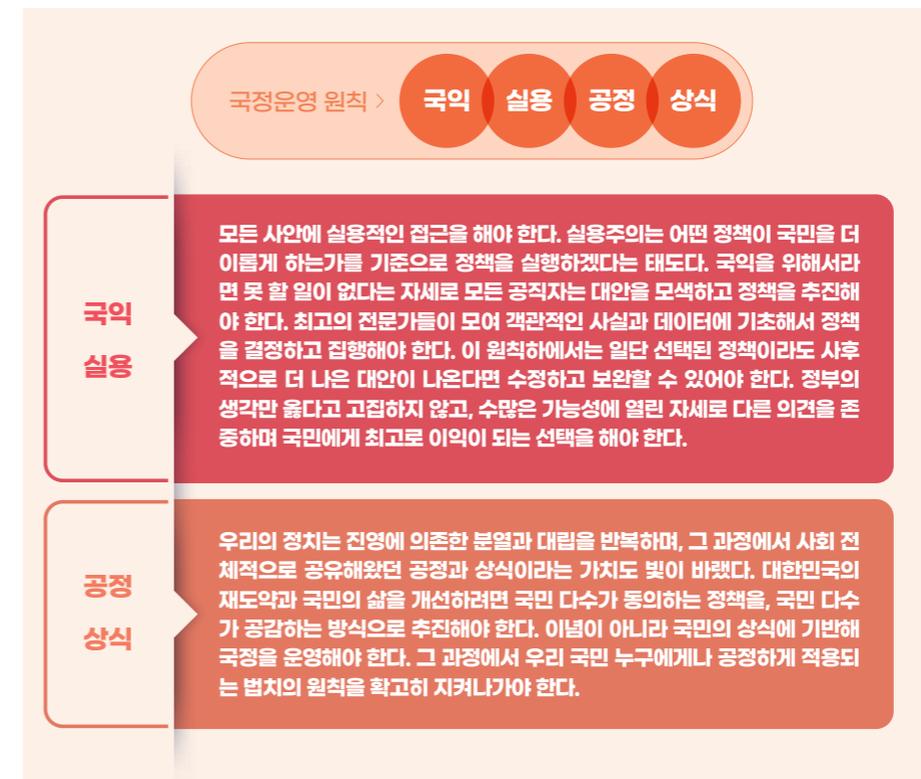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글로벌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제 4 장 국정운영 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책방향의 결정, 정책수단의 선택, 정책집행 등 수많은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국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은 국정운영의 4원칙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서로 마주 보고 대치해 왔다.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인적·물적 자원을 그 대결에 사용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 정부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일해 나간다면,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을 엮고 국민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이다.



02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어디로 향하는가?

제1장 국정목표의 설정

제2장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제3장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제4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제5장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제6장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2.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어디로 향하는가? |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제1장 국정목표의 설정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부문과 함께 미래, 지방시대 등 6대 분야 국정목표를 설정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미래지향성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①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를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④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그림판’ 전달식(2022.5.3)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를 제시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⑨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⑫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하였다.

미래 분야에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⑭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를 제시하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⑱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⑲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섯 번째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 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⑦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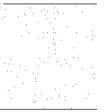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2장

국정목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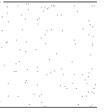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원칙’을 다시 세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한다.

[약속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약속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속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약속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 과제 목표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금융지원을 위해 담보·보증대출과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도 공급한다.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재취업·업종전환을 촉진한다.

AI에 기반한 상권정보 제공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인력 교육 등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과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등으로 상권회복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年) 10만 명 양성 등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근본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1) 과제 목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생명 보호를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지 모를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방역·의료체계를 이에 맞게 전환한다. 고위험군 신속 진단·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항체 조사,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한다. 또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선진화한다.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와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과 위험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체계와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도 개편한다.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1) 과제 목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 즉시 가동한다.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해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한미 간 협력을 구체화하며,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한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사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3) 기대 효과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를 통해 원전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1) 과제 목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검·경 수사지연 및 부실수사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 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한다.

검·경이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지 등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한다.

3) 기대 효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고,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며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05. 민간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1) 과제 목표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2) 주요 내용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19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생산한다. 동시에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3) 기대 효과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성과관리 실효성을 강화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1) 과제 목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를 중심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재허가 심사 시 반영하며,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이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콘텐츠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1) 과제 목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여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드맵 수립 ▲주택공급 확대·조기화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2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며,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10만 호 이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

3) 기대 효과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황 이동을 지원할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과제 목표

주택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한다. 2022년분 중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중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증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제도를 완화한다.

3) 기대 효과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 과제 목표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지원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 완화(60~70% → 80%)를 우선 추진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는 현행 시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3) 기대 효과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서민층 노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 과제 목표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 ▲주거급여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하고, 품질 향상,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추천한다.

3) 기대 효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약속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 과제 목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2) 주요 내용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산업으로 확산한다.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처리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3) 기대 효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1) 과제 목표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국무총리,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국무총리의 국정외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른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참여민주주의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2) 주요 내용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킨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실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주기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와 정비 실적의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가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호화관사의 폐지, 관사 규모와 사용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의 자격을 개방하는 등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한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의 명문화를 추진한다.

기부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3) 기대 효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과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이며,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해 법적 분쟁과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1) 과제 목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 중심 공정 인사 ▲자율·책임 기반 공직 여건 조성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다.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와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자율·책임 기반의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한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제도 등을 개선하여 직무 몰입을 강화하고, 직급·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재산공개창구를 일원화한다.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공상 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현장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를 생산한다.

3) 기대 효과

공직사회의 공정성·효율성·책임성을 높여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1) 과제 목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하고,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 경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범위를 합리화하고, 소규모 기관 등의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장

국정목표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하는 행복경제시대를 열어간다.

[약속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약속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약속 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 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약속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 과제 목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 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민·관·연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기업과 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하는 스마트 규제를 도입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다.

3) 기대 효과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 과제 목표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한다.

2) 주요 내용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복원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을 확산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의 추진체제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운영한다.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혁신 기반을 확충한다. 기업 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을 추진한다.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강소도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와 창업거점화를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1) 과제 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혁신산업에 정책자금 집중 공급 및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 투자·고용·리쇼어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 지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 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또한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을 발전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 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며, 미래 혁신산업 성장을 금융이 뒷받침하여 역동적 혁신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과제 목표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며, 서민 물가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 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주요 내용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을 점검한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를 위하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한다.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국제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리스크 발생 시 건전성 규제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3) 기대 효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1) 과제 목표

산업·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한다.

2) 주요 내용

<소계·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통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통제, 기술유출 방지,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디지털·그린 혁신을 위해 우리 산업의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인 ‘(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각국의 환경조치(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고, 복수국 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의 교역기반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신(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 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에 지속 대응한다.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 전략으로서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도 추진한다.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新)통상질서를 주도한다.

무역구조 개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동남아 등 신(新)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탈(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를 고도화한다.

3) 기대 효과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新)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新)산업·신(新)시장 창출

1) 과제 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립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에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고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2) 주요 내용

원전,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의 NDC 달성방안을 수정한다.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 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안정적 청정수소의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한다.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을 기대한다.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과제 목표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 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메가(Mega) 프로젝트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 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도 추진한다.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기술 R&D의 자율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한다.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산업 R&D 투자전략 회의'를 신설한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가속화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를 달성하고,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를 제고할 것이다.



[약속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 과제 목표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를 혁신한다. 가상 협업공장을 2027년까지 50개 구축하고,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공정을 최적화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 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한다.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를 2025년까지 1,800개 구축하고,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신축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하이브리드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대한다.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 과제 목표

경제안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超)격차를 확보하고 신(新)격차를 창출한다.

2) 주요 내용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의 수요 연계·R&D를 강화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을 조기 상용화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守城)하며,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25. 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 과제 목표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한다.

2)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감염병 등 보건안보와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한국형 Arpa-H).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개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와과학자·규제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 한국이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 바이오서밋 등을 개최한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의료진 등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과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를 위한 규제과학 혁신을 추진한다. 연구 단계부터 개발기술과 현행 규제의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제품화 예측성을 높이고, 사전상담·임상시험 설계·신속심사 등 허가 지원과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형 규제 재설계 등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시행착오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인다.

허가 후에도 제품에 대한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제품의 실제 사용정보(Real World Data)를 평가하여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는 환류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에 국가공급기반을 확충한다.

3) 기대 효과

차기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치료제의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021년, 257억 달러→2030년, 600억 달러)와 일자리 확충(2021년, 98만 개→2030년, 150만 개)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 과제 목표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혜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과 노동생산성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 과제 목표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과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ICT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로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규제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콘텐츠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OTT 전진기지 구축 및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와 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OTT 등 디지털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 등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 ICT를 적용하고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 투자와 기술융합을 통해 ICT 기반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혁신한다.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 등 미디어 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미디어 분야 스타트업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술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자원·인프라를 마련하여 중소지역방송을 활성화한다.

3) 기대 효과

미디어 규제 개선과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산업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2020년(19조 5,000억 원) 대비 10조 5,000억 원 증가한 3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 과제 목표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육성 ▲물류·건설산업 혁신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항공 강국 도약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 등을 정비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및 관련 인증·검사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와 함께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한다.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항공정비산업 육성, 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을 제고한다.

3) 기대 효과

임기 내에 사실상 완전자율차(2027년)와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025년)를 기대한다. 국토교통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약속 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 과제 목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신속한 M&A 심사, 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혁신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의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를 운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한다.

2) 주요 내용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산·학·연 협업을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며,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자율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자율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를 조정(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 및 주기 등을 합리화하는 등 공시제도도 재정비한다.

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남용행위 및 담합행위를 비롯하여 사익 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심각한 불공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3) 기대 효과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한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 과제 목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2) 주요 내용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플랫폼의 역동적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한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협의 요건·절차 등 제도를 개선하여 중기조합의 대협협상을 활성화한다.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 등을 보급하여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동시에 원자재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납품단가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조정협회의 불응하거나 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다.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사업자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3) 기대 효과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 과제 목표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2) 주요 내용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및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2만 1,000개를 추가로 보급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하고,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를 구축한다.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 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17개) ▲지역 인재 정착 등을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신규로 공급하는 스마트공장 중 고도화 공장의 비중을 2021년 23%에서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2020년 1.5%에서 2027년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은 2021년 2,262개 사에서 2027년 2,400개 사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비율도 2021년 41%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 과제 목표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 주요 내용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팁스(TIPS)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하고,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을 확대한다.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세제·재정·투자·규제특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3) 기대 효과

2021년 24만 개 수준의 신규 기술창업 기업 수를 2027년 3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해 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지원 등 재도약 성공사례도 창출한다.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 과제 목표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한다.

2) 주요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 및 조정안 효력을 강화한다(분쟁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등).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하여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하고, 피해기업의 손해액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수준별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5년간 300개 육성한다.

신(新)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상생결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수도 2021년 1만 1,000개사에서 2027년까지 누적 2만 3,000개사로 확대된다.

[약속 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 과제 목표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를 축소하고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확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맞추어 불안 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 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역동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35.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BIS·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3) 기대 효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으로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 과제 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를 투자자 보호장치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위해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여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소득을 제고한다.

3) 기대 효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1) 과제 목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예대금리 공시를 개선하여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1개월)하는 한편 필요 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모바일 OTP 확산을 위해 전(全)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 과제 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상철도시 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을 개편한다.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 조성하는 등 국토 공간을 디지털화한다.

3) 기대 효과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 과제 목표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신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을 추진하고,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방 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과 물류거점의 확충을 지원하고,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상물류 인프라를 강화한다.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시장 전환에 맞춰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친환경선박을 개발하여 우리 기업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주요 내용

국적선사가 선박과 해외물류기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선사의 수송 능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은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여 선사의 발주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회와 국제 컨테이너 선사 간 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선적 공간을 제공한다. 해상운송 핵심인력인 선원에 대한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항만과 선박에 대한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을 구축하고, 부산·인천 등 신규로 조성되는 신항만에 이를 확대 적용한다. 주요 항만에 수리조선, LNG 병커링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무탄소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근해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상교통 안전관리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해상사고관리를 강화한다.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를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를 고도화하여 해상에서도 육상 수준의 디지털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기대 효과

국적 선복량 12% 확대(2021년 8,900만 톤→2027년 1억 톤), 공동물류센터 5개소 추가 확보(2021년 3개→2027년 8개)로 국적선사들의 수송 능력이 향상되고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 과제 목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을 조성한다.

2) 주요 내용

우리 어장에서의 불법어업을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의 어업관리단은 어업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대형 어업 지도선과 해경의 함정을 증강 배치한다.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한다.

해상교통관제를 고도화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한다. 선박교통관제센터를 2025년에 권역별 광역 센터로 통합하고 관제 레이더를 현 86개에서 107개로 확충하는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을 확보하며, 민간구조대에 대한 지원 및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한다.

섬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확대한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은 공영제로 전환하고, 교통편이 없어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섬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경감도 병행한다.

해양공간의 이용·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을 조성한다.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 감시망 구축,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갯벌·바다숲 등 해양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첨단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하며,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

국정목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구축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국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로 나아간다.

[약속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약속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 과제 목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먼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국민연금에 대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 과제 목표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상병·실직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실태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평가·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한다. 또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3) 기대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 과제 목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여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여나간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공급기관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빅데이터와 정보연계를 통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을 정교화하며, 지자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적정화하고,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3) 기대 효과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 과제 목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강·돌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내실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 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한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높인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대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간병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과 함께 모니터링·평가 등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한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의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산한다.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 과제 목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돌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을 제고한다.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촉촉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모·아동 등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한다. '임신·출산 모바일앱'을 고도화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보장성 확대도 검토해나간다.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획기적인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취약계층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1) 과제 목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한다. 장애의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확대한다.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하고, 직업재활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을 통해 소득·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급자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정교화한다.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주택·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확충해나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 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과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확대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를 실시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을 기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 과제 목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해 인권친화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주민 인권을 개선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을 신속히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청소년 안 전망을 강화해 청소년 위기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다.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해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이주민 권익을 증진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며 동물 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를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등에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 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용자 인권보호와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반려동물의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1) 과제 목표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2) 주요 내용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관련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산재예방 지원을 확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개발·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장으로서의 보급·확산을 지원할 것이다.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 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지원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여 건강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업 복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한다.

3) 기대 효과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1) 과제 목표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한다.

2) 주요 내용

‘공정채용법’ 입법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을 지원한다.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여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호한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현되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생에 대응하며,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1) 과제 목표

근로시간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통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원한다.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여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협의회를 확산한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하여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한다.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의 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장기 노사분쟁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존중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1) 과제 목표

구직자와 기업에게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구직자 개인의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지원한다.

채용조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을 위해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할분담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일자리 사업의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등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이를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구직자·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가 제고되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 과제 목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하여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지역·산업별 전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을 조기 포착하고, 직무전환 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를 지원하여 산업구조 전환 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다.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도 확대할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고용안정망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하여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기대 효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1) 과제 목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재학·구직·재직·이직·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조화 할 것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 유망분야 노동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을 확충한다.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한다.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을 확산한다.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 병행 업종을 다양화하고,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해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를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하는 등 일터학습 인프라를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1) 과제 목표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을 도입한다.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현장중심 지원을 확대한다.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를 간소화하며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을 지원하는 등 훈련 방식을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3) 기대 효과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1) 과제 목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와 확산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서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도서관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가칭)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칭)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어를 확산하는 등 우리 문화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기반을 조성하고, 향유 촉진 및 홍보를 지원한다. 세종학당을 확대 및 내실화하여 한국어를 확산하고,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을 통해 언어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문화자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및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를 확립한다. ‘(가칭)문화도시 2.0’ 및 지역문화 활력 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고,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국민의 소득·지역·연령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1) 과제 목표

예술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을 위해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제도를 개선하고, 3년 이상 다년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며,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특히 음악·무용 장르별 전용 공연장과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의 기반을 조성하며,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을 제고하고,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작품활동과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간 창·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며,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대상 국민연금 지원을 강화하며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나간다.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활성화하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1) 과제 목표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며,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및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을 강화한다.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특히 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등을 통한 장르별 인재양성, 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및 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구축, 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 등 창·제작 지원, 해외 마켓 참가 및 네트워킹·비즈매칭 연계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세계화를 목표로 10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뷰티·패션 등 한류 연관산업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K-콘텐츠로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 및 문화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 원 달성(2020년 128조 원), 수출액 230조 원 달성(2020년 119조 원), 한류팬 2억 명 달성(2020년 1억 명)과 함께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기대한다.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1) 과제 목표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교육 제공 ▲미디어 접근성 강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유아 대상 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 대상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 노인·장애인 대상 특화교육 등 전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 없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제공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천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사 및 동영상 배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한다.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모욕적 게시물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 기대효과

미디어 접근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 내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1) 과제 목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지원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하여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을 통해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하며,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을 추진한다.

전문체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을 강화하고, 체육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해 훈·포장을 확대한다. 또한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체제도 구축해 나간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를 육성해 나간다. 또한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해 스포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한다.

국제스포츠 경쟁력·위상 제고를 위해 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이스포츠(e-sports)·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을 68.5%까지 향상하고(2021년 60.8%), 스포츠 산업 시장을 100조 원까지 확대(2021년 51조 5,000억 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1) 과제 목표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추진하고,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업계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확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 협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 나간다.

모두를 위한 여행을 위해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을 지원하고, 국민 여행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다.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위해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및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한다. 특히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하며, 특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간다.

관광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확산하고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혁신적 관광벤처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 관광산업 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2019년 108조 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달성(2019년 1,750만 명)을 기대한다.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1) 과제 목표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법·조직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의 멸실·훼손 위험에 처한 비지정 미래유산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경복궁 후원 권역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5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 공간을 전면 개방하고 핵심유적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재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진단비용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재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를 통합한 문화재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강화한다.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 유산의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의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계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 과제 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안을 지원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며,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추진한다.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하며,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한다.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을 위해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을 검토하고 무고 등 적발을 강화하며,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서민·소상공인을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1) 과제 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변 보호부터 법률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현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절차 법제화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에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한다.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범죄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지원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1) 과제 목표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며,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119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

2) 주요 내용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의 제공을 추진한다.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를 확립한다.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 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 정비를 추진한다.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소방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첨단 소방장비를 개발·보급하며 119구급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신속하고 과학적인 재난대응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하고, 화재 안전도(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 2021년 0.6명→2026년 0.56명)와 심정지환자 인명소생률(2021년 9.8%→2026년 11.8%)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한다.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1) 과제 목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 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022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3) 기대 효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나간다.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과제 목표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건강·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과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운동하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을 확대한다.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에 대한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투자를 확대한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백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3) 기대 효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에 대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1) 과제 목표

온라인 구매·배송, 수입직구, 신기술 제품, 급식 확대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상에 적합하도록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 예방관리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국민의 먹거리 안전권 보장을 위해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과 수입 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새벽배송 등 신(新)유통 안전망과 신(新)기술·소재 식품·용기의 안전 검증을 확대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매일 먹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K-급식관리체계를 재설계하고,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의 적정 섭취 기반 확립, 소비기한과 디지털·점자 표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 건강권을 증진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위해요인의 통합 평가·예방을 위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품이 아닌 인체안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총량평가하는 체계 확립과 담배 유해성분을 평가·공개하는 한편 중독·손상 등 건강위해요인의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된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강화한다.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를 차등화하여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되도록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한다.

3) 기대 효과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소요기간이 5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1) 과제 목표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건설·건축안전 관리 ▲안전한 국토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로 개선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발주, 시공, 감리 등 건설 주체의 안전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충한다.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를 도출 및 시행한다.

3) 기대 효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1) 과제 목표

농촌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면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산림 분야의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림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2) 주요 내용

농촌지역 등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보건복지부) 및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와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농촌공간이 지역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2022년)한다. 또한 장기 계획에 따라 서비스 거점 확충 및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2031년까지 400개소)를 추진한다.

이장·통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을 인상하여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한다.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산림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과 공공건축 국산 목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한다.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및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을 추진하여 임업인 소득의 안정과 함께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이 향상되고, 귀산촌인의 증가와 함께 목재자급률의 제고가 기대된다.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1) 과제 목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 청년농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며,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 방식 도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급자리(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15개소),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을 위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2년)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023년)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신소재 분야의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의 한류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농산업 혁신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연구데이터의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024년),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의 생산단지를 집적화(120개소)하고,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 에너지화) 확대 등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간다.

3) 기대 효과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벤처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027년) 달성 등으로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축산분뇨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1) 과제 목표

기초식량을 중심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고, 농업직불금 확대 및 농업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자급률이 낮은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면서 공공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식량의 자급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 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예 :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를 확충해 나간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2027년 80개) 및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을 다양화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등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025년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밀·콩의 자급률이 제고되고 해외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가 유지되며, 농업직불금 지원이 증가하고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가 개선되어 농산물 생산자인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1) 과제 목표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전 단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연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 주요 내용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소규모 어가까지 확대하여 어촌의 소득을 제고한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를 고도화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를 본격 가동하여 수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산물 방사능검사, 원산지·이력제 관리를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은 현대화 하는 등 수산물 먹거리 안전 문제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어업인에 대한 복지 혜택도 강화한다. 모든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업 사고로 인한 직업재활보장 수준을 산업재해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을 확대하여 해양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동·서·남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를 확대하여 해양바이오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리나 거점, 레저선박 클러스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조성한다.

3) 기대 효과

어촌·수산업 경쟁력 제고로 어가 평균소득이 높아지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수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제5장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면서 기후·환경 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연다.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1) 과제 목표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재설계를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경제대국, 강한 안보, 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정책을 대전환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정부·중앙 중심에서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하며, 산·학·연 간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질적 성장을 위한 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하고 유연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하며, 기업의 혁신역량 별로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한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 등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을 통해 공동·협업연구를 활성화한다.

3) 기대 효과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과 함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강한 안보,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1) 과제 목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2) 주요 내용

반도체, 양자, 우주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초격차 R&D 프로젝트를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로 기획·추진한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 협동·융합 연구를 활성화한다.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사업화·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선도국과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1) 과제 목표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 인재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 간 균형 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의 양성·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등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 등 과학기술 분야 병역제도를 확대·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지원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의 정년 이후 근무기회를 확대한다.

3) 기대 효과

HCR 등 기초연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가 2배로 확대되고, 전략기술 분야에서 G5 수준의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1) 과제 목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2) 주요 내용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를 전면 적용하여 AI 융합을 확산한다.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을 위해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AI·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관 공동의 핵심 전략분야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한다.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플랫폼의 건전한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도약하고 데이터 시장 2배 이상 성장,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달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1) 과제 목표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확보하여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024년)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한다.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新)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운영하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Wi-fi)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 등이 기대된다.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1) 과제 목표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산업을 활성화하여 우주개발이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한다. 우주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마련하여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2) 주요 내용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다부처 정책 조정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기능을 설계하여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 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여 우주산업을 활성화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을 통해 독자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개발하는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3) 기대 효과

‘누리호’ 발사(2022.6월) 성공과 ‘달 탐사선’ 발사(2022.8월), 적극적 국제협력 등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발사체에서부터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1) 과제 목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에서부터 창업·기업성장,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

2) 주요 내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혁신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 원천기술 R&D 기반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을 통해 개방형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의 공간상 집적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광역특구,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특구의 확산·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육성방안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주도형·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을 확충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3) 기대 효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 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과 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1) 과제 목표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대학 내 부트캠프,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교원의 SW·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함께 적정 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안을 마련한다.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와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튜터를 배치하고,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SW·AI 영재교육, 다중문해력 교육,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도 확대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로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하고, 인재양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인재 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므로써 디지털 전환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 과제 목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학생 개개인을 위해 국가 책임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대입전형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단순화를 추진한다. 미래 교육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을 추진해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 향상을 밀착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지원하면서 협력수업 운영학교와 다중지원팀을 확대한다.

대학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교육 경감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도 집중 추진한다. 개인별 ‘(가칭)마이포트폴리오’에서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AI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1) 과제 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대학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는 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학사제도를 유연화하여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등 학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 양성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위해 ‘선행학습인정제’가 대학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창업교육 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장비, 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학 기반의 실전·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을 지원한다.

부실·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입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이 조속히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기대 효과

대학 체제를 사회·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전환하고,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 과제 목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2) 주요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 시간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하여 누구나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아·초등 돌봄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기능 재배분과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치로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해 나간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도 개선한다.

전 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 국민까지 확대 추진하고, 학습·자격·진로 등 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3) 기대 효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1) 과제 목표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대학·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도 확대한다.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과 지역의 우수연구자를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한다. 동시에 (전문)대학 중심의 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학이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업전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마이스터대 지원도 확대한다. ‘전문대학 코업(Co-op)’ 제도를 확대·개편해 학업과 현장실습의 효과적인 병행을 지원하면서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해 신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 트랙을 마련한다.

3) 기대 효과

대학·지자체·산업 간의 협력으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신기술 역량 강화로 구직자와 재직자의 구직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1) 과제 목표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과 탈탄소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녹색경제로 전환한다.

2) 주요 내용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부문별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 전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다.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를 유도한다.

녹색 투자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한다.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인증기준은 환경성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과 연구가 결합된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3) 기대 효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녹색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녹색산업의 시장 규모를 종전보다 30%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1) 과제 목표

전례 없는 홍수·가뭄·산불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주요 내용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실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댐·하천의 디지털 트윈을 2026년까지 구현하는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구현한다. 국가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물 서비스는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으로 취약 지역의 물 공급을 강화하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루어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 다목적댐 등 물 관리 환경시설은 정비하고 현대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강화 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속 유희지·훼손지 등은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생활 속 생태 녹지를 확충한다. 야생동물 검열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곰 사육은 종식하는 등 인간과 동물의 공존 기반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을 현재 80%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등 홍수 같은 기후위기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1) 과제 목표

초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푸른 하늘을 복원한다.

2) 주요 내용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2022년 재수립한다. 전원믹스를 최적화하여 화석연료 발전비중 목표를 2027년까지 40%대로 축소하도록 추진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50% 이상 축소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한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기존의 12시간 전에서 2일 전 예보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초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2022년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학교·요양시설에 정화기·환기설비 등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18\mu\text{g}/\text{m}^3$ 에서 2027년 $13\mu\text{g}/\text{m}^3$ 까지 저감함으로써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한다.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1) 과제 목표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

2) 주요 내용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1회용품 사용감량을 지속 확대한다.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 촉진법'을 제정한다.

국민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도록 폐자원 회수·선별 체계를 고도화한다.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선별장을 현대화한다.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도 추진한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생산자 등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을 허용하고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 2022년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까지 최대 $5\text{억Nm}^3/\text{년}$ 생산을 목표로 한다.

3) 기대 효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160만 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여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율을 2020년 0.9%에서 2026년 10%까지 상향한다.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 과제 목표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보강한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2) 주요 내용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신혼·생애최초 대상으로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 LTV·DSR 관련 청년 등에게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여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게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지방청년을 위한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일자리 지원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3) 기대 효과

주거 안정과 취·창업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확립된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1) 과제 목표

청년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취약 청년은 더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세대 내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

2) 주요 내용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 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도 병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과 함께 캠페인·홍보도 강화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인 ‘(가칭)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의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확대를 추진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한다.

3) 기대 효과

채용과정을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정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은 더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청년 세대 내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1) 과제 목표

청년 세대의 인식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청년정책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하며, 중앙부처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위원 위촉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센터와 중앙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연구기관 설치도 검토한다.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3) 기대 효과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기대한다.



제6장

국정목표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익·실용의 외교 전략과 튼튼한 국방 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동시에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간다.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19]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1) 과제 목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주도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한다.

주요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유지 및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북한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한다.

3) 기대 효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1) 과제 목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고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언론·출판, 미디어·콘텐츠 교류 등 다방면의 상호소통과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그린데탕트’를 구현하기 위해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과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등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자유민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와 지역별 통일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통일 담론을 확산한다. 국민에게 북한정보 서비스도 개선하여 제공한다.

청소년을 위한 통일 미래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메타버스와 AR·VR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북 공동번영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남북 간 다방면의 상호 접촉과 왕래 활성화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2021년 70.4%)을 개선하여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도 확산한다.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1) 과제 목표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먼저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2) 주요 내용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지원과 식량난·수해 등의 긴급구호를 추진한다. 또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민관 인도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적인 상봉을 추진한다. 남북회담과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조력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와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남북 주민의 고통 경감에 기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한다.



[약속 19]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1) 과제 목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한미 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간 공조도 확대한다.

한중 간 정상 교환 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을 강화하고 실질협력을 증진하여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과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열린 교류도 확대한다.

한·러 간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3) 기대 효과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과제 목표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대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협력 강화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양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층적 협력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EU,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한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양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틀을 구축하고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對)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을 통한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중양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양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항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1) 과제 목표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해간다.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협업하에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R&D를 확대하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를 위해 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다자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역내 위상을 제고한다.

신항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 공조 등을 수행한다.

3) 기대 효과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신항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 과제 목표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을 위해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 위기 상황하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에 동참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확대한다.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우리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고 중추적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1) 과제 목표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한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재외동포 권익을 신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외국민의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 과제 목표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화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비해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해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을 배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추진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범(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으로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10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1) 과제 목표

2023년 11월 개최지 선정까지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주요 내용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한다.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3) 기대 효과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다.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 과제 목표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방 AI 전략을 추진하며,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을 개혁한다.

2) 주요 내용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나간다.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중요한 축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반자율(2023~2027년)→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여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며,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회 기능을 강화한다.

엄중한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군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 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3) 기대 효과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1) 과제 목표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축한다.

2) 주요 내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해 나가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개념 및 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술 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조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를 통해 고위력·조정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사이버·전자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북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여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최단 시간 내 배치한다. 북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의 방어망을 보강한다.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3) 기대 효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 과제 목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 태세를 완비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AI, 레이저, 우주 등 미래 국방을 주도하는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2) 주요 내용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북 핵·미사일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며,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 과제 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한다. '도전적 국방 R&D→첨단무기체계 전력화→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 주요 내용

우선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맞춤형 기업지원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 R&D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하여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방산 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및 안보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3) 기대 효과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무기체계 가격을 인하시키고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시키며,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제고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1) 과제 목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제고한다.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하고,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 주요 내용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한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며,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개선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단순업무에 대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를 개선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기대 효과

기성 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 과제 목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군인의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를 제고한다.

2) 주요 내용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하여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며,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 과제 목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2) 주요 내용

공정보훈 실현을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 보훈의료·안장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1) 과제 목표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2) 주요 내용

청년 의무복무 장병의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한다.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3) 기대 효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3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민, 50일의 낮과 밤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 내용

제2장 특별위원회 및 TF 활동

제3장 주요 정책

03.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민, 50일의 낮과 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 내용

01. 개관

1) 목적과 근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국정과제 설정 및 대통령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11(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하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현판식 후 당선인은 위원장 등 인수위원 26인, 당선인비서실장, 당선인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인수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 편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직무, 분과위원회 구성, 회의운영 등 인수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2) 구성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실, 행정실을 두고, 특별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분과별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분과별 분장 업무

구분	업무
기획조정분과 (간사 : 추경호)	인수위 운영 기획, 총괄 조정, 국정비전·국정목표 설정, 국정과제 수립 등
외교안보분과 (간사 : 김성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이용호)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경제1분과 (간사 : 최상목)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경제2분과 (간사 : 이창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 임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대변인실(대변인 : 신용현)은 인수위 활동 등의 대외 공표 및 홍보 업무를, 행정실은 인수위의 인사, 서무, 회계, 백서 발간, 국민제안 접수, 각종 회의 지원 업무 등을,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 김한길)는 사회통합,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 등 마련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김병준)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비전 수립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 안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기획위원회(위원장 : 원희룡)는 기획과제(탄소중립 이행방안 등) 선정 및 추진방향 설정 등을 담당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접수,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2022.3.18)

3) 회의 운영

인수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간사위원이 참석하는 간사단회의가 운영되었다. 간사단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분과별 업무추진 상황과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는 매주 개최하여 국정과제 설정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전체회의, 간사단회의, 당선인 업무보고 등 인수위에서 개최되는 주요 회의에는 속기사가 전속 배치되어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1)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 분과의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회의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인수위원 전원, 행정실장이 참석하고 사회는 행정부실장이 맡았다.

(2) 간사단회의

전체회의와 별개로 주 4회 개최를 원칙으로 각 분과를 대표하는 간사위원들이 참석하는 간사단회의가 운영되었다. 간사단회의에서는 분과별 일일 추진상황과 쟁점사항 등을 토론하고 점검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간사위원들은 회의결과를 해당 분과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 전달하여 국정과제 설정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4) 인원·예산·시설

(1) 인원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인수위원 24인 및 행정실장·부실장, 전문·실무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구분	계	인수위원	행정실장, 부실장	전문위원			실무위원		
				당	정부	외부 전문가	당	정부	외부 전문가
계	185	26	2	28	30	24	36	30	9
위원장	1	1							
부위원장	1	1							
기획조정분과	21	3		3	3	3	5	3	1
외교안보분과	20	3		3	5	1	4	3	1
정무사법행정분과	24	3		3	6	1	4	6	1
경제1분과	22	3		1	4	6	3	4	1
경제2분과	21	4		1	5	3	1	4	3
과학기술교육분과	22	3		1	4	6	4	3	1
사회복지문화분과	25	4		3	3	4	7	3	1
대변인	13	1		6			5	1	
행정실	14		2	7			2	3	
코로나비상대응특위	1						1		
지원 인력	25	행정지원 6명, 시설관리 9명(전산4, 시설1, 통신2, 방호1, 전기1), 회의 속기 10명							

※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0명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6명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 위원장 1명, 위원 12명
 기획위원회 : 위원장 1명, 위원 35명

원 158명을 포함한 총 185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수위 구성원 26명은 3월 18일에 모두 임명되었고, 전문·실무위원 등 인수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순차적으로 임명되었다.

인수위의 전문·실무위원은 당직자, 선대위 등에서 파견된 인력, 관련 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전산·통신·방호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속기사 등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부처로부터 근무자를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2) 예비비 편성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3월 18일 제1차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27억 574만 원을 예비비로 신청, 3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3일 신청액 전액을 배정받았다.

예비비 편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등 신규 특이소요를 반영하였고 보안정책

강화에 따른 PC망 분리, 전산 및 사무기기 임차비용 현실화 등 기타 소요비용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3) 예비비 결산

인수위는 27억 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총 26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을 불용 및 절감하였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소독 및 예방물품 구매, 네트워크 및 PC·전산장치 구축, 각종 통신장비 임차 및 관리용역 등에 사용한 관서운영비는 총 1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분과별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운영비, 인수위원 등의 직무활동비 등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편성액 대비 98.9%인 26억 7,800만 원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2,700만 원을 절감 집행하였다.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절감(불용)액(A-B)	%
금액	2,705,739	2,678,373	27,366	98.9

(4) 시설

인수위는 금융감독원 연수원(통의동), 한국금융연수원(삼청동),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 등 연면적 4,133㎡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연수원 2,349㎡ 규모를 당선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수위 사무실은 광화문 일대 및 정부세종청사 등을 두고 비교·검토하였는데, 그중 예산 절감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한국금융연수원 등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인수위 사무실 사용 현황

건물명	사무실명	
금융감독원 연수원 (2,349㎡)	1층	공동기자회견장, 속기사, 특별보좌역실, 운전·방호대기실, 전산실
	2층	대변인실, 대변인행정실,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총리 후보자 및 국무위원후보자대기실, 기획위원회실, 소회의실(Ⅰ,Ⅱ)
	3층	위원장실, 부위원장실, 부속실, 기획위원장실, 기획조정분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특보단 및 촬영팀, 총괄보좌역실, 행정실장실, 행정실1·2, 특별보좌역실1·2, 정무2보좌역실, 일정·메시지팀, 경호CP, 정무특보실
	4층	당선인 집무실, 비서실장실, 접견실, 비서실장내정자실, 부속실, 경호실, 회의실, 의전수행팀실

건물명	사무실명	
한국금융연수원 (1,400㎡)	1층	과학기술교육분과, 청와대이전TF,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특별고문실, 소회의실, 현안지원팀, 방호실, 특보실, 경찰대기실
	2층	사회복지문화분과,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브리핑실, 기자실, 부산엑스포TF, 공동기자회견장, 속기사실, 영상·사진기자실
	3층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서울청사 (384㎡)	본관 1.5층	국민소통TF팀, 회의실(Ⅰ,Ⅱ)
	본관 3층	취임준비위원회
	별관 1층	국민제안센터

사무실 집기·사무기기 등 임차 현황

장비명	임차수	장비명	임차수	장비명	임차수
컴퓨터	1,160	전기난로	5	차단봉	55
모니터	589	연결형 테이블	20	파티션 (규격 1200, 1800)	1,075
프린터	65	5단유리장	4	캐비닛	52
복사기	37	5단울문장	4	회의/원형탁자	92
팩시밀리	23	5단옷장	6	회의용 및 접의식 의자	608
문서세단기	33	회의탁자/의자	3/29	접의식 탁자	98
LED TV(42")	8	소파	17	이동서랍	587
LED TV(50")	7	소파테이블	5	몽골텐트	1식
LED TV(55")	10	마스터 책상/의자	6/6	컨테이너	1
LED TV(70")	9	마스터 소파/테이블	10/4	연수용 테이블	25
공기청정기	38	마스터 보조책상	7	옷걸이	35
냉장고	33	마스터 연결형 테이블	11	에어컨	1
스피드게이트	2	사무용 책상 (규격 1200×800)	632	대형선풍기	2
전신소독기	2세트	사무용 의자	600	냉풍기	5

02. 위원장실

1) 구성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3월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하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명 다음 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인수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임명되었고, 인수위는 3월 18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위원장실에는 부속실장 1명을 비롯해 총 4명의 인원이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2) 기본 방향

안철수 위원장은 취임 초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며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공직자들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강조했다. 일 중심의 실용적 인수위를 표방하며 정치적 사안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수위의 기본적인 활동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며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당선인의 공약을 선별, 실현 가능한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삼았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복기하여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일신우일신(一新又一新)’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언론 간담회 등 외부 활동보다는 인수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 분과 간사단회의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까지 포함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해당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인수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체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설익은 정책이 국민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이전 인수위 때의 사례를 거울삼아 치열한 내부 토론과 검증을 통해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데 진력하였다.

3) 활동 내용

자문위원을 두지 않았던 제18대 인수위와 달리 제20대 인수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국민통합인수위’를 지향하였다. 비교적 젊은 전문가와 현장 경험자까지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년 기획위원들을 대거 발탁, 세대를 아우르는 인수위를 지향하였다. 이는 후보 단일화 때부터 당선인과 위원장이 표방했던 세대 간 통합과 국민통합정부 구성 구상과도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를 이끄는 인수위원장 역할과 동시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상태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손실보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개편안 마련에도 착수하였다. 3월 31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보건의료체계를 현장 점검하였고, 4월 7일에는 서울 종로구 사직어린 이집을 찾아 코로나19 시기 보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동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투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2022.3.18)

명 마스크 보급 등을 주문하였다. 4월 10일에는 인수위 인근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발휘하였다. 3월 22일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주문했고,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방침을 발표해 금융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드리는 성과를 냈다. 또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해지자 안 위원장은 즉각적인 추가 도입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2만 2,000명 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기 도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 분야에서의 행보도 두드러졌다. 4월 2일에는 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HYBE)’를 방문,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특히 공연예술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8일에는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자동차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산업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전략과 관련된 주요한 현장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였다. 4월 28일에는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한국센터 건립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기존의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TF 구성 및 관련 조직정비 문제까지 직접 챙겼다.

외교 분야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3월 20일 크리스토퍼 델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2022.4.18)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예방을 받고 기술패권 중심시대 양국의 협력방안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4월 6일에는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협력방안과 변화된 국제 정세하에서 양국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4월 29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영 FTA 등 양국 간 경제협안과 향후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선인이 큰 틀에서 양국 간 관계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안철수 위원장은 실질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방안을 협의한다는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었다.

새 정부 복지체계 정립과 관련된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여성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가족단체와 만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오늘의 보훈 없이 내일의 애국은 없다’는 차원에서 안 위원장은 공군 훈련기 사고 순직 조종사와 해경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였다.

당선인 주재 간사단회의와 위원장 주재 간사단회의 그리고 각 분과의 논의·결정된 사항을 안 위원장이 언론인 앞에서 직접 브리핑한 것도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코로나 100일 로드맵’과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향후 추진방향 등은 50여 일 동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및 각 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수위의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 초기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당선인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인수위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먼저 고사 의사를 밝히

기도 하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 부친상을 당했지만,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성공한 인수위’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4) 평가 및 제언

인수위는 실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교적 무리 없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활동을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다만 청와대 이전과 ‘검수완박’ 등 휘발성 있는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인수위의 정책적 역량과 산물이 주목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 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수위임을 감안, 양당 출신들 간의 소통과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채널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출범한 것은 향후 유사한 유형의 인수위 출범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인수위 구성원과 각료 후보자 간의 인적 연속성에서 오는 인수위 기간 중반 이후의 업무동력 약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03. 부위원장실

1) 구성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3월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였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3월 1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향후 5년간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인수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부위원장실에는 부속실장 포함 3인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2) 기본 방향

권영세 부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과 협력하여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이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권 부위원장은 당선인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정부, 그 일을 잘 해내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의 기틀을 닦기 위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가다듬어 왔다. 단순한 나열식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5년 동안 꼭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 ‘성공한 정부의 움을 틔우는 인수위’를 지향하였다. ‘무엇을 해야 하나’에 앞서 ‘무

엇부터 해야 하나'를 고민하였다.

또한 인수위가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이견이 커지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온화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소통과 가교 역할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무엇보다 안정감이 중요했고, 국민의 관심이 당선인과 인수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 발언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감이 상당하였다. 설익은 정책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권 부위원장은 분과별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의 의견을 존중하며 잡음없는 '원팀 인수위'를 만들고자 하였다. 풍부한 의정 활동과 공직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부처의 의견에 경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3) 활동 내용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와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④자유와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권 부위원장도 분과별 업무보고, 간사단회의, 전체회의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전문가 면담, 토론회 참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인수위의 목표와 국정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일자리·물가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 정부조직 개편, 부처 간 업무조정 등으로 인해 자칫 소홀할 수 있었던 민생 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유류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서민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역설하였다. 또한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빵집·분식점·중국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식량 자급기반 확보 등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앞서가는 나라들과 숨 가쁘게 쫓아오는 나라들 사이에서 힘겹



당선인 주재 간사단회의 참석(2022.4.5)

게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성장동력들이 빠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 대책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간사단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마음껏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도 주문하였다.

한국포럼에 참석해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소개하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마음껏 창의와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전략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를 방문하였다. 치열한 기술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AI반도체, 확장현실(XR), 로봇, 친환경전기차 등 기술·산업 동향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KT·SKT·삼성전자·LG전자·기아차 등 주요 ICT 기업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건의를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정체된 대북관계 개선 의지도 피력하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대화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면담(2022.4.21)

표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의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 위한 제언’ 간담회에 참석해 여야를 아우르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공감할 초당적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범지구적 과제인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경제계, 환경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참여시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어려움을 보고받으며 인수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당선인의 공약 중 당장 실현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재청, 한국장학재단 등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회에서의 국정과제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권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성패는 곧 정부의 성패로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적 대통령직 인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인수위 활동 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또한 7개 분과와 위원회, TF 등 다수 조직과 구성원들이 업무중복 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구성원들의 협조 속에 보안사항 누설로 인한



‘2022 한국포럼’ 특별강연(2022.4.26)

문제 발생도 최소화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위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끝이 아니라 새 정부의 시작”이라며 “주어진 여러 난제를 단번에 풀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04. 기획위원회

1)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원희룡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기획위원 5명, 기획위원 17명, 청년기획위원 13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다.

2) 기본 방향

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최초로 구성된 기구로 ①당선인 공약의 이행(국정과제 반영), ②청소년·청년정책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③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범정부 이슈 분석 및 국정과제 반영, ④국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였다.

공약의 이행(국정과제 반영)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정부 출범 이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청년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수위 조직은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각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범정부 과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범정부 과제 중에서 새로운 정



‘이청득심, 오픈 컨퍼런스’ 행사(2022.4.24)

부가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핵심 미래형 과제를 선정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백서에 기록하여 추후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역현안 점검 활동, 선거 당시 정책본부에 접수된 정책 제안의 이관, 기타 시민사회와 소통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전 정부 밸런스 시트’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인수위 최초로 기획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3) 활동 내용

(1) 공약 이행 점검

이상래 기획위원을 중심으로 ‘공약점검TF’를 구성하였다. 권백신·김광수·김영주·박진웅·박찬윤·오효택·진명구·최중하·최주원·한동엽 등 기획위원 및 TF 자문위원들은 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등 공약 이행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였다.

공약점검TF는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101개의 공약을 포함, 총 213개의 공약(772개 세부공약)을 기획조정분과 및 소관 분과와 협의하여 모두 국정과제화 하였다. 공약은 최대한 원안 그대로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공약의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대국민 효과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보완 후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 반영된 공약은 157개, 수정·보완 후 반영된 공약은 56개이다.

지방 공약의 경우에는 당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지방 정부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반영하였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2) 청년기획위원 활동

‘청년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스타트업 대표, 뉴미디어 콘텐츠 PD, 시민사회 활동가 등 각계각층 청년 13인으로 청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획조정분과에 설치된 청년소통TF와 공조하여 활동하였다.

활동 목표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지지를 공식 채널과 플랫폼으로 전환해 임기 중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청년기획위원회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청소년·청년 100인과 함께 ‘이청득심,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청소년·청년 100인의 제안’은 청년소통TF 국정보고에 포함시켜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5월 1일에는 ‘다문화 청소년·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통해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청년기획위원회는 청년이 윤석열정부의 정책 수립단계부터 정책파트너로 참여하는 신개념 청년 거버넌스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년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신개념 청년 거버넌스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는 개인들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청년기획위원회는 특히 윤석열정부에 있어 청년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며, 전 부처 청년정책의 핵심은 시혜가 아닌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범부처 과제

① 기후·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방향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을 팀장으로 ‘기후·에너지팀’을 구성해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과 정책방향 도출에 노력하였다. 조원동·최홍진·조성경·정서용·김홍진 등 자문위원과 함께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를 발표한 2021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16%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 공약(空約)’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언급했고, 기획위원회는 “지난 정부 자산부채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기후·에너지팀은 윤석열정부의 기후·에너지 탄소중립 전략의 새로운 원칙으로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적극 동참 기조는 유지하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윤석열정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비(非)가역적인 탈(脫) 탄소(Irreversible De-carbonization)’의 초석을 놓고, 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든 초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5대 기후·에너지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인구와 미래전략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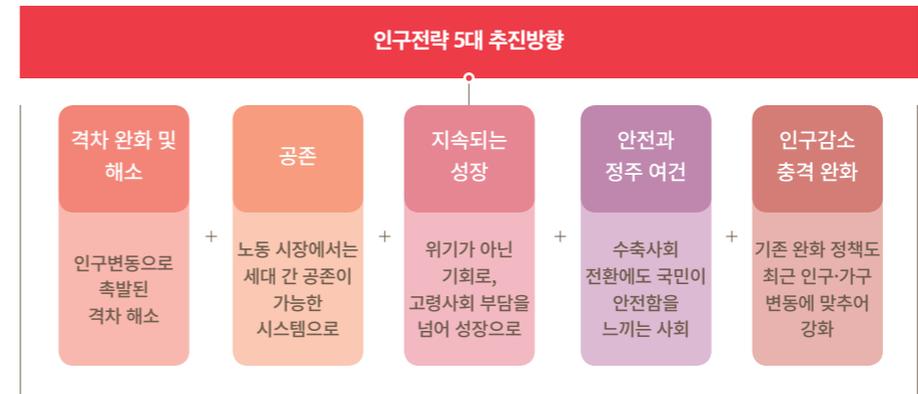
미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구전략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조영태 서울대 교수와 전주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구와 미래전략TF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인구 정책을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 정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만 초점을 둔 결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 둔화에도 실패(2019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1명, 2021년 우리나라 0.81명)했음을 지적하였다.

인구변화는 국가안보와 경제, 경쟁력과 직결되고, 많은 제도와 정책은 생성·정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준비된 미래’와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되는 ‘어찌다 미래’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애 과정은 중앙의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에 연결되어 있어 미래에 적응하고 기획하는 인구전략은 초(超)정부적, 초(超)당적, 초(超)부처적 속성을 갖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 정책은 지금까지의 ‘완화’ 위주 정책에서, 인구변동에 따라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수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5대 인구전략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4) 국민 소통

① 지역 소통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창현 상임기획위원, 김창호·김수철 기획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하며 당선인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방문(2022.4.29)

공약 관련 호남지역 현장점검 현황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지원기관 보고 및 간담회(4.19)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간담회(4.29)
- 광주복합스포돔 공약 추진을 위한 청년 간담회(5.3)

② 정책 소통

대선 당시 정책본부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공식 이관하여 정책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

③ 시민사회 소통

시민사회 간담회(4.23)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지지기반을 확충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안 제시 능력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강화와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5) 정부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지침 작성

인수위 활동을 기업 활동에 비유하면 기업 인수와 유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지표를 담은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는 전(前)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로, 인수위 최초로 시도하는 활동이다.

기획위원회 김상협 상임위원을 비롯해 권신일·박주희 기획위원과 경제2분과 이한상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조철희 전문위원, 김재석·우기승·이승민 등 TF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TF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함께 당 정책국의 ‘문재인정부 5년 평가’ 등 자료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TF는 이전 정부의 핵심지표를 담은 실사보고서 작성 지침을 만들어 정책 실패 등 정부 부실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 정부 책임자들은 부처별로 이전 정부의 공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해 잠재적 우발채무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당선인도 기획위원회 업무보고(4.26)에서 “매우 좋은 시도이며, 부풀려진 실적, 숨은 비리, 부실 채무 등은 기업을 실사하는 회계사처럼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였다.

TF는 인수위 종료 전까지 실사를 위한 18개 부처별 질문지를 구성해 새 정부의 책임자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원회 종료 이후 답변 정리 등 후속 작업은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로 업무를 인계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내 이전 정부의 공과를 기록하여 새 정부 국정 수행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종합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조직이었기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타 분과와 역할 분담에 있어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획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 작성에 참여한 다수의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선거 공약이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분과와 협업

을 통해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로 반영함으로써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인수위 최초로 도입한 ‘이전 정부 밸런스 시트’는 제한된 시간과 인수위 기간 동안 기존 정부의 협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만드는 단계까지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밸런스 시트 작성을 통해 정부 정책의 공과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5. 기획조정분과위원회

1) 구성

기획조정분과위원회(이하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당 및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분과 내부 업무를 분장하였다. 또한 풍부한 국정경험과 특정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위원(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을 위촉하여 국정 철학 수립 및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기본 방향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5대 미션을 정립하였다.

인수위원회 5대 미션

- 1 새 정부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정립
- 2 국정과제 선정 및 추진 로드맵 마련
- 3 정부 개혁방안 마련(디지털플랫폼정부 등)
- 4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 5 잠재적 국정 리스크 발굴 및 대응방안 모색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2022.4.10)

기획조정분과는 ‘새 정부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정립’, ‘국정과제 선정 및 추진 로드맵 마련’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외에 인수위 운영기획 등 정부업무 인수인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인수위 각 분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3) 활동 내용

(1) 인수위 워크숍

기획조정분과는 각 분과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26일 인수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당선인,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및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순민 KT 소장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분과별 토의 및 종합토의가 이어졌다.

(2)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정부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첫 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기획조정분과는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과가 담당 기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업무보고서 작성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기관별 업무보고서 목차	
1. 일반 현황	4.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2. 기관 주요 업무	5. 공약 이행계획
3.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6. 추가 핵심 추진과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일정

날짜 분과	3.22	3.23	3.24	3.25	3.28	3.29	3.30
외교 안보	국방부	통일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	-	-	-
정무 사법 행정	-	-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법제처 소방청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간담회)
경제1	-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
경제2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
과학 기술교육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	-
사회 복지문화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보훈처 기상청 문화재청	-

업무보고는 7일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기획조정분과는 업무보고 전체 일정을 조율하였다. 기획조정분과 내 각 분과를 담당하는 위원을 지정하고 분과별 업무보고에 참여시켜 각 분과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분과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국정과제 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분과 전원이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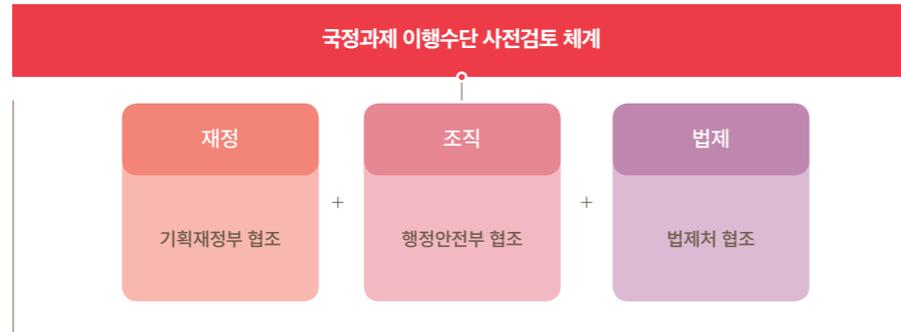
(3) 국정철학·비전 수립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3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국정철학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였다. 당선인,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간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시대정신과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당선인의 국정구상 발언, 참석자 간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각 분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4)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당선인 공약, 중앙행정기관 업

무보고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인수위 각 분과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분과별 국정과제 책임 전문위원을 지정하였다. 3월 28일 책임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선정·작성 지침을 설명하였다. 이후 3월 30일까지 인수위원회 각 분과 검토를 거쳐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안)을 취합하였다. 기획조정분과는 각 분과가 제출한 후보(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4일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전체회의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2차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6대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등 국정과제의 틀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분과와 수시 실무회의 등을 통해 분과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정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수단인 재정·조직·법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국정과제 3차 초안을 마련(6대 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하여 인수위원장 보고를 진행하였다.

4월 26일 인수위원장 보고를 마친 110대 국정과제(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과 보완을 거쳐 5월 3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보고하였으며, 회의 직후 인수위원장이 그 내용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였다.

(5) 인수위 활동 조기정착 지원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분과별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분과별 정책 현안에 대한 대(對)언론 브리핑 시에도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대변인실과 각 분과에 공유하였다. 각 분과의 개별적인 의견 또는 담당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내용이 인수위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선인 주재 간사단회의(2022.4.15)

(6) 분과 간 업무 유기성 제고

각 분과 간의 업무 유기성 제고를 위해 매일 업무상황을 체크하고 전 분과에 공유하였다. 각 분과에서 위원회의 당일업무와 익일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분과 간 연계성을 높여나갔다.

(7) 공식 회의 지원

인수위에서 진행된 공식 회의는 당선인 또는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 위원장 주재 간사단회의 등이 있었다. 기획조정분과에서는 인수위 공식 회의에 보고해야 하거나 논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정리해 각종 회의에 자료로 제출하고 기타 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기획조정분과는 과거 작성된 인수위 백서 등을 적극 참고하여 출범 초반의 혼선을 빠르게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초반에 계획한 일정을 준수하며 큰 어려움 없이 국정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등 기획조정분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일부 과거 사례를 보면 기획조정분과는 다른 분과가 다루기 어려운 융·복합 이슈를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기획한 바 있다. 제20대 인수위에서는 해당 역할을 기획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기획조정분과는 정부업무 인수인계를 총괄하는 역할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기 인수위에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수위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공간이 분리된 분과, 특별위원회 간에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보다 원활한 면대면

접촉이 가능하며,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서라도 우연히 만나 소통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차기 인수위에서는 모든 분과, 특별위원회가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수위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공식·비공식 회의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회의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분과 내, 분과 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분과별 회의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렵다면 가장 많은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기획조정분과 전용 회의실을 별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회의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06. 외교안보분과위원회

1) 구성

외교안보분과위원회(이하 ‘외교안보분과’)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소관 인수업무를 담당할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인수위원(간사)이 분과 인수업무를 총괄하고 김태효 인수위원은 외교·통일 분야, 이종섭 인수위원은 국방 분야 등을 담당하였다.

외교안보분과는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 간에 활발한 소통을 전개하였으며, 어느 한 부처의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와 업무협조 과정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봉사하는 인수위원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선공약의 국정과제로의 전환,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일정 지원 등 인수위 업무 처리에 있어 수많은 내부 회의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최적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기본 방향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근면한 국민성과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화 시대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복잡다단하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경제와 안보의 융복합 현상,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질서·공급망 교란 등 새로운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안보질서의 불안



방위사업청 업무보고(2022.3.23)

정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능동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교안보분과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를 ‘국익을 최우선 하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국정기조로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국정기조를 기초로 18개 국정과제를 도출하였고 79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 3대 국정기조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과학기술 강군 육성

(1) 외교 분야

새 정부 외교정책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요약된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간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에 경제안보 외교의 적극화를 통해 공급망, 무역·투자, 데이터 안보를 구현하고 첨단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충 및 신성장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민관이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주요 검토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정기조	외교 분야 국정과제
글로벌 중추국가	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②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④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⑤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⑥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 ⑦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2) 남북관계·통일 분야

남북관계·통일 분야는 ‘비핵·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과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직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전개하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다. 기후변화, 자연재난 공동 대응, 산림·농업 협력 분야 등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적 접근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남북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였다.

국정기조	남북관계·통일 분야 국정과제
비핵·번영의 한반도	① 북한 비핵화 추진 ②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③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3) 국방 분야

국방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안보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소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2의 창군 수준의 군대 재설계 개념을 반영한 국방혁신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전투 태세를 완비하는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주력 산업화하는 문제 ▲병영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걸맞은 병영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병역의무 이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과제 등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집중하였다.

국정기조	국방 분야 국정과제
과학기술 강군	①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②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③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④ 첨단 전력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⑥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⑦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⑧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3) 활동 내용

(1) 외교 분야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 업무보고(3.24)를 통해 외교 분야 당면 현안인 ▲비핵화 추진 방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핵심 외교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안보 관련, 첨단기술·공급망 분야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포함한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 원조·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에 기여를 확대하는 문제,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외교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새 정부 외교정책 청사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당선인의 외교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3.10)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3.11)에서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미래과제들에 대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당부하였다. 존슨 영국 총리와도 통화(3.14)를 갖고 한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3.16)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한국과 호주 간 실질협력을 강조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3.25)에서는 향후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모디 인도 총리, 푹 베트남 국가주석, 루터 네덜란드 총리,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고,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대사대리), 영국, 걸프협력회의(GCC) 대사 등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우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2022.4.7)

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파견(4.3~10)되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구상을 전달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구축하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도 파견(4.24~28)하였으며,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외교안보분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한한 미측 실무자들과 의전·행사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성과 있는 합의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전개하였다.

(2) 통일 분야

통일 분야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보고(3.23, 3.29)를 시작으로 지난 정부 대북·통일 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와 실천계획 도출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통일부 업무보고가 있는 다음 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3.24)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지만, 외교안보분과에서는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재난 긴급구호, 영유아·임산부 영양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년 간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 출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과 심리치료와 법률적 지원 서비스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공약사항인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추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통일부의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정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 국방 분야

국방 분야는 3월 22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시작으로 3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외교안보분과는 유관기관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국방 분야 4개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수 차례 토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방안이다.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전략, 사이버·AI·로봇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방안,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 추진방안, 군 장병들의 인공지능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I에 기반한 유·무인 전투체계를 전력화하는 조직개편과 새로운 획득체계의 정립 방안도 검토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국방혁신 4.0' 추진이다.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병력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물리적 변화에 역점을 둔 반면, '국방혁신 4.0'은 국방예산의 효율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병역자원의 급감 등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 영역에서의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당선인에게 건의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의 강화방안 마련이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대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을 갖추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압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네 번째 과제는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는 당선인의 공약이자 신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당선인은 4월 7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였다. 한미 군사 동맹의 신뢰를 복원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직접 표명하기 위한 행보였다. 당선인은 사령부 내 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하여 한반도 전구작전 관련 브리핑을 받고, 한미 연합군사령관 등 주요 참모들과 연합 방위태세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 기지의 한미 연합사단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당선인은 한미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4) 인수위 워크숍(3.26) 참석

당선인이 참여한 인수위 워크숍에서 외교안보분과는 대한민국 국익의 핵심 이슈인 경제안보를 주제로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에서는 한미 외교·경제 2+2 회의체 구성,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쌍방향 민관 협력, 신홍안보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외교안보분과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차질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외교안보 사안은 국가 안위와 국민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외교안보분과는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일사불란한 원팀 정신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자세로 토론·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관계부처의 업무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인수위 여타 분과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 재정계획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워크로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마련하였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새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데 확고한 기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제·사이버 안보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인수위 활동 기간 중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점검 기회가 적었음은 아쉬운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국정에 임하고자 한다.



07.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1) 구성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이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11명, 실무위원 13명과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는 국정운영, 국가행정, 사법정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등 15개 기관 및 부처의 기능과 성과를 분석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무, 사법, 행정 등 3개의 소분과로 나누어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주·부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 기본 방향

(1) 활동 목표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주권과 행복을 최우선시하여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였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는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법집행의 공정성 확립,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국민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는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방안,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권력형 성범죄, 흉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 감사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 주요 현안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2030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국민생활 및 국정운영의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2) 운영 방침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분과 산하 정무·사법·행정 3개 소분과에서 각 소관 기관과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 및 당선인의 공약·발언 분석, 현안 파악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각 소분과의 전문위원·실무위원의 논의와 담당 인수위원의 검토를 거쳐 준비된 분과별 제안은 다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인수위원 및 담당 전문위원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리되었다.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2022.3.29)

3) 활동 내용

(1) 업무보고

①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3.29)에서 새 정부 출범 전후 100여 일간의 국정상황·리스크 관리, 새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 이행방안, 사회갈등과 현안의 신속한 해결방안, 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향,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인수위원들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TF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청년정책 등 향후 핵심 정책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고,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시 각 부처별 관련 조직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업무평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하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질적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산학연·지방대학 등과 공동연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업무보고 이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관련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무사법행정분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청년정책을 독립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타 분과에서 개별적으로 작업 중이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과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획조정분과 협의를 거쳐 청년정책을 20개 약속 중 하나인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로 그 수준을 격상하고, 국정과제도 당초 1개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3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윤석

열정부 출범에 맞추어 새 정부의 청년정책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② 감사원

감사원은 업무보고(3.25)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특히 일선 현장과 소통강화 등을 통해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인수위와 감사원은 공직감찰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방안을 검토하였다. 감사원은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감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감사에 대한 신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기법의 고도화 등 감사원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③ 법무부

법무부는 업무보고(3.29)에서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공정한 법집행 등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달리 법무부는 현행 수사 시스템의 수정과 정비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법무부도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공약이행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이 그 전날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부득이 3월 29일로 연기되었다.

④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업무보고(3.24)에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당선인의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흉악범죄 등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국민안전과 피해구제 강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대검찰청 측에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3.24)에서는 핵심 국정 어젠다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 등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 국민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



기반의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확실한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 권한 및 자주성 보장, 정부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 등이 보고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경북·강원 산불, 코로나19 등 관련 피해지원도 신속·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인수위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 및 감사원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시민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법·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과 지방시대 구현방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논의와 통합되어 관련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업무보고(3.25)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부, 유능한 공직사회’를 위해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직 인사 실현방안을 보고하였다.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범정부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재산공개서비스 통합 등에 대해 보고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 채용 문화 정착 방안,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인수위원들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더라도 청년들의 공직진출 기회는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 공직 채용시험이 공직사회 입문 절차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직업부문과의 연계성 확대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⑦ 법제처

법제처는 업무보고(3.28)에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무사법행정분과와 법제처는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계획 수립과 신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약 이행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민생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만으로 실천 가능한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하게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수위원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획일적 규제 정비방안,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조하였으며, ‘신발 속 돌맹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신속히 제거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적극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⑧ 경찰청·소방청

경찰청은 업무보고(3.24)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인수위원들은 집회·시위 주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속도 5030’이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을 감안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용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를 통해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 다원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방청은 업무보고(3.28)에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소방청의 대응전략과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등을 보고하였다. 인수위원들은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방안,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과 첨단장비 개발·보급, 국가직 전환 관련 보완대책, 소방지휘관의 역량 강화 및 현장대원 우대정책,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들을 향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⑨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보고(3.25)에서 반부패·청렴정책과 고충민원 해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 위상에 비해 낮은 청렴도, 부패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폭증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부족 등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지자체와 민간의 청렴도 제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방안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고위공직자 호화 관사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인수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을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하고, 실태 조사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보고(3.25)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새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공공·금융 분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혁신방안,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국민 통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개인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영상·생체정보 등의 합리적 활용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보고(3.29)에서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따른 인권 보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역량 제고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혐오와 차별의 극복’, ‘사회적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노동인권 존중’ 등 새 정부에 10개의 인권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수위원들은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구제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탈북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 간담회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담회(3.30)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와 선별적 입건, 공수처의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였고, 공수처 차장 역시 인수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3) 현장 방문

①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4.12)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등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집행 현장 전반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정책을 점검·보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그 동안 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범죄 예방정책 전반을 보고받고,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도 확인하였다. 현장을 점검한 인수위원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들의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관 또는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OECD 평균에 이르렀지만,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나 전자감독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속히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4.12)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운영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112신고 처리 과정 등 경찰의 치안상황관리 시스템 전반을 참관하였다. 특히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위치를 통한 긴급신고부터 위치 확인, 지령, 현장 출동·도착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수위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스마트 위치를 작동한 다음,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 과정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안철수 위원장 및 인수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체계 전반을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나 장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방문(2022.4.12)

③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4.14)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코로나19 관련 119구급활동 현황과 현장 소방대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국민 밀착형 구급서비스 제공 등 소방정책 개선을 위해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였다. 인수위원들은 119신고시스템 및 응급의료상담 과정과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청취하였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영등포 고시원 화재에서 보았듯이 취약대상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책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대국민 홍보 활동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31일 '국민이 주인인 법무, 검찰'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권 강화'가 아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위하여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스쿨존 야간 가변속도를 제한하는 '속도제한 탄력운영 방안'(4.5),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추진 계획(4.11)을 발표하여 많은 국민의 기대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4.15), 119구급대 응급처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4.20)을 잇따라 발표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4.19),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4.26),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인력혁신안(4.27)을 통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각종 피상범죄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4.28),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4.29)을 발표해 사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추진 의지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하여 3차례(4.13, 4.19, 4.21)에 걸친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범죄를 방치하는 헌법파괴행위, 입법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검손하게 국민을 받들겠습니다.”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치 아래 인수위원들은 한정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상식, 국민 안전,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권위보다는 실용과 실무, 종이 보고서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윤석열정부 5년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타 분과와 마찬가지로 청년보좌역들이 배치되어 청년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 수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각 부처 업무 및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등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많은 정책들을 도출하였다. 인수위 구성 초기 분과에서 설정한 목표 방향에 따라 형사사법 개혁,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범죄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 2030 청년들의 희망 실현 지원, 하위직급 경찰관·소방관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 주요 공약 사항을 정책화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인수위 활동 기간으로 인해 국민의 삶에서 우리나라는 생생한 목소리와 민생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에서 마련한 청사진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는 실제 국민의 삶과 현장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08. 경제1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1분과위원회(이하 '경제1분과')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11명, 실무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수위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중요 사항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전문위원과 실



현대기아자동차차남기술연구소 방문(2022.4.8)

무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세분화된 소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분장은 소관 부처별 분장 및 거시경제·조세·예산·금융·공정거래 등 정책 주제를 고려하여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활동하였다.

2) 기본 방향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경제1분과는 이러한 당선인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하여 경제비전과 정부의 역할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수행하였다.

소관 부처의 업무를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 관점에서 평가하고 국정과제를 선정·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국내외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였으며, 전체 공약 실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 번째였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방향에 더하여 몇 가지 업무 수행 방향을 정하였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의 큰 틀 안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의 세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공약들이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조 아래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시장 논리에 반하지 않는 주택공급과 함께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동산 세제 등을 정상화하는 등 주요 주제별 현안과 개선방안을 점검하였다.

또한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

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의 주제를 함께 고민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방향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디지털·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통받는 현실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과 재원 마련, 금리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하였다.

소요 예산의 추정과 조달방안의 경우, 새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점과 '공약이행은 재원대책을 수반한다'는 두 원칙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천과제 원칙으로 하였다. 동시에 조세정의 실현을 당선인이 강조한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에 포함하였다.

3) 활동 내용

국정과제 선정·구체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소관부처 업무 인수 및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부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각 부처의 기존 주요 정책을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비추어 평가하고, 지속 추진할 정책과 보완·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처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부처별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안' 등을 판별하여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선인의 공약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였다.

업무보고서 작성 등 각 부처의 인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처별 보고에 앞서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고, 업무보고 이후에는 사안별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제1분과 소관업무와 다른 분과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분과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연석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경제1분과는 공정거



래위원회와 공정경쟁의 확립과 규제혁신 등 공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자율성을 반영하는 신속한 M&A 심사 방안 및 혁신 효과를 고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집행 등 시장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여 연쇄적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세계경제 동향과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 및 금융·감독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2년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혁신 지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방안 등 공약 이행과제와 '금융시장 현안 및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갖고 합리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분야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논의 과정과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생활밀착형 대국민 정책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첫 번째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발맞춰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적극 공유' 방안을 홍보하였다.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국가 현안문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복지정책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와 국세청을 중복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소관 부처에서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방안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로 국민 거주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여 당선인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한다는 내용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거래에 대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해외직구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인수위 부동산TF 전체회의(2022.3.30)

배포하였다.

추가적으로 통계청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공약에 발맞춰 정부기관별로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통계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며 민간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디지털·데이터 전환을 지원하는 'K-통계플랫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제1분과는 부모의 자산규모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도약계좌TF'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및 가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금융위원회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플랫폼 업체 정책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국세청과는 청년들의 근로장려 방안과 산불피해 국민·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모든 경제현안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여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자동차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동차산업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현황 공유,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추가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민과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의견청취 후, 경제1분과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등 첨단기술 융합의 결정체이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1분과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납품단가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모범계약서 마련 및 보급을 통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 공정거래 이행 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한시배제 관련, 현 정부의 시행령 개정 불가 입장 천명에 따라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를 새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신속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설명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등을 통한 재정준칙 마련 등을 협의하였다.

금융위원회와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향을 논의하면서 미래 혁신 분야·핵심기술 R&D, 기존 사업의 재편 및 구조 조정 등에서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를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플랫폼 규제 관련 정책 방향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긴축 기조 등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국고채 시장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도 마련하였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주식 관련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주식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경제1분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회도 추가적으로 개최하였다.

경제1분과의 다양한 현안 주제 등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성과 함께 경제1분과에서 챙겨본 과제는 복지 부문이다. 국내 고령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 경제1분과에서는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총연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논의하였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세부담 적정화', '디지털 금융 혁신 및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촉진', '금융선진화 및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경제1분과 소관 국정과제 13개를 선정하였다.

경제1분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언론 및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경제 분야에 제안된 2,100건의 국민의견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당선인의 공약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국민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는 청년층일수록 그 체감도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청년층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시중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를 우대하며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모기지 역할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하여 국민이 주거 걱정 없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중심이 되어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13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한 다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세부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경제1분과에서 선정한 국정과제를 새 정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국정과제 선정과 병행하여 경제1분과는 수차례 코로나특위에 참석하고 코로나특위와 협업회의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자금 확보,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손실 보상제 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산업전략 재편을 통해 역동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1분과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분야 국정과제 선정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당선인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였고, 공약사업이 아닌 즉흥적인 정책개발은 가급적 지양하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정책은 과감하게 채택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과거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국정과제로 도출하여 일부 혼선을 야기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낮은 자세와 조용한 인수위 활동을 지향하면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의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1분과의 활동과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세종으로 직접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찾아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은 약 6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정과제 마련, 공약 이행사항 점검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09. 경제2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2분과위원회(이하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제2분과는 산업·일자리 등 실물경제와 주거·교통·먹거리 등 국민생활을 담당하는 분과로서,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국토교통,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2) 기본 방향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당선인이 강조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청년을 포함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을 진단하고, 당면 현안 사항과 대응계획, 향후 과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통상자원 분야는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하에 역동적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규제 혁파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 통상전략도 수립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 관점에서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전략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 분야는 삶과 경제의 터전이 되는 '공간(Space)'과 '이동(Mobility)'을 함께 소관하고 있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상황 이동 지원을 위해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 등 생활안전을 높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 활동을 책임지는 영역이다. 수출입

물류, 수산물 먹거리, 국민 여가·안전 등 국민 생활 밀접도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 물류대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어촌 소멸, 해상풍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다. 인수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선인이 약속한 '신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확보, 지속 이용 가능한 해양공간 창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소기업 분야는 당선인이 2022년 2월 14일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등 중소기업계와 대화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발언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당선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기술침체 근절 및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마련에도 노력하였다.

3) 활동 내용

(1) 농림축산식품 분야

향후 5년간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이슈별 또는 이해집단과 간담회, 인수위원·전문위원·자문위원들 간의 수시토론 등이 있었다.

먼저 3월 25일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첫째,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방안, 둘째, 청년농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환,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방안, 셋째,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3월 28일 실시된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는 첫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 확대 및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 둘째, 탄소중립 농업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보급, 셋째, 농촌공간데이터 수집과 생활권 진단기준·지표 개발과 여성농업인의 안전·복지 기술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1차 산업에 집중된 R&D 및 기술지원을 2차, 3차 산업과 연결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정부 주도의 R&D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고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되었다.

3월 28일 실시된 산림청 업무보고에서는 첫째,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방안, 둘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우수수종 도입,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및 임업 농가 지원강화 방안, 셋째,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숲 체험 프로그램 도입과 도시숲 조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업계의 곡물 수급 상황과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청취하고 제기된 사항을 정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또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주재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수연중앙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계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농어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탄소중립·ESG를 위한 산림 부문 업무보고, 농업직불금 개편방안 논의 등 주요 이슈별로 토론회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등이 있었다.

(2) 산업통상자원 분야

산업통상자원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3.24), 특허청(3.28)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과 평가, 공약 이행계획 및 추가과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난 5년간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대외 충격 속에서도 제조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산업-통상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하고 우리 실물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등 성장잠재력의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공급망 등 경제 안보의 강화와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경제2분과의 인수위원, 전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부처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 약 1개월여 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였다. 분야별로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3.23, 4.4 등), 산업기술 R&D 체계를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4.5)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래차·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현대기아차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4.8)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022.3.25)

하였다. 노후산단 재구조화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융복합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4.7, 4.18 등). 에너지 분야는 탈원전 정상화를 위한 현안 논의(3.31),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간담회(4.5), 소관부처 에너지 정책 현안 청취(4.6, 4.12, 4.21), 전력시장 개선 간담회(4.13), 원전업계 회생을 위한 산업계 초청 간담회(4.13, 4.19)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가다듬었다.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 및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이 기자단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였다. 4월 12일에는 인수위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방안’을 발표하였다. 4월 25일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제조업의 디지털화·그린화,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발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을 브리핑하였다. 같은 날 왕윤중 위원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다. 4월 26일에는 고산 위원이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민간중심, 시장지향적 혁신 방안’을 브리핑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 분야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신(新)산업통상전략,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신산업, 산업기술 R&D 혁신,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 세계 박람회 개최 등을 주제로 한 8개 국정과제를 도출하였다.

(3) 국토교통 분야

3월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국토교통 분야 업무 전반을 파악하면서 250만 호 주택공급 계획, 산업단지 등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 방문(2022.4.21)

안 등 새 정부에서의 국토교통부의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29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최첨단·친환경 미래전략도시 실천전략과 민간투자활성화, 공공지원을 통한 새만금 개발 본격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3월 31일 국토교통 분야 디지털 플랫폼 추진방안과 자율주행차 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지도 구축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4월 1일에는 20여 개 국토·교통 분야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 건의 등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4월 5일에는 국토교통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국토·주택·건설·교통·항공·도로·철도 등 분야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월 6일에는 인수위 청년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4월 7일에는 노후산단 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항공운송·물류·정비 및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강국 도약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4월 8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요구에 대한 검토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월 19일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 이동편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앞서 4월 12일에는 전국 철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싱구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철도국과 인수위원들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 15일에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배터리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18일에는 노후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21일에는 기획위원장, 인수위원 등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게 될 서울·고양·성남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GTX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망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4월 25일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핵심축인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모빌리티 대전환 관점에서 제도정비,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을 담은 자율차, UAM 등 '모빌리티 추진방안'을 왕윤중 위원이 발표하였다. 4월 26일에는 당선인이 인천시를 방문해 GTX,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 인천시 관내 교통 공약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어 5월 2일에는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인근 GTX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GTX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사 안전을 당부하였다. 또한 같은 날 1기 신도시 중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노후한 평촌의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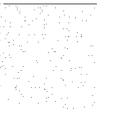
(4) 해양수산 분야

3월 25일 해양수산부, 3월 29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해양수산 분야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자리에서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물류위기 극복, 수산업과 어촌의 기초체질 강화,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운·물류 분야는 당면 현안인 글로벌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나아가 해운 재건을 넘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노력하였다. 선박·터미널 등 인프라 확보 지원과 함께 선사·수출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점검하였다.

수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어촌의 소멸 위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CPTPP 가입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방안 마련과 함께 어촌의 소득·복지·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경제2분과 주관으로 4월 4일 해양수산부와 수산업·어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도입, 과학적인 자원 관리와 스마트양식 기술 보급 확대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2분과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들과 갈등 사례를 예로 들며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상생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4월 1일과 4월 13일에는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전환, 청년 창



업·투자 활성화와 스마트·자동화 향만을 비롯한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추가로 회의를 열고, 논의된 사항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해양영토 수호와 관련해서는 4월 6일 해양경찰청과 추가 협의를 통해 디지털·위성 정보를 활용한 해상경비 활동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해양종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여 주변국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어촌·해양 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5)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선인의 ‘중소기업은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계 간담회, 업무보고, 회의·브리핑 등을 진행하였다.

먼저 3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상생협의회 설치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3월 24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이때 부처와 인수위 간 그간의 정책평가, 당면 현안, 공약 이행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민간 주도로의 정책 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등이 핵심 의제였다.

4월 1일에는 첨단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등 향후 창업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의 제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제조창업 활력 회복, 융·복합 창업 확산,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등 자생적으로 스케일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4월 7일에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과 함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형 선도모델 창출, 공급기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종합 플랫폼(DTaaS) 구축 등이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시되었다.

4월 11일에는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업·벤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극초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 중 민간 주도형 예비창업 프

로그랩 신설, TIPS(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확대 등은 4월 26일 발표된 ‘민간 주도로 벤처·스타트업 판, 더욱 키운다’ 브리핑과 중소기업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공정·상생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4월 19일 경제1·2분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완화’라는 주제로 브리핑과 병행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협협상 요건을 완화하고,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당선인 공약은 10개 공약에 50~60여 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 업무보고, 이해집단과 협의, 인수위원·전문위원 등 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 아래 3개의 국정과제와 16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국정과제 작업이 이루어져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가, 이해집단 등과의 토론 및 소통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기술혁신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전략들이 당초 목적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교육 등 각계각층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관계부처 간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지속 등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통상 전략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 분야는 250만 호+a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생활안전 확보 등 주거·생활 안정 등 기본적인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며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방안과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정과제별로는 세부 4~6개의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세부과제별 연차별 로드맵도 마련하여 국정과제의 이행력을 높인 측면이 있으나, 국토·교통 분

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만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업·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다. 어업인의 소득·복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기본형 직불제 도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였다. 굳건한 해양영토 수호라는 당선인 약속 이행을 위해 어업관리 조직을 보강하고, 해경 경비함정과 장비, 데이터 기반 해상경비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해운·항만·수산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해양수산 디지털 경제 구현도 촉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현장을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인수위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는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임대료 및 부가세 부담 완화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분야는 기존 기업승계 제도를 기업승계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확산, 모태펀드 대폭 확대,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 대학 창업 활성화 등 한층 성숙 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기술 침해 제재 강화,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 권한 확대 등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과제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정책 방향으로 반영하였다. 인수위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된다면, 오랜 시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미래를 위해 준비한 혁신성장 과제들도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속히 집행되어 중소기업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1) 구성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이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인수위원 3명,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 전문위원 13명, 실무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타 세부적인 활동은 전문성에 따라 과학기술·디지털, 교육, 미디어 등 3개 분야와 디지털플랫폼정부TF로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과학기술유공자 간담회(2022.4.21)

2) 기본 방향

(1)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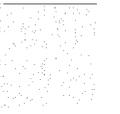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 맞서 경제안보의 중심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전략 분야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새로운 질서와 변화가 일어나고, 신산업·신기술 선점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및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내부토론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현 상황을 객관적 시각에서 진단·평가하고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교육 분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신(新) 양극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창의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꿈을 살릴 수 있는 평생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주요 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담기 위한 간담회·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추진하여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당선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3) 미디어 분야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동시에 산업적 가치도 크다. 이에 따라 미디어 분야는 당선인 공약인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활동하였다.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정책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위한 국정 과제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활동 내용

(1)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정부 업무보고(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 및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해 새 정부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것에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성과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연구개발(R&D) 시스템과 투자전략 수립,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력·인프라·인재·규제 여건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보장 등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3월 29일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TF(팀장 고진)’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들과 함께 연이어 진행된 회의(4.5), 워크숍(4.6~12), 토론회(4.8~21)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기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간담회(3.31), 한국연구재단 현장 간담회(4.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현장방문 간담회(4.11)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설계, 국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방안,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임무 중심 R&D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하였다.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주,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며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 위주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꾸릴 수 있었다.

우주 분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부족했던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한 공약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민

간 우주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세부적인 방안까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우주 강대국으로의 진입 의지를 다졌다.

미·중 간 기술패권의 본질이기도 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 메모리 반도체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전문·실무 인력 양성 및 종합연구소 체계 구축 추진 등의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AI반도체 등을 망라하는 ‘디지털 초일류 국가’ 분야(4.7, 1차), 6G·양자 등 ‘초고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4.7, 2차),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4.12,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남기태 인수위원 등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을 비롯하여 삼성리서치·LG AI연구원·KT융합기술원 등 대기업 연구소,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 퓨리오사AI·에치에프알(HFR)·베스핀글로벌·블록코 등을 포함한 혁신기업까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양자, 블록체인 분야 연구를 이끄는 학계·연구계, 전문기관 인사들과 함께 디지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발제 이후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각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광주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방문하였다. 세계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현장에서 지역산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창업지원 등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권영세 부위원장과 박성중 간사, 남기태 인수위원 등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2022 월드IT쇼’를 방문하였다. 국제적으로 치열한 기술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AI반도체, 확장현실(XR), 로봇, 친환경전기차 등 기술·산업 동향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KT·SKT·삼성전자·LG전자·기아차 등 주요 ICT 기업 대표 등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날 박성중 간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을 확실히 하면서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현행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전 설계수명 만료 전에 미리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새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 신청을 최대 8기를 추가하여 18기를 신청할 수 있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비정상적인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디지털 국가전략’,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국가전략기술 R&D’, ‘4대 국민밀착형 우정서비스’, ‘디지털 바이오’ 및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2022 월드IT쇼' 방문(2022.4.20)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노력으로 ①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②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③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④민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⑤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사회의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⑥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등의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경제2분과와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도출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주권시대를 위해 지역 혁신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젠다를 골고루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교육 분야

3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정책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당면현안 및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과 추가적인 지역공약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통해 변화에 유연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가정의 교육·돌봄 부담 완화 및 모든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대학 중심의 발전생태계 구축 및 생애 전주기 역량 개발 기회 확대, 민관협치·부처협업 체계에 입각한 범국가 차원 미래인재 양성 및 사회적 난제 해결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후 교육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공약 이행계획에 담기 위하여 각 현안 전문가 및 관련기관 실무진을 초청하여 총 22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간담회(3.31)에서는 SW·AI 교육연구회 소속 초·중등 교사, 교육공학, 컴퓨터교육 전공 교수, 관련 기업대표 등을 초청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의 첫걸음은 초·중등 교육과정 내 인

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안팎에서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디지털 배지 개발·운영 의견수렴 간담회(4.20)에서는 학교 내외 다양한 디지털 배움과 경험의 결과를 배지 형태로 부여하여 취업에 활용하는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대학자율 및 인재양성 간담회(4.1)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대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대학 규제완화 간담회(4.5)에서는 산학협력단협의회장, 주요 대학 기획처장 등 고등교육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교육체제 등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에 유연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대학 중심의 발전생태계 구축 및 생애 전주기 역량 개발 기회 확대, 민관협치·부처협업 체계에 입각한 범국가 차원 미래인재 양성 및 사회적 난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인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변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평생 직업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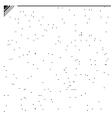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관련 간담회(4.12)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재직 교사, 대학교 입시 담당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시·도 교육청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고교학점제의 점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고, 대입의 공정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4.13)에서는 유아교육과·아동학과 등 관련 학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등 유관기관 전문가 및 유치원 원장 등을 초청하여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한편 4월 8일에는 AI·디지털 기반 미래 대비 교육의 혁신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AI 교육 혁신을 이룬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서울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에 따른 돌봄·기초학력 격차 완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①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②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③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④교육국가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⑤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의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3) 미디어 분야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3월 2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 간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보호·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 개선, 가짜뉴스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도 논의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손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3월 30일부터 3주간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언론과 방송, 인터넷과 통신 관련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 기업 등 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시작으로 EBS, 종합편성채널, 종교방송사, 한국방송협회, 지역민영방송협의회, 한국IPTV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등 주요 방송사·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였다. 방송사·단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디어 산업 현황과 함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낡은 규제를 지적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중소방송사는 지역성 강화 지원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OTT 기업 및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국내 OTT 산업의 현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OTT 업체는 대규모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통신사업자연합회 등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및 통신 등 ICT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양한 언론·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디어 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개편,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필요성,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 현업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다. 4월 26일에는 박성중 간사와 전문·실무위원들이 크리에이터의 제작·창업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하였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촬영 등을 참관하고 플랫폼 기업,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 미디어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우수한 청년들이 앞다투어 도전하고 성공하는 대표 분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극적·폭력적인 콘텐츠, 가짜뉴스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포털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에서는 포털, 동영상 등 미디어 플랫폼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며, 미디어 플랫폼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정보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며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4월 26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성장 지원과제, 4월 28일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추진, 5월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등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민·관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성장동력 발굴과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혁신이 진행되므로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짧은 활동기간 내에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소통 노력에 집중하였다.

국정과제는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들이 목표한 바 대로 실현되어 민간의 혁신 의지와 강고히 결합한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 ‘디지털 강국’,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1) 구성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이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인수위원 4명, 전문위원 10명, 실무위원 10명, 실무요원 1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환경, 문화, 여성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하였으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기상청이 있다.

위원들은 소관 분야에 따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큰 틀을 잡아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기본 방향

(1) 활동 방향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당선인이 강조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최대 가치로 두면서, 사회변화와 저출생·양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의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시장의 넓은 관행과 제도 혁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탄소중립 이행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및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추진 ▲가족과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및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마련하였다.

국정과제를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활동 목표

사회복지 분야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과 일자리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두툼한 지원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과 필수·공공의료 확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백신·치료제 기술 확보와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의 가치는 존중하면서 기업의 역동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넓은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마련하였다.

보훈 분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을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현장 간담회(2022.4.25)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이라는 당선인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과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중점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녹색기술과 산업, 순환경제 촉진을 통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탈탄소 전환도 집중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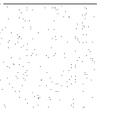
문화 분야는 윤석열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공정한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K-컬처 초격차 산업화를 달성하고,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을 위해 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 분야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와 동행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 남녀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분과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활동 내용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4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5일 환경부·여성가족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9일 국가보훈처·문화재청·기상청 등 10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하였다.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외부전문가, 부처 관계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 분야는 3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공약 이행계획과 함께 연금개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활성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 실·국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10차례 이상 개최하였다. 사회서비스 혁신,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바이오·헬스 육성,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제도 등 폭넓은 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노력도 기울였다. 3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월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권익향상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4월 6일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사회를 만나 필수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월 25일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코로나특위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하였다. 당선인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당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방문 결과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3월 28일에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코로나특위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등 단기과제를,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등 중장기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코로나특위에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참여하여 코로나특위 활동과 국정과제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3월 2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료제품 공급, 방사능 등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수입식품, 급식 등 식품안전 이슈와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 규제과학 발전방안, 혁신제품 품질안전관리 선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등에 대한 시민 제안, 업계와 학계의 GMO 표시, 건강 위해요인 관리 등 현장 의견과 정책건의를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였다.

3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 평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지원방안,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방안,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주문하였다.

3월 30일 노사단체와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노총으로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권리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의 과제를,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받았다.

3월 31일부터 업무보고 시 논의되었던 핵심적인 과제, 노사의 제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담당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정책, 노동정책, 산업재해 예방·보상 분야별 검토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연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7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19일에는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4월 22일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안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와 사업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보호 입법 과제 등 배달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훈 분야는 3월 29일 업무보고 이후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조성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방안 등 주요 보훈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 및 해당부처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실현가능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3월 25일 환경부 업무보고, 3월 29일 기상청 업무보고에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등 유관기관 업무보고, 분야별 심층 검토회의,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였다.

4월 6일에는 환경 분야 국정과제 중 기후탄소 분야와 물 관리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하수도 및 하천 등 물 관리 인프라를 선진화하여 물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다.

4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분야별 산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4월 12일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발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관계자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기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탄소 감축 성과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탈탄소 경제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월 13일에는 화학물질 관련 기업, 전문가와 함께 신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합리적 화학물질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간의 획일화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화학 분야는 이해관계자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4월 19일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회수·선별, 재사용, 재활용, 열분해 등 전 물질과정의 대표 기업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한 선별시스템 개선과 열분해 활성화 등 신정부 국정과제의 이행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주요 환경과제별로 유관기관과 간담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소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들은 환경 분야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문화 분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3월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정·상식·실용에 기반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각 부처 담당자와 수시로 회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아래 문화정책,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과 약 50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가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문화정책 및 예술 분야는 4월 4일 대중음악 분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7일 문화계 원로, 4월 10일 상영관 협회, 4월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실연자 협회 및 방송연기자 노조, 4월 12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담아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지원,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을 추진하여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4월 8일 콘텐츠 제작유통업계, 4월 14일 영화관, 제작사, 감독업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면담 후 브리핑(2022.3.29)

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 육성, 미디어·콘텐츠 콘트롤타워를 설치하여 'K-컬처 초격차 산업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5월 4일 공연예술센터를 현장 방문하였다.

체육 분야는 3월 31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4월 12일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전문체육지원 강화,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4월 24일 현장 방문으로 진천선수촌 등을 방문하였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업계·학계·협단체가 참여하는 관광 분야 간담회를 3월 31일, 4월 1일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월 24일, 4월 19일에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 개발, 4월 12일에는 면세업계와 호텔업계 현안, 4월 15일에는 명품 제주 관광자원 개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 광역관광 개발,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다.

문화재청 분야는 4월 6일과 8일에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약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재 체제를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문화 분야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대국민 약속으로 확정하였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소통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지면서 여성가족부 본연의 기능을 보다 발전적으로 실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29일에는 여성단체대표단과 만나 부처 개편과 관련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인권·다양성 관점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부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청취하였다.

4월 1일에는 청소년·가족 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면담을 통해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다문화 가정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곧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교환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약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다.

4월 21일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성폭력 실태에 대하여 현장에 착근한 목소리를 듣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 평가 및 제언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다양한 업무 지식을 갖춘 많은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정책을 완성해나가는 작업을 밀도 있게 진행하였고,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최대한 담아 내려 노력하였다.

보건복지 분야는 외부전문가, 부처, 이해관계자, 인수위 타 분과와의 협의를 거쳐 10개의 국정과제를 마련(①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②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③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④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⑤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⑥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⑦안전하고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⑧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⑨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⑩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였다. 국정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는 지난 5년간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하였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논의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과제가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 분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책임보훈을 실현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환경 분야는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국민건강·안전 보호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는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 수단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축적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을 발굴하였다. 환경 분야 정책은 국정과제 수립 이후에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전통문화·콘텐츠·미디어·저작권·종교·관광·체육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짧은 인수위원회 기간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정 과제와 실천과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 분야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실효적으로 실천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①양성평등 실현, ②가족정책 사각지대 해소, ③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같은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출하는 등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부처 개편 논의와 병행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들이 국정과제 내에 밀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향후 정책집행의 기본방침이 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였다는 데서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기 인수위에서도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이 진행될 경우 소통과 공론화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효과성을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목표하여 분과가 담당할 공약과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결론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2. 대변인실

1)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인수위의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대언론 창구 역할로서 대변인실이 꾸려졌다. 대변인실은 대변인 1명, 수석부대변인 2명, 부대변인 5명을 비롯해 공보행정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실장·공보실장·지역미디어실장 각 1명, 실무위원 3명, 실무요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신용현 대변인 정례 브리핑(2022.3.22)

(1) 대변인단

대변인단 정례 브리핑은 인수위와 언론의 공식 채널이자 대국민 소통창구 기능을 담당하였다. 문재인정부로부터 국정 전반의 업무를 인수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는 인수위의 업무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다.

① 대변인

대변인은 대변인단을 지휘하는 리더 역할에 이어 인수위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논평·일문일답 등의 방식으로 대언론 창구 대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다. 대변인은 매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 업무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며 양질의 취재지원을 능숙하게 주도하였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인수위 정책에 대해서는 정제된 브리핑과 신중한 답변으로 인수위의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② 부대변인

부대변인들은 7개 분과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각종 현안·공식 입장과 관련해 오전·오후 상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국민 정책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참석하는 간사단 회의부터 분과별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논의내용을 정리하며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매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인수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출입기자들의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응대하여 인수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변인 행정실

대변인 행정실은 행정, 공보, 지역 등으로 업무를 전문·세분화해 3실장 체제로 실무진

과 긴밀히 숙의하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3실장은 오랜 정당 생활, 청와대 근무, 언론인 출신 등의 각자 다른 축적된 경험을 살려 대변인실 안착에 기여하였다. 행정과 공보업무를 병행한 실무진들은 인수위 분과별 정책홍보 브리핑 서포트 및 회의 일정 공지, 인수위원들의 현장방문 취재지원, 언론인들의 불편 민원을 수렴하는 등 인수위 출입기자단의 쾌적한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인수위 활동 내용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기본 방향

대변인실은 인수위 진행 상황과 활동,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해 기자들이 올바르게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1) 올바른 정책홍보 지원

① 대변인단

대변인은 매일 오후 2시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정례 브리핑을 가진데 이어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충실히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수석부대변인들과 부대변인들은 각자 업무분장된 간사단·분과별 모든 회의에 참석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감을 담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질문을 제한 없이 소화해내고 이어 백브리핑에도 충실히 임하는 등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였다.

대변인단은 사실과 다른 기사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분과와의 팩트 체크를 통해 즉시 오보 기사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② 대변인 행정실

대변인 행정실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각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팀 등 인수위 내부에서 작성한 모든 보도자료와 대변인단 브리핑 자료 등을 대변인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SNS ‘대변인실 알림방’을 통해 배포하였다.

인수위발 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해 대변인단이 사실관계가 다른 오보 기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인수위 관련 언론 기사를 발췌해 일일 보도 현황, 주간 보도 현황으로 정리해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인수위발 기사 보도 흐름 등을 알려 추후 정책 논리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였다.



원일희·최지현 수석부대변인 정례 브리핑(2022.3.29)

(2) 능동적 취재 지원

대변인 행정실 구성원들은 단순히 인수위 소식만 전하는 창구가 아닌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대변인실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인들이 인수위 활동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과 함께 각종 브리핑 실시 유도를 통한 기삿거리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통의동과 삼청동 2곳에 나누어 위치한 인수위 브리핑실을 오가며 보다 나은 취재 환경 마련을 위해 발로 뛰었다.

매일 SNS ‘대변인실 알림방’에 인수위 분과별 일정·보도자료·브리핑 자료를 수시로 공지해 인수위 기자실에 상주하지 않은 기자들도 취재를 돕는 편리함을 더하였다. 각종 현안에 대한 언론 취재를 위해 풀기자를 구성해 분과별 회의와 현장방문 등의 지원으로 인수위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활동 내용

(1) 브리핑 운영과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실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매일 정례 브리핑(오전 9시 당선인 대변인·오후 2시 인수위 대변인)과 상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4~5번의 브리핑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주요 브리핑은 대변인을 필두로 수석부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코로나 방역 정치방역 평가와 7가지 권고사항’, ‘부처별 업무보고 현황’,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코로나 손실보상’,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등 4월 25일 기준으로 143차례의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보도자료의 경우 ‘부동산 세제 및 유류세 인하 발표문’, ‘안전속도 5030 개선 및 스쿨

존 야간 가변속도제한 운영’ 등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와 분과별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매일 3~4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오보 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변인단은 각자 분장된 인수위의 분과별 기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보도는 해당 분과와 상의해 즉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본인 브리핑 이후 보도 추이를 점검해 해당 분과별 인수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행정실 역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등 각 언론사 보도를 조·석간으로 모니터링해 사실관계가 다른 왜곡된 기사를 발췌,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활동에 임하였다.

주요 정정 사례로 지난 3월 22일 안철수 위원장 브리핑 시 언급한 전 국민 항체양성을 샘플조사 발언이 전수조사로 잘못 보도된 20여 건의 오보 기사를 모두 개별적으로 정정 요청해 바로 잡은 바 있다.

지난 4월 6일에는 대통령 취임식 BTS 초청 공연기획 기사와 관련한 수십 건의 오보에 대해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논의과정 중 나온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는 입장을 수정 반영시키기도 하였다.

(3) 분과별 회의와 현장방문 취재 지원

대변인실은 매일 풀기자단을 구성·운영하며 인수위 회의가 열리는 간사단 및 7개 분과위, 3개 특별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이전·부산박람회유치TF 등의 회의 내용과 활동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전국 각지의 현장을 방문하는 인수위 각 분과·특위 위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현장 취재지원 풀기자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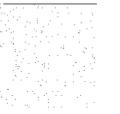
(4) 취재 인프라 마련

① 브리핑룸과 공동기자회견장

인수위 출범 당시 출입기자 브리핑룸이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한 곳에 마련되었으나, 기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기자 브리핑룸 두 곳을 추가하여 취재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당선인과 인수위위원장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은 공동기자 회견장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좌석 부족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인수위 등록기자 대상으로 일일 취재신청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102석)은 지정좌석제와 자유석으로 병행 운영하였고,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역대 인수위 최초로 연수원 출입구 바로 앞에 (천막) 원격기자회견장(42석)을 설치하였다.



인수위 현장방문 주요 취재지원 현황

주최	일시	내용
당선인	3.1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인수위	3.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
사회복지문화분과	3.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면담(경북공역 회의실)
당선인	3.30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배식 봉사
당선인	3.31	한국무역협회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인수위원장	4.2	하이브(BTS 소속사) 사옥 방문 방시혁 의장 간담회
당선인	4.3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분향 및 추념사)
당선인	4.6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한국프레스센터)
코로나비상특위	4.7	아동 언어 교육 발달 '투명 마스크' 활용 방문
당선인	4.7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인수위원장	4.8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차남양기술연구소 방문
인수위원장	4.10	소상공인·자영업자(서울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
당선인	4.11~12	1박 2일 대구·경북 민생탐방(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청년소통TF	4.12	웹툰작가 현장 간담회(서울 강남구 박태준 만화회사)
인수위원장	4.12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센터
인수위원장	4.13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홍익사대부속여고)
정무사법행정분과	4.14	서울소방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
당선인	4.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방문, 한국노총-윤석열 당선인 간담회
당선인	4.17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선인	4.24	서울국제포럼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 참석
당선인	4.19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
당선인	4.19	용산공원 부분개방 행사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
당선인	4.20 ~ 4.22	2박 3일 호남·경남 민생탐방 (새만금방조제,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광양제철소, 진주 중앙유등 시장, 부산상공회의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대회' 참석 등)
부위원장	4.20	국내 최대 ICT 분야 전시회인 '2022 월드IT쇼' 방문
기획위원장	4.21	GTX-A 현장 방문
기획위원장	4.24	이정득심 오픈 콘퍼런스(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의 경우 원격 브리핑룸(75석)을 운영하며 통의동 브리핑을 실 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편리한 취재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출입기자증 발급

4월 26일 현재 1,166명의 언론인(취재, 영상, 사진기자 등)의 인수위 출입기자증이 발급되었다. 출입기자증 발급은 언론사에 대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 '언론 프렌들리' 정신을 보임과 동시에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취재의 경우 혼선방지를 위해 인수위 출입등록 언론사별 1명씩만 사전 취재신청을 받아 탄력적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인수위 출입기자증 현황(4.26 기준)

구분	언론사(개사)	기자 수(명)
중앙	30	296
방송	19	159
인터넷 등 기타	97	221
사진	47	93
영상 (오디오, 차량기사 포함)	18	188
지방	46	66
외신	61	143
총계	318	1,166

4) 평가 및 제언

인수위 출범 이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입기자들의 취재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기자회견장과 천막기자회견장을 설치해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변인 실은 언론 프렌들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인수위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 내내 언론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언론에 보도되는 인수위 관련 정책 들도 대부분 정제된 내용으로 기사화되어 역대 어느 인수위에 비해 정책적 혼란과 혼선이 적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월 23일 이에 대해 "한 달 정도 (인수위)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바깥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예전 인수위를 보면 (설익은 정책 발표가) 오히려 국민 공론화가 아닌 국민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변인단은 인수위 출범부터 업무분장된 분과별 회의 내용 중 정제된 내용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인수위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보도가 국민에 알려지는 데 일조하였다.

인수위에 보고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 내용이나 분과별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이 철저하게 정제된 상태로 알려져 논란이 많은 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차기 인수위 대변인실을 위한 제언으로 대변인실이 인수위 초기부터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과 각 분과의 협업체계에 대한 실무 매뉴얼 마련을 들 수 있다.

대변인실과 각 분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인수위 초기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책홍보와 대언론 소통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행정실

1) 구성

행정실은 서무·인사·회계처리, 출입 및 보안관리, 분과 지원, 국민제안센터 운영, 백서 발간 등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행정실장 1인, 행정부실장 1인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원회의 시설·장비 운영, 방호, 속기, 기록물 관리,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위한 인력은 각 부처에서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2) 활동 내용

(1) 인수위 출범·운영 지원

인수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4층에 대통령당선인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대선 5일 후 3월 14일부터 당선인이 집무를 시작하였으며, 인수위 사무실 집기는 일정기간 동안만 업무를 추진함을 고려하여 간소한 책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인수위 사무실 배치 및 구성, 출범식 행사 준비, 사무가구 및 운영 물품 확보, 홈페이지 제작 준비, 인수위 운영규정안, 예산 편성안 등 인수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검토로 인수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 인사 운영

인수위 조직 및 인력은 위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3월 18일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이후 전문·실무위원 등은 당·선대위 출신의 파견자와 각 부처 전문가들 중 가장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적임자를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임용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보다 심층적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각 계를 대표하는 외부전문가도 총원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2022.3.26)

(3) 예산·회계 운영

인수위의 운영 예비비 27억 500만 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인수위 예비비 편성(안)은 위원회 출범 당일인 2022년 3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3.22)을 거쳐 확정 된 후 3월 23일에 인수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인쇄비 등 개별사업비 집행절차 등 공통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 서무회의(3.31)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부서별 운영비, 개인별 직무활동비 등 특수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 3~4월분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등 인수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금융연수원 구내식당과 삼청동·통의동 인근식당(8개소)과 협의하여 식권을 발행하여 인수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분과별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도 방문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무원여비기준'에 준하여 현장방문 경비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국정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특강 강연자 및 수화통역사 수당지급에도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회계관서 등록,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질서 준수, 훈련 중 사망한 공군 조의 격려 등 대통령직 인수업무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 서무 지원

서무팀은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 사무실 설치, 사무집기 배치,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장비 설치, 사무실 방호 및 출입·주차 관리, 보안관리, 기록물 관리, 회의 운영 지원 등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무기능을 총괄 지원하였다. 특히 지원업무

중 사무실 설치에 어려움이 가장 컸다. 7개 분과, 3개 특별위원회로 역대 인수위 중 가장 많은 조직을 구성한데다 청와대이전TF, 2030부산엑스포TF, 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동산TF 등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협소한 가운데서도 총 74일의 사무공간을 신속히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회의실을 포함한 8개의 회의실을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별로 토론,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여기에 책상·캐비닛 등 사무집기 배치, 인수위 직인·청인 등록, 회계관서 지정 등 신속하게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수위의 조기 정착을 견인하였다. 인수위원 임명, 현판식 및 전체회의 등 조기출범 행사를 개최하고, 당선인과 위원장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에 속기사(2명)를 배치하여 기록물 관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속한 브리핑과 언론 기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기자 회견장을 확대 운영하고, 외부에 50석 규모의 취재기자 대기장소(천막 텐트)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전기난로, 에어컨, 대형선풍기, 음수대 등을 지원하여 언론 기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방부에서 차량 및 운전원을 지원받아 셔틀버스(2대) 및 업무용 차량(4대)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였다.

정부 전산운영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실무인력들을 위하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매뉴얼'을 작성·공지하는 한편, 인수위 출범 초기에 당선인이 참석하여 인수위 구성원간 멤버십 공유,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5)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①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인수위는 출범시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 자제, 대면업무 최소화 등 방역을 고려한 업무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출범 전 실무지원단부터 행정안전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정보화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업무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 설정, 정보화 기기(PC, 프린터, 팩스 등) 설치, 재택근무 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인수위 전자문서시스템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전자문서용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없이 즉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전자문서 보안을 위한 설치 시간과 인프라 구매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온·나라 문서 시스템은 내부의 전자문서 시스템이자 그룹웨어 및 온·나라 메일을 통한 인수위 직원 간 연락 수단의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② 홈페이지(20insu.go.kr) 구축·운영

인수위 홈페이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수위 활동을 신속하게 알리는 등 실시간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홈페이지는 '인수위 소개', '활동', '소식',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청와대 이전과 개방' 등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여 다양한 채널로 누구나 편하게 새 정부에 대한 제안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와대 이전과 개방'이라는 메뉴를 신설하여 청와대 개방의 의미, 용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등 인수위 내 특별위원회들의 활동도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 별도 메뉴를 신설하여 취임식 신청 및 조회, 통합 메시지 전달 등의 소식도 안내하였다.

(6) 국민제안센터 운영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창구로써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4월 4일 공식 출범하였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마련되었으며 인수위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콜센터를 국번 없이 1392(일상국민)로 연결하고 카카오톡 채널도 오픈하였다.

국민제안센터는 '우수제안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 중 새 정부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 우수 제안을 국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존중하였다.

(7) 보안활동 전개

국가의 주요 정책자료가 단기간에 유통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존하는 인수위의 위상에 부합하는 보다 수준 높은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출범 이전부터 국가정보원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약, 보안측정과 컨설팅을 통해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원·문서·시설·정보보안 등 보안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유출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전에 차단하였다.

당선인 집무실이 위치한 통의동에는 경호처와 합동으로, 삼청동은 방호직 공무원과 경찰청 협조를 통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관리와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방문자 방문증 교부 및 공무원 동행 출입, 수화물검색기(X-RAY), 금속탐지기(MD)를 운영하였다. 인수위원 및 직원(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자문위원 중 상근직원은 간사위원의 요청 및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증을 발급하였다. 주차는 주차장 면적 등을 감안하여, 차량비표 발급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였다.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받고, 행정실장을 총괄 보안담당관으로, 국가기관 보안관리에 익숙한 각 분과별 정부파견 공무원 중 선임자를 분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회의자료 관리, 접수·생산문서와 비밀문서 관리, 보안서약, 보안교육, 비밀취급, 사무실 출입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장착, 국정원과 합동으로 보안측정 실시, 망 분리, 홈페이지 보안, 보안솔루션 설치 등 주요 보안관리 사항을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시스템적으로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구축하고, 보안 USB를 제외한 일반 USB, CD 등 별도의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인터넷망에서의 상용메일 및 불필요 프로그램(메신저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해킹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수위 구성 초기에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킹으로 의심되는 메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메일을 열어본 PC의 망 분리 및 교체(포맷), IP 변경 등의 대응을 통해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보안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수위원회 시스템의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사이버 위협을 대비한 취약점을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시설 보안 측면에서는 기자실을 통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브리핑룸은 별도의 인터넷망 사설망으로 구축하였으며,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통해 테더링으로 인한 해킹 및 자료 유출에 대비하였다.

해당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생성된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후 각 개인 PC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포맷을 실시하는 등 생산된 자료가 분실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생산부터 파기까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행정실 직원 격려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2022.3.21)

(8) 인수위 백서 발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제20대 인수위의 활동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향후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백서발간팀에서 집필방향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TF 등 부서별로 집필위원을 선정하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수위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백서발간팀과 집필위원 간 수시로 소통하며 백서발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 모두 과거의 백서 관행을 개선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진·인포그래픽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시각적으로 도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인수위 구성 현황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과 인수위 기간 중 당선인의 주요 활동, 대통령 취임 행사 등을 압축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게 담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인수위 백서 부록으로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영상백서를 제작하였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수위 주요 인사 심층 인터뷰, 현장 스케치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수위 활동과 비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인수위의 차질 없는 출범과 각 분과 및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민제안센터, 청와대이전TF 등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설치하고, 각종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물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인수위 출범시기는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국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49만

881명, 3월 22일 기준) 예방대책이 강화되는 시기임에 따라 인수위 행정실에서는 방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인수위 코로나19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지하고 각 분과위에 전달하여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매진하였다.

코로나19 방역관리는 크게 시설관리, 위생관리, 복무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먼저,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출입자 발열 체크(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 체온계), 출입자 소독(출입구 전신소독기 설치), 방역안내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자가 진단키트 지원, 사무실 환기, 식사시간 분산 등을 실시하였으며, 복무관리 측면에서는 유증상 발생시 대응요령, 확진자 발생시 7일간 격리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인수위 내에서 다수인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각 회의실마다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3) 평가 및 제언

인수위 초기 특히 늘어나는 사무실로 인해 회의실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분과별 원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7개의 회의실을 준비하였으나, 점차 인원 및 조직이 늘어나 2개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변경, 5개의 회의실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회의실 문제로 사무실과 휴게실을 분할해 회의실을 8개까지 확보하여 분과별로 토론,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였다. 인수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회의실을 포함하여 최소한 10개 이상 회의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비품·사무집기 등 제작·구입시에는 대부분 업체가 주말에 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인수위 운영기간이 3월 중순~5월 초순이므로 날씨 변화를 고려하여 온열기 및 냉방 상태를 미리 점검·준비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의 경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인수위원회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출범 전에 구축 전략과 방향을 확정하고 역량있는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였다.

한편 인수위 인원의 가변성을 예상하여 사용가능한 전화번호 1,000개를 사전확보 후 분과 등 조직별로 여유를 두고 배정하여 인원이 중간에 증가되어도 조직순에 맞게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공동기자회견장은 통의동과 삼청동 두 곳에서 운영되었으며, 건물 외부 천막 기자 대기실에도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였고, 유튜브 라이브(Live)방송을 통하여 통의동 기자회견장 상황을 삼청동 기자회견장에 실시간 생중계로 제공하였다.

14. 국민제안센터

1) 구성

국민제안센터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소속으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총괄보좌역 1명, 팀장 3명, 실무요원 27명 등 33명으로 구성되었다.

허성우 센터장은 국민의 뜻을 소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제안센터 업무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부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센터의 운영을 관장하였다. 총괄보좌역은 인수위와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방문접수팀은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제안을 안내·접수하였고, 분류처리팀은 모든 정책제안을 검토하여 민원과 제안을 분류한 후 제안을 해당 분과로 분류·전달하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분석팀은 인수위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매일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분과에서 정책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콜센터(1392)를 개설하여 상담원 5명이 전화로 국민의 정책제안과 문의사항을 직접 응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기본 방향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의 다양한 제안이 인수위 홈페이지(20insu.go.kr)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되었다. 국민제안센터는 4월 4일 업무를 시작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제안과는 별도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제안센터 내부(2022.4.4)

인수위에 찾아가 제안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현장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방문한 국민이 편안한 환경에서 제안하거나 실무요원들과 상담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급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제안·민원의 경우 직접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분석하여 해당 분과에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홈페이지와 현장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실무요원들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분과로 분류하여 국정과제나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처리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들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실로 이관하여 인수위원회 기록물로 보관·관리된다.



개인적인 민원 및 진정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다.

한편, 인수위 출범 이후 인수위 정문 앞에서 개인 또는 단체들의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국민제안센터에서 국민제안으로 접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3) 활동 내용

(1)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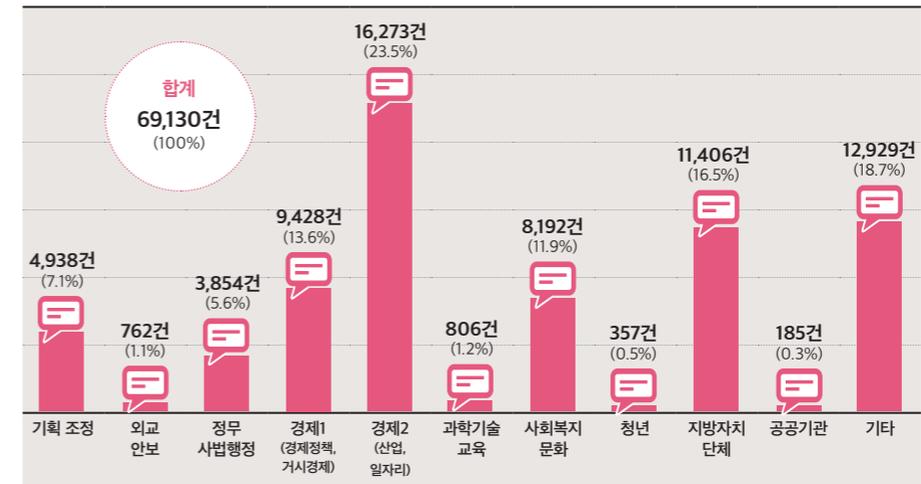
국민제안센터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3월 17일 인수위 홈페이지 개시 이후 온라인으로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4월 4일 국민제안센터 현장 창구가 개설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인수위에 전달되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국민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소중한 뜻을 제안하였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2)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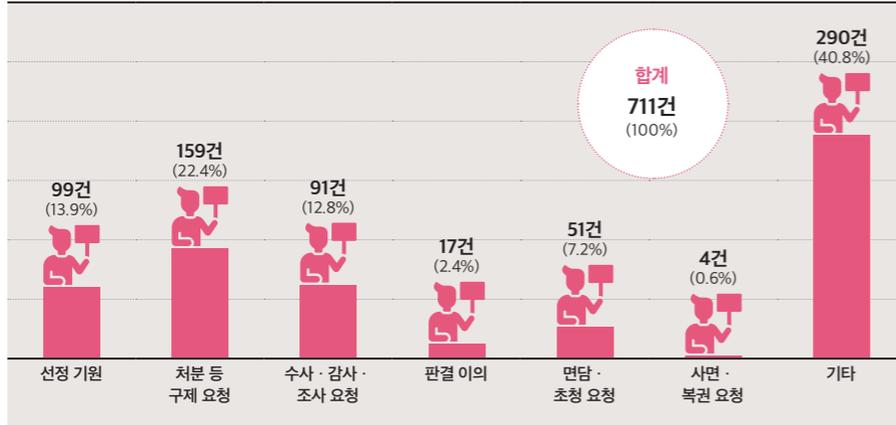
① 제안·민원 접수 현황

구분	제안(69,130건, 99.0%)			민원(711건, 1.0%)	
	홈페이지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합계	68,613건 (99.3%)	406건 (0.6%)	111건 (0.2%)	306건 (43.0%)	405건 (57.0%)
69,841건 (5.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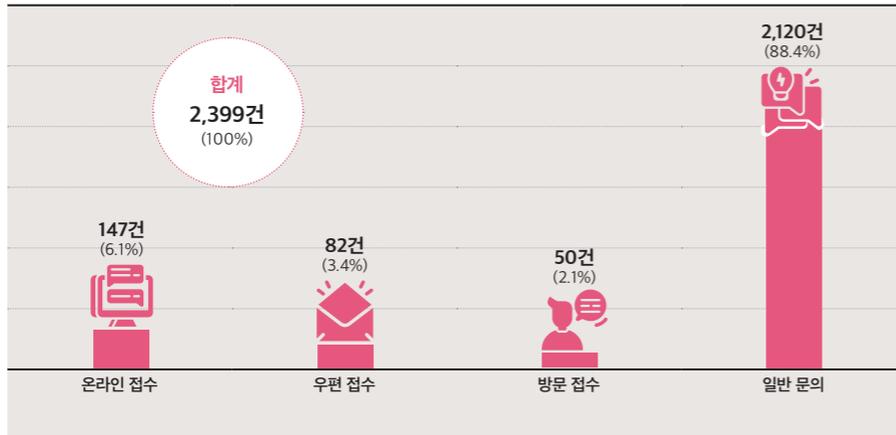
② 제안 현황



③ 민원 현황



④ 콜 상담내용별 현황



⑤ 분과별 주요 키워드

분과	주요 키워드
기획조정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경제2	전기안전관리법, 위례신도시, 동인선 착공, 성남 고등동(민간 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둔촌주공 재개발
외교안보	BTS 병역 특례, 사회복무요원 폐지, 미국, 우크라이나, 직업군인, 예비군, 군무원
과학기술교육	대학 입학 정원 확대(약대, 수의대), 국가장학금, 국공립 유치원, 보험료, 어린이집, 육아휴직
정무사법행정	여가부 폐지, 만 나이, 지방선거, 선관위, 손정민, 시민단체, 검수완박
사회복지문화	일회용 컵, 기초연금, 발달장애, 백내장, 간호법 제정, 간호전문대, 비대면 진료
경제1	기재부 소득세법 유권해석, 주거 안정, 부동산(양도세·중부세·재산세), 물적분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매도, 백내장 실손보험
청년소통TF	국가장학금, 일자리, 갑질 문제, 청년지원, 차별금지법

⑥ 우수 국민제안 TOP10

순위	제안명 및 내용	분과
1	잔혹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는 SNS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정무사법행정
2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요건 차이로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습니다. 공매도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주시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경제1
3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 젊은 군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 원 공약,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외교안보
4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최근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1
5	층간소음 관련 규제 강화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 기준도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정무사법행정
6	아동학대·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신상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도 더욱 강화해주세요.	정무사법행정
7	보이스피싱·SNS 메신저 등 전자금융사기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경제1
8	산불예방 지원책 마련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산불 진화 전문비행단 설치 및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주세요.	경제2
9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정부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예산 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사회복지문화
10	국군 장비의 현대화 추진 국군 장비의 현대화는 군 전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장비를 첨단무기와 장비로 교체·확충해 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유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국민제안센터 개소식(2022.4.4)

4) 평가 및 제언

국민제안센터 현장 창구는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되었고,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안은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접수해 처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사회·경제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커 국민제안 접수 건수는 7만 건을 돌파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처리 절차를 단축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였다. 온라인이나 현장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은 각 부처, 기관에서 파견된 경험 많은 실무요원들이 즉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인수위 해당 분과에 전달하였고, 각 분과에서는 매일 이러한 제안내용들을 검토하여 향후 국정운영이나 국정과제에 반영할지를 판단하였다. 민원도 국민신문고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처리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에 배정·처리되도록 하였다.

둘째, 긴급한 현안이나 주요한 제안은 국민제안센터에서 직접 관계부처나 기관과 함께 협업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역대 국민제안센터와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짧은 인수위 기간에도 국민제안센터는 적극적으로 제안이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매일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하루에도 1,000건 이상의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국민의 제안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매일 하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누적되어 부처나 기관에서 필요한 빅데이터로 관리되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민제안센터 개소식(2022.4.4)

넷째, 분과별 제안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우수 제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수많은 제안 중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직접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는 등 국민제안센터는 국민 중심으로 운영되어 당선인의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철학을 잘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거 이후 인수위가 구성될 때마다 국민의 의견을 받는 홈페이지와 현장 창구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어 각기 다른 방식의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국민도 혼란스러워하고 인수위나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처리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축적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안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03.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민, 50일의 낮과 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2장 특별위원회 및 TF 활동

01. 국민통합위원회

1)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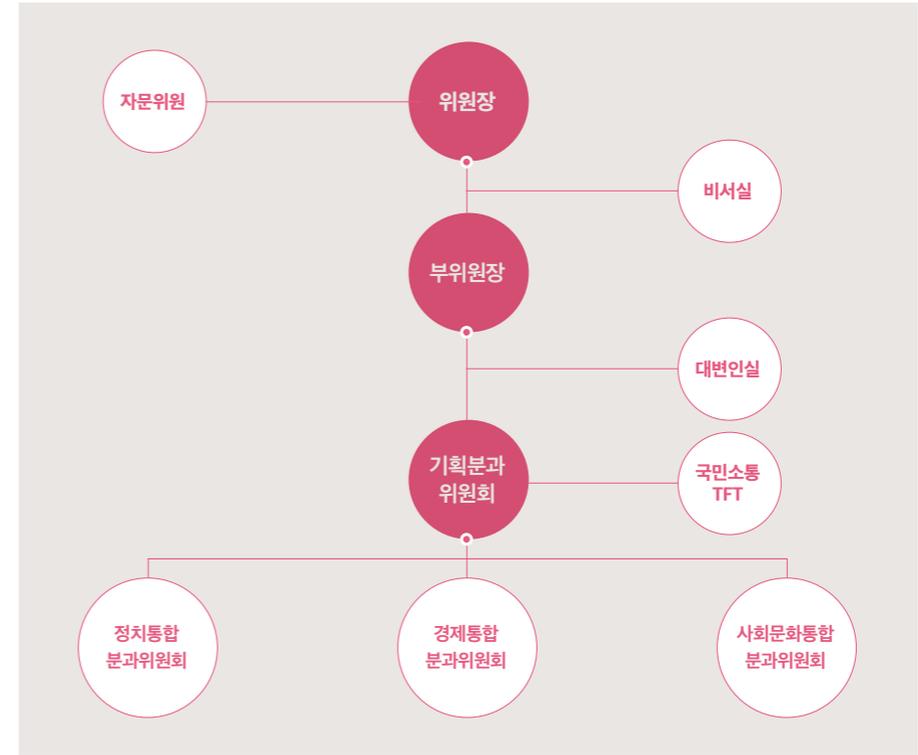
국민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제도와 정책으로 현실화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핵심 목적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통합 과제에 효율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응을 위해 산하에 기획분과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원회, 경제통합분과위원회, 사회문화통합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두고 운영하였다.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동철 부위원장, 최재천·김용태·유병준·임현진 분과위원장 등 25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39명,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577명이 활동하였다.

2) 기본 방향

우리 사회는 가치·이념·정당·세대·지역 갈등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갈등지수를 보이며, 국민적 인식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88.7%가 응답하는 '갈등공화국' 수준이다. 나아가 사회 다원화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연령주의(Ageism)·정보편향(Filter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Bubble) 등 새로운 갈등이 폭증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세대 및 젠더 간 갈등 등이 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통합역량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정부의 사회 갈등 관리지수도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통합의 새 시대, 새 의지, 새로운 접근을 목표로 첫째,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민통합 실현 과제를 발굴하고, 둘째, 국민통합 장단기 과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셋째, 역대 정부 국민통합 추진기구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넷째, 향후 국민통합의 지속적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과 운영계획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기본 방향은 각 분과 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기획분과는 각 분과 활동에 담론과 실행가능성의 균형, 지속가능성과 실천가능성의 균형,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정치통합분과에서는 양극화된 정치구도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경제통합분과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주력하였다. 사회문화통합분과는 시민사회와 지역·노인·청년·장애인·젠더·이주배경인 등 영역에서 갈등적 합의를 이끄는 제도와 통합을 위한 문화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2022.4.1)

3) 활동 내용

국민통합의 실사구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정책 협의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전체회의 6회, 워크숍, 분과 회의, 자문위원회 회의와 함께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현장 방문, 언론 인터뷰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1개 국민통합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 그리고 17개 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4월 27일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정치 분야 과제로 '여야 공동공약 추진협의체 구성', '숙의형 공론화를 통한 실용·생활정치 구현', '정치적 다원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통합을 위한 초당적 포용적 남북관계 개선'이 제안되었다. 경제 분야 과제로 '시장에 기반한 유통시장 상생', '시장 불공정 해소를 통한 이윤격차 완화', '취약계층 및 세대간 격차 해소'가 선정되었다. 사회문화 분야 과제로 '국민 문화향유 시대', 'i-CARE 서비스 모델', '청·장·노년의 따로 또 같이 : 상호이해 제고', '다문화에서 이주 배경인으로 새로운 삶'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대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설치·운영한 기구(국민대통합연석회의,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공과를 분석하고 그 근거법, 조직구성, 이행강제력 수준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 워크숍

주제발표	내용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통합과 사회의 품격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갈등적 합의의 가치 리더십 : 정치통합의 새로운 길
권순우(경제통합분과 위원)	경제 양극화와 한국 경제 개혁 과제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식탁'

주제	참석자
첫 번째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4.13, 국가원로 경청)	신영균, 김명자, 반기문, 신낙균, 전윤철, 김항식, 정대철, 문정희
두 번째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4.19, 재난피해자 위로)	울진·강릉 산불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족, 안양 도로포장사고 유족, 평택화재 소방관 유족,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택배과로사 유족, 올레나 웨겔(우크라이나 출신 통역사)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4.27, 문화예술인 감사)	이정재, 이영표, 최민정, 이상혁, 김제덕, 손얼음, 배상민, 이성호, 정지현, 한수진, 김보람, 송소희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상설기구로서 대통령의 최고치유책임자 활동을 지원할 국민통합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그리고 운영계획 초안을 도출하였다. 즉,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국민통합위원회는 상설 국민통합기구의 설립준비단으로 활동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통합위원회와 향후 설치될 상설 국민통합기구의 연속성이 확보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발굴된 과제들은 향후 대통령 소속 기구로 설치될 국민통합위원회의 실천과제로 다듬어지게 될 것이다.

(1) 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는 총 18회 회의를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분과위원장 회의, 분과 간사회의, 당선인 업무보고 준비 회의 등을 주관하며 주요 활동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상시 자문위원회 회의 및 연구위원 간담회,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면담, 5·18진상규명위원회 등 통합 관련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기되는 통합 이슈에 대응하였다.

4월 9일 국민통합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획분과에 국민소통TF를 구성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만나 경청하고 위로하며 약속하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경청식탁'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을 통합하며 소통하는 이상적 대통령상으로 '대통령=최고치유책임자(Healer in Chief)'를 제시하고 구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2022.4.19)

(2) 정치통합분과위원회

정치통합분과는 '통합과 상생의 큰 정치'라는 기조 아래 '여야 협치 기반조성', '실용·생활정치 구현', '정치제도 개선을 통한 다원민주주의 구현',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 및 남북관계 개선'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당선인은 "무엇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막아서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정치제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 여야 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숙의형 공론화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다원민주주의의 구현과 남북갈등 극복을 위한 초당적·포용적 남북관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4월 15일 '정치제도 개혁 및 생활정치 구현' 토론회에서는 정치제도 개혁과제와 실용적 생활정치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4월 22일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서는 남북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치통합분과는 전체회의의 5회, 전문·실무위원 회의 9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치 기반조성에 의한 국민통합, 실용·생활정치 구현에 의한 국민통합, 정치제도 개선에 의한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국민통합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경제통합분과위원회

경제통합분과는 경제 양극화의 해결이 경제통합의 시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저이윤·저임금 현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잦은 폐업과 경쟁력 저하, 소규모·오프라인·입점·가맹점 사업자의 대응력 저하,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디지털 격차 및 지역간 경제 격차 등을 경제 양극화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2022.4.27)

경제통합분과는 경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기관 및 경제주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하도급 정책, 가맹거래 정책,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들을 협의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으로부터는 기업 규모별·업종별 평균임금 현황,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 자영업자 증가 대책 등과 관련한 자료 및 통계를 제출 받았다.

4월 20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과 대기업 갈등 현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2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갈등 상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4월 22일, 경기 용인시 국민레미콘 현장을 방문하여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총 11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장에 기반한 경제 양극화 해소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취약계층 및 세대·지역 간 경제격차, 대·중소기업 간 이윤 및 임금 격차 해소, 프랜차이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사회문화통합분과위원회

사회문화통합분과는 "국민을 통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당선인의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문화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으로 '코리아 르네상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상생하는 가운데, 열린 시민사회를 통해 갈등적 합의를 지향하는 가치이자 전략이다.

국민통합 과제 발굴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존플랜 등 다양한 유관기관 및 연구자와 업무협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반

영하였다. 또한 WHO 건강노화위원,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창립자와 간담회를 통해 고령화·저출생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4월 13일 '이주배경 사회 구성원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 및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해 토론하였고,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여성민우회,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시민평화포럼 등)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인 사회통합 방안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효율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12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경험·문화를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공존을 모색하는 사회통합과 소통의 새물결인 '코리아 르네상스'를 제안하였다.

분열을 극복하고 문화 강국·품격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 '문화대축제'와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국민한마당'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이주배경인 등을 아우르는 통합 추진과제도 제시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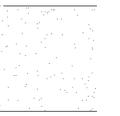
국민통합은 당선인이 밝힌 국정 제일의 과제이며, 번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정신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받들어 실사구시(實事求是) 접근과 활동으로 세 가지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국민통합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경제·사회제 분야에 걸친 국민통합 핵심 추진과제 11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지속적인 국민통합 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핵심 과제의 선정은 물론 통합을 저해하는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단, 장기적 17개의 추진과제 선정 등은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통합 추진기구의 상설화에 대비한 위상과 구성 및 운영계획을 준비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속적으로 국민통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셋째, 국민통합의 비전과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통합 국정운영 기조를 정립하고,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국민통합 추진에 있어 동력이 될 시민사회, 전문가, 각계 이해당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정권교체에 따른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여소아대 현실에서 정치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가 향후 새 정부의 주도적인 통합 정책과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통합의 완성으로 이어져 '성공하는 대통령,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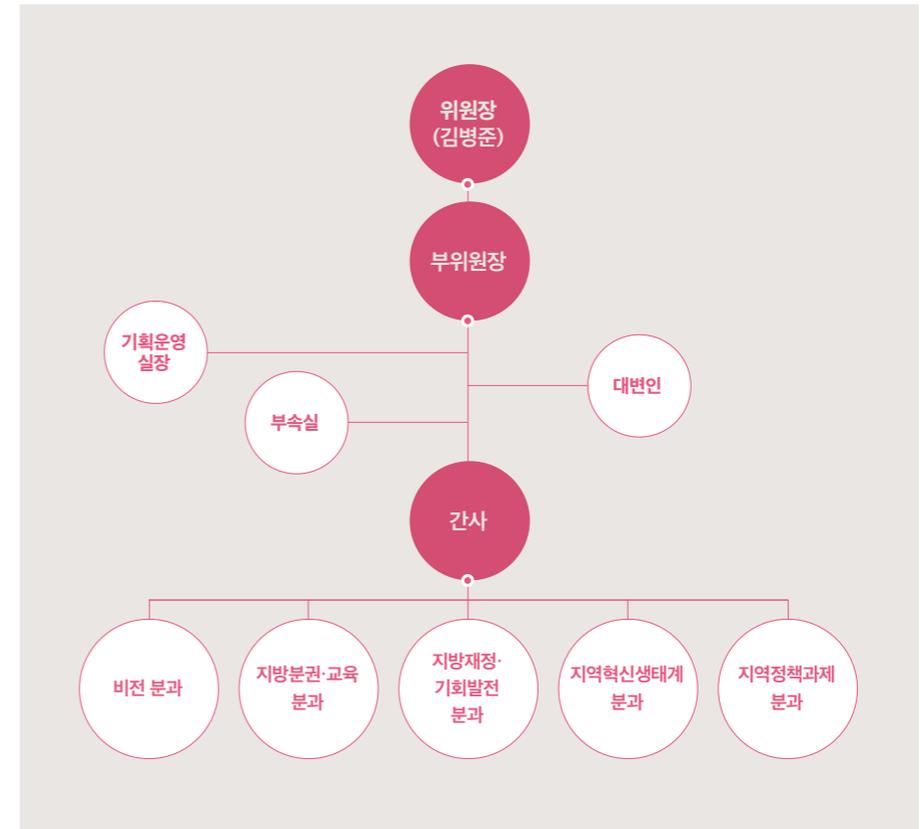


0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1) 구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특위')는 김병준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을 총괄하였으며, 정운천 부위원장 및 위원들은 국정과제와 지역정책과제를 평가·조정하고 비전 수립 등 분과별 업무를 추진하였다. 간사는 분과별 실무작업을 기획하였고,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 파견공무원과 기획운영실은 분과별 업무지원과 과제 평가, 행정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조직도



지역특위는 5개 분과와 특별과제TF로 구성되었다. 세부 분과는 핵심 역할에 따라 ① 비전분과 ②지방분권·교육(지방대학)분과 ③지방재정·기회발전분과 ④지역혁신생태계 분과 ⑤지역정책과제분과로 활동하였다. 또한 세종, 새만금, 제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도·농균형발전 등이 특별과제로 다루어졌다.

지역특위 활동에 관련한 구체적인 분과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분과별 주요 업무

분과	주요 업무
위원장	위원회 총괄
부위원장	국정과제/지역정책과제 총괄 조정
간사	분과별 실무 기획
위원	국정과제/지역정책과제
비전분과	지역균형발전 비전 가치,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지방분권·교육분과	지방분권, 교육,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국정과제
지방재정·기회발전분과	지방재정,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국정과제
지역혁신생태계분과	기업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신성장산업 권역별 육성, 지역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국정과제
지역정책과제분과	지역균형발전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지역정책과제
기획운영실장	위원회 운영전반 지원
부속실	위원회 활동 지원
대변인	보도자료 작성·브리핑

2) 기본 방향

지역균형발전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기반한 자유와 창의를 존중은 때로는 기존의 잘못된 질서나 구조를 용인하게 만들거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질서와 구조를 심화시키기도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중요한 부분인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인수단계에서부터 다듬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도별 7대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혀왔고, 당선 직후 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조치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였다.

당선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하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지역특위 임명식에서 “새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지방시대”라며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선인은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의 강화 그리고 특화사업을 지역이 선정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선인이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도출한다.

둘째, 비전과 핵심가치에 바탕을 둔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핵심정책들을 구상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갖는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지역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위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하향식 방식으로는 당선인이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 그리고 76개 실천과제 등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하였다. 이 작업은 비전분과, 지방분권·교육(지방대학)분과, 지방재정·기회발전분과, 지역혁신생태계분과의 위원·자문위원·기획위원·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상향식 방식을 통해서는 당선인 시·도별 7대 공약 119개, 지역정책과제 255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인수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도별 핵심 국장급 인력을 지역특위(지역정책과제분과)로 파견받아 시·도가 직접 지역정책과제와 세부과제들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2.3.28)

3) 활동 내용

3월 24일 당선인의 지역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지역특위의 공식활동이 시작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치분권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기관과 시·도 단체들의 업무보고·간담회 등 폭넓은 활동이 진행되었다. 매주 월요일 지역특위 전체 정기회의, 화요일 당선인 주재 간사회의, 외부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이 이어졌다. 세부적인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일시	활동 성격	활동 내용
2022.3.18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현판식
2022.3.18	자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1	자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2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당선인 주재 회의
2022.3.23	자체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면담
2022.3.24	당선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
2022.3.24	자체	이강덕 포항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4	자체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3.24	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
2022.3.24	자체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면담
2022.3.25	자체	자치경찰 업무보고
2022.3.25	자체	김영만 군위군수 면담 및 과제논의

일시	활동 성격	활동 내용
2022.3.25	자체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6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워크숍
2022.3.27	자체	위원장 주재 회의
2022.3.28	자체	정종철 교육부 차관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8	자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8	자체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8	자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28	자체	제2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3.28	자체	자치분권위원회 업무보고
2022.3.29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당선인 주재 회의
2022.3.30	자체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 보고
2022.3.30	자체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기조강연
2022.3.30	자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30	자체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31	자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31	자체	권오중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3.31	자체	4대(경영, 경제, 사회, 정치) 학회 특별연설
2022.4.1	자체	산업연구원 보고
2022.4.1	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2022.4.1	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4	자체	제3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역균형 워크숍
2022.4.4	자체	전남도청 보고 및 과제논의
2022.4.4	자체	제주자치경찰단 보고 및 과제논의
2022.4.5	자체	세종TF 세종형 기업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2022.4.5	자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5	자체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6	자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6	자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6	자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6	자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면담 및 과제논의

일시	활동 성격	활동 내용
2022.4.6	당선인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2022.4.7	자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7	자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및 과제논의
2022.4.8	자체	새만금발전기획단 회의
2022.4.9	자체	지역균형발전특위 1차 지역 현장방문(대구)
2022.4.11	자체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11	자체	세종TF 보고
2022.4.11	자체	제4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4.12	자체	세종TF, 제주TF, 새만금TF 중간보고
2022.4.12	자체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12	자체	행정안전부 보고
2022.4.13	자체	지역균형발전특위 2차 지역 현장방문(새만금)
2022.4.13	자체	제주도 추가 보고
2022.4.13	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2022.4.14	자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주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논의
2022.4.14	자체	주낙영 경주시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15	자체	감사원 보고
2022.4.15	자체	새만금TF 보고
2022.4.16	자체	지역균형발전특위 3차 지역 현장방문(광주, 전남)
2022.4.18	자체	문영훈 광주행정부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18	자체	권오중 강원도 행정부지사 보고
2022.4.18	자체	전국자치경찰협의회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18	자체	제5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4.19	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시·도지사 예방 및 간담회
2022.4.19	자체	허성무 창원시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20	자체	배기철 대구동구청장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20	자체	이병환 성주군수 면담 및 과제논의
2022.4.25	자체	제6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4.25	인수위원회	당선인 지역균형발전특위 업무보고
2022.4.27	자체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
2022.4.28~5.12	자체	17개 시·도 순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2022.5.6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해단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탐방이 이루어졌다. 상임위원들은 주중 분과별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지방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균형과 지방분권 과제를 파악하였다. 방문지역은 시·도별 1인당 GRDP가 가장 작은 대구·경북(4.9), 지역 성장동력인 새만금(4.13), 대형 SOC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과 광주 글로벌모터스(4.16) 등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일시	방문 지역 및 장소	주요 건의사항 및 쟁점	종합의견
2022.4.9	<대구·경북 지역> · 전통시장: 와룡시장 · 대학: DGIST, 계명대, 영남대 · 전통산업단지: 대구염색산업단지 · 경산지식산업지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연구개발 및 특성화 지원 · DGIST: 우수 교원 및 인재 확보 곤란 · 대구지역 섬유산업 등 풀뿌리 전통산업 지원	· 기업주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청년들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조성 · 대학 유휴시설 활용 · 청년창업 활성화 등
2022.4.13	<새만금 지역>	· 행정구역 결정 관련 갈등 · 방조제 완공 12년 경과에도 방향성 부재 · 투자, 금융,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 구축 지연	· 메가시티 개념 추진 · 거버넌스 개편, 비전 수립, 특별회계 설치 등 · 인프라-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2022.4.16	<광주·전남 지역> ·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남 영광 8MW 터빈 실증단지 · 광주글로벌모터스(상생형일자리) 및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 호남대학교(복합쇼핑몰 관련) · 광주송정역사(지역현안 관련)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과 관련한 객관적 사업 타당성 평가 필요 · 광주글로벌모터스 관련 장기주거대책과 금융 지원 등 필요 · 지역소상공인,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청취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 필요	· 지역기업 및 일자리 종합대책 필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도 결국 일자리 문제 ·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요구는 문화육구 외 일자리 문제도 존재

특위는 위와 같은 활동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4월 2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4월 29일 충남·충북, 5월 2일 강원, 5월 3일 울산·경남, 5월 4일 전북·광주·전남, 5월 6일 경기, 5월 8일 대구·경북, 5월 9일 부산, 5월 12일 제주 등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4) 평가 및 제언

김병준 위원장은 4월 27일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한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접근해 왔으나 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간담회(2022.4.9)

러한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접근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특위 활동을 평가하면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에 대한 고민이다.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하여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그 예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 등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문제는 곧 정의·공정·상식을 살리는 문제이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느 곳에 살거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향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였다.

03.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1) 구성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그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겸임하였으며, 코로나특위는 위원 12명(보건의료분과 8명, 민생경제분과 4명), 실무위원 1명, 정책지원단 8명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특위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과 코로나 19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2개의 분과위원회(보건의료분과 및 민생경제분과)로 나누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2) 기본 방향

보건의료분과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하며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그간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복한 점, 유행 때마다 병상 및 인력 부족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점, 확진자 수가 많지 않다고 자만하여 백신 도입이 지연된 점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보건의료분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의료·방역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세밀하게 추정하고 온전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실현하면서도 재정 및 거시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활동 내용

코로나특위는 3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총 17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의료분과는 매주 2회(월요일, 목요일), 민생경제분과는 매주 1회(수요일)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정기회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의견 청취, 내부 검토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2.3.28)

한편 총 5차례 별도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1) 업무보고

① 보건의료분과

3월 21일 첫 회의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과학방역을 위한 7대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3월 24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요 당면 현안인 백신과 치료제 확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구분석인력의 양성 ▲세부적인 부작용 케이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3월 28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로부터 그간의 방역 대응 경과와 방역 현안, 향후 계획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후 위원들은 감염병 급수 조정에 있어 고위험군 보호 등 초과사망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3월 31일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등 코로나19

방역·치료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대면진료 등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이 필요하며, 중증·사망을 줄이기 위한 입원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외래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부에서 보상체계를 잘 설계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동네 병·의원에서 호흡기진료 뿐만 아니라 눈, 귀, 골절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진자 대면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전문과목의 동네 병·의원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증·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아니라도 일반 격리병상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정책가산수가 지원 연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새로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 및 처우개선,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월 4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보고받고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단체, 교육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코로나특위에서는 4월 2주 이후 중단 예정인 어린이집의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가검사키트가 계속 지원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확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확진 후 치료로 연계되는 전 과정의 패스트트랙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수업이 방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재유행 시 비대면 수업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4월 7일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재점검하였다. 코로나특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신속·공정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적

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증부담 완화, 지원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할 것도 요청하였다.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5차례의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반영할 주요 과제 목록과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방역수칙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시스템 구축, 연구 기반 강화, 다양한 연구 및 분석 활성화에 대한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새로운 변이 또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역 및 의료대응 체계와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고위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화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놓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 접종,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로드맵 정리 과정에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추가 제시되었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 현재 정부 산하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정과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감염병 위원회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대응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마련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확산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과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치료제 및 백신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② 민생경제분과

민생경제분과는 3월 23일 첫 회의를 했다.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3월 30일 2차 회의에서는 현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과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 및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손실보상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정확히 추계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였다. 2021년 7월 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기반으로 손실

을 추계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 없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4월 6일 3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가 본격 시행된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규모 추계를 일차적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사의 누적 손실규모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추계하였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손실추계에 대한 추가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물가 및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후 회의부터는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세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였고,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4월 13일 4차 회의에서는 손실 추계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 및 세정 지원방안을 우선 논의하였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현장 수요가 가장 높으면서도 소요예산 및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손실보상제도의 산정·지급기준을 개선하여 더욱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두 차례 코로나특위 논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금융·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보고를 받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소비 진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 토론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특위는 매주 3회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하였다.

보건의료분과는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기반 확보방안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재정립을 위한 의료·방역체계 개선방안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역량 확보방안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방안 ▲백신의 안전성 관련 불안 해소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 종로구 사직어린이집 현장 간담회(2022.4.7)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은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현황 ▲소상공인 손실추계에 대한 분석 ▲손실추계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현금지원 및 손실보상 강화방안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안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며 빈틈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현장방문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방역과 의료대응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4차례 간담회를 했다. 3월 31일에는 코로나특위와 사회복지문화분과 공동으로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직접자병원을 찾아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대응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4월 7일에는 서울 종로구 사직어린이집을 찾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학부모 등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청취하고, 유아용 투명 마스크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13일에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방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 기회 제한에 대한 교직원, 관계 당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민생경제분과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민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2차례 간담회를 하였다. 4월 9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이하 ‘코자총’) 요청으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수위 측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코로나특위 위원이 참석하였고, 코자총에서는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이 자

리에서 위원들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4월 10일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코로나특위 및 경제1분과 위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시장 고객센터에서 계속된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통인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4) 평가 및 제언

코로나특위는 3월 21일부터 주 3회 회의, 총 17차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업무보고,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총 5차례의 별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하였다. 의료기관·학교·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하고 미래의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토론한 결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처음으로 추계함으로써 과학적 손실보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코로나특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04. 청와대이전TF

1)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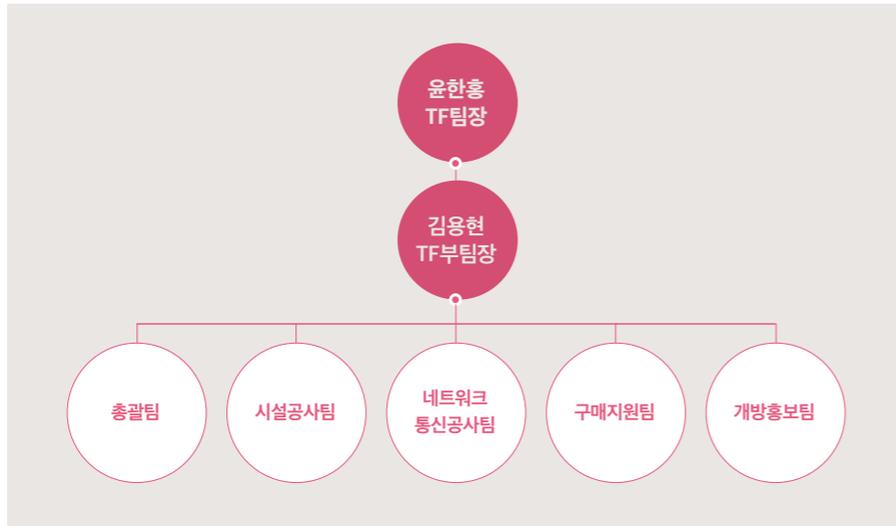
청와대이전TF는 윤한홍 팀장, 김용현 부팀장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각 분야의 실무위원들로 구성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당선인의 공약이자 인수위원회의 핵심 과제였다. 이에 따라 TF 역시 신속하게 구성되었고,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내내 차질 없이 이전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 기본 방향

청와대이전TF의 업무는 크게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5월 1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집무실 가동에 필요한 시설 및 통신공사 등을 실시하고, 기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각종 의전 및 사무용

청와대이전TF 조직도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하였다. 특히 청와대 개방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새로운 집무실 명칭을 만드는 일부터 중장기적인 활용방안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되, 안전한 관리체계 속에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청와대가 국민여러분께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3) 활동 내용

(1) 예비비 확보

이전을 위한 첫 단계는 예비비 확보였다. 예비비란 예산편성 당시 계획할 수 없었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를 뜻한다. 청와대 이전에 따른 비용지출의 경우 2022년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와대이전TF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결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예비비를 편성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4월 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60억 원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



집무실 이전 후보지 방문(2022.3.19)

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이 편성되었다.

1단계 예비비 통과 이후,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용산 집무실에 구축함으로써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4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차 예비비가 의결되었다. 전체 496억 원 중 1단계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360억 원을 제외한 1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2)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시작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 속으로 다가감을 알리는 첫 발걸음이기도 했다.

따라서 공모전에 많은 국민이 최대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동시에 적절한 공모 기간 및 홍보 방안, 그리고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진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방안도 검토하였다.

공모 이후 당선작 선발에 있어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칭 공모 과정에서 대국민 관심뿐만 아니라 신뢰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전에 공모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정부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대국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청와대 개방 미디어데이(2022.4.25)

그 결과 공모전 시행 11일 만에 공모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끌었다. 이를 통해 집무실 실제 이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부수적으로 ‘국민생각함’ 활용과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3) 청와대 개방 온라인소통관(웹페이지) 개설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 역할을 위해 ‘청와대, 국민 품으로(www.opencheongwadae.kr/ www.청와대개방.kr)’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개방의 의미를 담은 ‘당선인 메시지’ ▲역사·주요 시설·경내 유적 현황을 알려주는 ‘청와대 소개’ ▲개방행사 프로그램·함께 가볼 만한 장소 등을 설명하는 ‘행



사’ ▲등산로 개방 취지·등산 코스 등을 안내하는 ‘등산로’ ▲공지사항·사진·영상·자주하는 질문 코너가 있는 ‘국민소통’ ▲청와대 활용 국민 아이디어 접수·관람 후기 작성 등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청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5월 10일 개방 이후 관람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개시되었으며, 신청 개시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관람 신청을 할 정도로 청와대 개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람 신청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개방 초기 청와대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4) 청와대 개방행사 기획

청와대이전TF는 그간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북 궁 후원 권역으로서 청와대 부지가 지니는 역사성과 근현대 정치중심지로서 지닌 가치를 보존·활용하고,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청와대 개방 준비에 있어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74년 만에 개방되는 공간에 국민이 방문하였을 때 마주칠 다양한 공연·행사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개방행사는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는 주제하에 6개 소주제의 문화행사로 기획되었다.

청와대 개방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와대이전TF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입장관리·안전관리·질서유지·소방 대응·편의시설 정비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특히,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 개방 전에 주요 시설물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계획을 꼼꼼하게 조정하였다.



(5) 용산 시대의 개막과 청와대 전면 개방

청와대이전TF는 5월 10일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맞춰 용산 집무실 가동과 청와대 전면 개방행사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0일 0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직후 용산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 이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취임 당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집무실 공사 및 집기 배치를 완료하여 취임식



춘추문 개문행사(2022.5.10)

을 마친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여 무사히 1호 결재도 진행하였다.

이날 오전 6시30분 등산로 개방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개방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서울 삼청동 지역주민과 문화재해설사 등으로부터 소회를 들은 후, 사전 공연, 축시 낭독, 대북 타고(打鼓) 퍼포먼스, 춘추문 개문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많은 시민이 54년 만에 열리는 청와대·북악산 연계 등산코스에 함께하였다.

11시경부터는 본격적인 청와대 경내 개방행사를 추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전에 많은 논의를 거쳐 행사를 준비하였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어서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입장하였다. 국민대표는 봄의 약속을 상징하는 매화꽃다발을 들고 입장하여 청와대 개방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켰다.

12시 정문 개방 이후 20시 폐문까지 청와대를 찾은 2만 2,354명의 시민은 본관, 관저 등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건물 앞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 사진을 찍는 등 청와대 관람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또한 대정원, 영빈관 등 청와대 내 여러 장소에서는 전통무예 시연, 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어 개방의 기쁨을 한껏 드높였다. 청와대 개방 행사는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어졌다.

4) 평가 및 제언

청와대 이전이라는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취지는 단순히 물리적 이전이 아니었다.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2022.5.10)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청와대 이전을 약속해 왔지만 취임 이후 경호나 비용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경호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너무 과도한 이전 비용이 든다” 등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추가로 임기 중간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이 역시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과 약속인 집무실 이전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 이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마친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속대로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하고 수시로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알찬 행사 준비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청와대이전TF와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관람 신청 개시(4.27) 이틀 만에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신청했으며, 5월 10일 개방 첫날에만 2만 2,354명의 국민이 관람하고, 개방행사 2주 동안 약 45만 명의 국민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람객 유입으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전체에 대한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났다는 평가도 많았다. 종합적인 개방 효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03.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민, 50일의 낮과 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3장 주요 정책

01. 청와대 이전

1) 추진 배경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인 집무실과 비서진의 사무공간, 각종 행사 공간 등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온전히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이전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공간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와대라는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2) 현황 및 쟁점

(1) 후보지 결정 과정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울 광화문과 용산 중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검토 결과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사안으로 인해 광화문 인근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국민께 완전하게 돌려드린다는 ‘청와대 개방’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용산 지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예비비 통과 지연에 따른 일정 지연

당초 3월 22일 예비비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세부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4월 6일에 일부인 360억 원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이사 일정이 지연되었고 공사 시작 시점도 계획보다 15일 정도 늦춰졌다. 결국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필수 집무시설과 보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빠듯한 공사일정을 맞추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청와대이전TF 내 담당자들이 매일 일정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이사·공사·집기배치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었고, 5월 10일 용산 집무실 입주를 실현하게 되었다.

(3) 안보공백 논란과 NSC 구축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발표 단계부터 NS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기존 국방부 청사 내에 이미 군지휘통신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신규로 구축하는 등 5월 10일 전에 NSC 정상가동을 위한 주요 네트워크 및 통신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현 청와대와 동일하게 국가위기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4) 청와대 개방에 따른 행사 기획과 안전 조치

5월 10일부터 청와대 전면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와대 권역을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이전TF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방문을 신청하고, 방문 후에는 안전하게 관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소방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많은 수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 구축 작업도 추진하였다.

3) 논의 과정

(1) 대통령선거 공약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목표하에 기존의 청와대 조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01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
 -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
 - >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에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필요
- ▶ '재왕적 대통령'은 공약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
 - 행정안전부 구조는 원조시대 공약 축소판
 - >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 필요
-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대통령실 '청어항 한 침포'와 '보아별 인' '관할동 위원회'로 조직개편
 - 공무원 및 민간 최고 인재 해외 교포, 경력 있는 중장년층
 - 매기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 참여

(2) 집무실 이전 후보지 방문(3.19)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방문(2022.3.19)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광화문과 용산 중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하였다.

(3)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3.20)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2022.3.20)

이전 후보지 방문 다음날 당선인이 직접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5월 10일 청와대 전면개방, 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설치, 업무방식 개선,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다.

(4) 예비비 편성(4.6, 4.26)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6.(수) 10:00	배포 일시	2022. 4. 6.(수) 9:00
담당 부서	예산실 행정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410)
		담당자	사무관 이만구 (icarus20@korea.kr)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원,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6(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음

○ 금번 예비비를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하였음

관계부처 협의 결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총 496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60억 원의 1차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었고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136억 원의 2차 예비비가 의결되었다.

(5) 청와대 개방 미디어데이(4.25)

집무실 이전 발표 후 미디어데이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공유하였다. 청와대 개방시간, 입장 계획(하루 여섯 차례 입장, 총 3만 9,000명 제한), 사전신청 방법, 문화행사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역사적 순간에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정책 대안 :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완전한 청와대 개방

(1)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심사방법	심사위원단 심사
공모주제	대통령 집무실 명칭 및 제안 의미	응모방법	검색창에 [P 국민생각함]을 검색해 주세요 https://www.epeople.go.kr/idea
사상내용	최우수상(1명) 상금 600만원 우수상(1명) 상금 300만원 장려상(3명) 상금 100만원	공모일정	(기간) 2022년 4월 15일 ~ 2022년 5월 15일 (발표) 2022년 6월 초
		문의처	국민콜 110

* 공모전 일정은 접수량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칭 공모전을 통해 600년 광화문 시대에서 미래 용산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켰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대한 자료를 찾았고, 실제 참여율이 높은 공모전을 중심으로 추진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명칭뿐 아니라 제안의 미도 공모하기로 하였으며, 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대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해 공모전은 한 달(4.15~5.15)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공모전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본격적인 집무실 이전이 시작’되며, ‘새로운 용산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다수 언론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2) 청와대 완전개방과 전면 홍보

① 입장 운영·관리

청와대는 그간 많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공간을 74년 만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경우 안전사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관람 신청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우선 청와대이전TF는 방문객 관리를 참고하기 위하여 놀이공원 운영사 등과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방문객 확인 절차와 시간당 적정 입장 인원, 단위 면적당 최대 방문객 수 등이 논의되었다.

청와대 입장 운영·관리는 ‘관람객 모집’, ‘관람객 선정 알림’, ‘현장 입장’ 순으로 준비하였다. 먼저 관람객 모집은 관계부처, 주요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통해 4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청와대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만, 개방 당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인데, 이를 2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총 6개 구간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1개 구간은 최대 6,500명(일반개인, 단체, 65세 이상 구분)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6,500명을 넘어 신청자가 있을 시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하였다.

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관람객에게는 안내문과 출입 바코드가 발송되었다.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해당 바코드를 각 출입구에 설치된 게이트에 스캔하고 입장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일반폰 사용자 또는 스마트기기 이용 약자를 위해 등록데스크를 거쳐 손목띠를 발급받은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행사 프로그램 기획

청와대 개방 행사 프로그램은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13일간 약 230회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는 주제하에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영빈관 앞·춘추관 앞·상춘재 앞 녹지원 등의 공간과 인근의 경복궁·칠궁 그리고 전국의 청와대 유관장소에서 운영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74년 만에 열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별도의 개막행사도 준비하였다.

행사 프로그램 세부 소주제

세부 컨셉	주요 내용
약속을 담다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는 공연들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 담아봅니다.
희망을 나누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녹지원과 춘추관 앞에서 즐거운 문화예술로 푸른 희망을 나눕니다.
역사를 그리다	국빈을 맞이하던 영빈관과 왕의 어머니들을 기리는 칠궁에서 다양한 역사공연이 그려 집니다.
자연을 품다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문화유산을 만나고 자연도 품어봅니다.
문화를 펼치다	청와대 곳곳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전국을 누리다	전국 청와대 유관장소(세종 대통령기록관, 청주 청남대, 합천 청와대세트장)에서도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오전 7시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등산로에서는 약 30분가량의 공연을 준비하였다. 청와대 정문은 당선인 취임식과 연계하여 정문이 전면 개방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추진하였다. 또한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들을 추진하여 청와대 개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행사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 예정된 '청와대 개방기념 피날레 행사'도 준비하였다.

③ 등산로 완전 개방과 운영 기획



북악산 남측면 전면개방(2022.4.7)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의 완전 개방 및 운영 기획 또한 청와대이전TF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북악산의 정식 명칭은 '백악산'으로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국민에게는 일부 등산로가 통제되어왔다.

이에 통제된 등산로 통로(문)를 개방하여 기존 북악산 등산로 구간과 연결하는 '완전 개방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 후면 전망대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쉽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등산로 안내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와대와 연계된 등산로 구간에 국민 서비스를 만들고, 등산로 곳곳에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해설 장소를 마련하여 등산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④ 관람안내 계획 수립



청와대이전TF는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관람 안내를 돕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종합안내소 운영' 및 '현장 안내요원 배치'도 기획하였다. 특히 춘추관 권역, 녹지원 권역, 대정원 권역, 영빈관 권역 등 크게 4구간으로 나누어 담당 요원들을 배치하였고,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당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리플릿 형태의 인쇄물로 제공되었다.

⑤ 시설물 정비 및 소방계획 수립

기존의 청와대 권역은 일반 국민이 도심 속 공원과 같이 쉽게 방문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화장실이나 벤치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간이화장실과 벤치, 쓰레기통을 설치하였다.

새롭게 열리는 등산로에도 급경사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갈림길 길목에서 등산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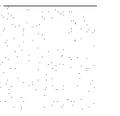
행사기간 소방계획은 기존 청와대소방대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도움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내 지역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청와대소방대 간 출동지령 핫라인(Hot-Line)을 마련하여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청와대소방대가 즉시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획하였다. 등산로 구간에서의 사고는 종로소방서가 주축이 되어 신고접수 시 출동 및 인명구조 작업을 거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⑥ 홍보 기획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 의미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 역할을 위해 ‘청와대, 국민 품으로(www.opencheongwadae.kr/, www.청와대개방.kr)’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개방의 의미를 담은 ‘당선인 메시지’ ▲역사, 주요 시설, 경내 유적 현황을 알려주는 ‘청와대 소개’ ▲개방 행사 프로그램과 함께 가볼 만한 장소 등을 설명하는 ‘행사’ ▲등산로 개방 취지·등산 코스 등을 안내하는 ‘등산로’ ▲공지사항·사진·영상·자주 하는 질문 코너가 있는 ‘국민소통’ ▲청와대 활용 국민 아이디어 접수·관람 후기 작성 등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청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람신청 서비스 안내페이지를 만들어 개방 초기 청와대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에 대한 ‘미디어데이’를 마련하여 ▲개방시간 ▲관람방식 ▲행사 등을 국민에게 소개하였다. 공공기관 현수막 게시와 옥외전광판, 주요 거점 민간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홍보하였다.

(3) 향후 과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5월 10일까지는 집무를 위한 일부 층만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나머지 층에 대한 공사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청와대에 비해 공간이 줄어든 만큼 효율적인 공간사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 및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집무실 주변에 수백 만㎡ 상당의 국민공원이 조성되면 국민이 기존 청와대와 달리 손쉽게 집무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구중궁궐’과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기존 청와대와는 달리 새 집무실은 친근한 대통령 집무실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

74년 만에 개방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는 청와대 권역 외부 공간에 대해서만 개방하였다. 앞으로는 본관·영빈관 등 주요 시설물 내부까지 포함하여 ‘청와대 완전개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 완전개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각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이전TF는 지난 4월 청와대 개방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국민 공모를 진행하였고, 박물관, 도서관, 시민광장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중 어떠한 방향으로 청와대를 운영·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칭)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의 역사성을 보존·활용하여 국민이 찾고 싶어하는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재구성하는 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74년 간 대한민국 정치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근대유산이자,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이 위치했던 권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역사문화 자원에 해당한다. 그 가치를 온전히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구성하는 일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5) 기대 효과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경호와 의전을 축소하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 시작 50일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30여년 간 번번이 좌절되었던 청와대 이전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하여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의 표명이었다.

청와대 개방은 그간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인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있다. 국민이 공원을 거닐며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국민과 소통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유입으로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잇는 관광자원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이 많아지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02. 코로나19 손실 보상

1) 추진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은 모든 국민이 함께 겪어오고 있으나, 특히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2022년 4월 17일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으나 그간 소상공인의 손실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은 그간 경영애로를 크게 겪어왔으며, 많은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현금지원, 손실보상 법제화,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선인은 이러한 상황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내용(공약집 p.39)
0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용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방역조치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금지원 현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3차 추경 등)	새희망자금 (2020년 4차 추경)	버팀목자금 (2020.12월 맞춤형 대책)	버팀목플러스 (2021년 1차 추경)	희망회복자금 (2021년 2차 추경)	1차방역지원금 (2021.12월 소상공인 대책)	2차방역지원금 (2022년 추경)
금액	150만 원	100~200만 원	100~300만 원	100~500만 원	40~2,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대상	94만 명	251만 명	301만 명	291만 명	190만 명	319만 명	333만 명
규모	1조 4,000억 원	2조 8,000억 원	4조 2,000억 원	4조 8,000억 원	4조 2,000억 원	3조 5,000억 원	10조 7,000억 원

2) 현황 및 쟁점

지난 정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총규모는 약 90조 원으로 추산된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등 7차례 현금지원 31조 6,000억 원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 3조 5,000억 원, 전기료 지원 등 기타지원 1조 원 등 총 40조 원 이상의 현금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의 1·2차 금융 프로그램 26조 4,000억 원, 2021년의 저신용 특별융자 1조 2,000억 원 및 중·저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 1조 원, 2022년의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 등 약 40조 원 수준의 저금리 긴급 금융 프로그램도 공급해오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규모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2021년 7월 7일 법제화된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된 파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손실보상제도 구축 이후 정부는 2021년 3~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두 차례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1차 320만 명에 3조 2,000억 원, 2차 332만 명에 10조 원이 편성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100% 손실보상(보정률 상향) 및 손실보상금 하한액 100만 원 인상, 방역지원금 대폭 상향 등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3) 논의 과정

대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문제는 인수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설치



되었으며, 여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코로나특위 1차 회의(3.23)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공약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행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코로나특위 2차 회의(3.30)에서는 현행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지난 2년간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정부 지원액 대비 부족분이 어느 수준인지 산출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에 요청하였다.

코로나특위 3차 회의(4.6)에서는 그간의 코로나19 손실규모 추정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지속하였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2019년) 대비 발생한 전체 영업이익 감소분(2020, 2021년)을 최초로 추계 및 분석하였다. 현 지원액이 그간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전부 지원하지는 못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코로나특위 4차 회의(4.13)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고, 그간의 피해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피해 정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식으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특위 5차 회의(4.20)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 외에도 금융, 세제·세정 등 여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코로나특위 6차 회의(4.27)에서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였다. 로드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행 및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강화가 중요하며, 향후 유사 팬데믹 상황 도래 시 과학적인 방역대처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공식 회의 외에도 코로나특위, 경제1·2분과,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 대안에 대한 실무 조정을 하였다.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전체 방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부사항들은 해당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갔다.

이 밖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코로나특위, 경제1·2분과 위원들은 4월 10일 서울 통인시장을 방문, 충분하고 온전

한 손실보상을 위해 현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4) 정책 대안

이러한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금융지원과 재기·회복지원을 망라한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맞춤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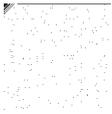
피해지원금은 코로나특위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손실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및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식의 현금지원금이다. 과거 손실에 대해서 과학적 손실추계 결과 기반의 온전한 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 등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2021년 3분기부터 개별 업체별로 산정·지급 중인 손실보상금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인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의 전부를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주로 하한액을 받는 영세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이자 및 상환부담 가중, 대출의 부실화 위험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방세 혜택도 병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따른 우대공제 한도를 5%p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2022→2023년)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납부기한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한 납세부담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부담 완화는 물론 선결제나 임대료 인하 확산 등 정책목적 달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지원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당선인 취임과 함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손실보상의 틀을 확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그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온전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고통을 최대한 온전하게 보상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방역조치가 잠정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소상공인의 손실 부족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지원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둘째, 그간 정부 지원이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는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유사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손실보상제도 강화를 통해 정부의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현금지원방식의 도입은 향후 다른 지원금 산정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 가능하다.

셋째, 온전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금융지원, 재기지원 등 정책수혜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보다 빨리 회복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번에 실시할 예정인 대규모 채무 재조정인 경우 소상공인이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견디는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로 인해 부실화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금융조치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03. 코로나19 비상 대응

1) 추진 배경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7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2,000명에 달한다. 지금은 정점을 지나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효과 감소, 새로운 변이 출현 등으로 인해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화하고 다가올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왔으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정확한 손실규모 추계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당선인 공약에 포함되어 인수위에서 본격 논의되었다.

2) 현황 및 쟁점

그간의 방역정책을 되돌아보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21년 10월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거리두기 완화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완료만 믿고 면역수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였다. 이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급증하여 결국 12월 18일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유행하며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고 민생·경제 피해가 심각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사망자·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정부의 일방적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방역·의료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인력과 비용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가을·겨울철 예상되는 재유행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 감염병 발생 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감염병 대응역량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도 누적되었으나,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그간 현금 정액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게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했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지원금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그간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거시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3) 논의 과정

대선 이후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와 온전한 손실보상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설치되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특위 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코로나특위는 3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총 17차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의료분과는 매주 2회(월요일·목요일), 민생경제분과는 매주 1회(수요일)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정기회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의견 청취, 내부 검토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5차례 별도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하고 미래의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토론한 결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처음으로 추계함으로써 과학적 손실보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코로나특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4) 정책 대안

코로나특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 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철저 ▲빈틈없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1)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코로나특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집단별·증상별 데이터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에 근거한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여 정확한 지역사회 유행 규모 및 국민의 면역형성 규모를 파악하고 백신접종 주기를 결정하는 등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치료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고 건강보험 진료 내역 등을 연계하여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연구자에게 개방하여 과학적 방역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임에도 유행억제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시행된 측면이 있었다.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토대로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가능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포함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새로운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아울러 감염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실내 환기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별로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그간 코로나19 유행 시마다 음압격리병상 부족 등 현장의 혼선이 반복되었다. 코로나특위는 상시대응 가능한 적정 규모의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추가하는 등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000개소를 확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상시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1,400개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도 300개 확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특히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체계가 비상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인력·인프라 전반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감염병에 취약한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검사부터 치료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군 검사·치료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였다. 검사 당일 치료제인 파스로비드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신속한 치료를 위해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시설, 면회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돌봄 취약계층의 의료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 대상별 촘촘한 돌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로드맵에 담았다.

아울러 소아·청소년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후유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4)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 확보로 국민불안 해소

그동안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수준이 매우 낮아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및 사망위로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백신접종 후 일정기간 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이 돌연사한 분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과성 의제 등을 통해 국민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제출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와 피해보상지원 센터 설립 등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등의 외부변수를 종합 고려해 향후 확진자 발생 규모를 재예측한 결과, 기존에 도입하기로 한 치료제 물량보다 약 100만 명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치료제 추가 확보와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5)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추계 및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 대비 2020~2021년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개별 업체의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간 피해규모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전시대행업 등 일부 업종 등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및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와,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장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5) 기대 효과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민 일상회복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이 강화되고 관련 연구분석 결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설비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 환자용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의 선제적 확충을 통해 향후 가을·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혼란 없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두텁게 강화될 것이다. 향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어 격리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돌보는 기제가 작동할 것이며,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불안이 높았던 백신은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치료제의 경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일반의료체계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간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과세자료 기반의 손실 추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손실보상제도 개선하여 올해 지급될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팬데믹에 대비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경영 여건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4. 국민통합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대안으로 단기적 핵심 추진과제 11개와 장기 추진과제 17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에 있어 “통합논리가 아닌 개별 이슈마다 의미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당선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거대 담론이나 이론적 논의를 피하고 갈등과 분열로 연결되는 구체적 원인 진단과 실천적 대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주요 정책은 정치·경제·사회 분야별로 구성되었다.

정치통합

1) 추진 배경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수록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당선인의 문제인식에 발맞추어 국민통합의 심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하여 실용정치·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첫째, 날로 심화되는 여야 대결 정치를 해소하고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둘째, 정치제도 분야에 있어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높은 불비례성과 이로 인한 대표성의 왜곡에 주목하였다. 현행 선거, 정당, 의회, 정치자금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가로막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풀뿌리 생활정치 발전을 가로막



는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셋째, 단절된 소통과 닫힌 공간에 고립되는 에코챔버 현상, 인터넷상의 선별적 정보 편향을 야기하는 필터버블 현상이 가속화되며 정치가 진영논리에 기초한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청와대와 국회의 공론화를 위한 시스템이 갈등의 공론화가 아닌 갈등의 진영화를 촉진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넷째,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념적 갈등과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보수는 반복이고 진보는 친북'이라는 그릇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2030세대의 역할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3) 정책 대안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한 국민통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선정과제는 '여야 공통공약 추진협의체 구성'이다. 대선과정에서의 공통공약 추진에 대한 여야의 협력은 정권교체 시기 협치의 출발점이 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 윤석열정부에서 실사구시의 실용정치·생활정치를 펼쳐가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형 공론화를 통한 실용·생활정치 구현'을 논의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 충분한 공론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청원이나 입법청원 등 시스템이 갈등의 오히려 진영화 양상을 낳아 숙의과정이 형해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위원회에 숙의형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선거제도가 다수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이 불비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여 의회가 갈등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거·정당·국회·정치자금 차원에서 '정치적 다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의 불안정성은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초당적 포용적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형 공론화 모델 제도화 방안 도출 ● 여야 간 다층적 협치방안(여야정 협의체, 예산 서밋(Summit), 정책연석회의 등) 조사 및 대안 제시 ● 정치제도와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에 관한 심층적 공론수렴 ● 주요국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심층 조사 및 대안제시 ●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의 새로운 갈등요인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4) 기대 효과

교착상태의 국회에서 협치의 계기를 확보하고, 새 정부의 국정추진 성과를 속도감 있게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와 정치적으로 잘 대표되지 못한 청년, 여성 등의 목소리가 잘 수렴되어 국민통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가 갈등의 최소화에 기능하고 남북관계의 포용한 사회 전반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

1) 추진 배경

시장경제에 기반한 해법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간, 취약계층 및 세대간·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윈윈 코리아'로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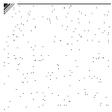
한국 경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총 영업이익(220조 원)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99%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25.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유통방식 변화에 따른 시장질서의 교란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개별 유통에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유통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유통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입점 소상공인·가맹점의 몫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소통이 일상화되고 세대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3) 정책 대안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윤율 및 임금수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납품기업이나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등 단가상승 요인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등 다양한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대기업이 납품기업이나 하도급업체와 상생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에 기반한 유통시장 상생’을 위해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상권 콘텐츠 및 관광자원 육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측면에서 대형플랫폼 내부의 데이터를 공유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단체결성 지원 및 단체가격협상 제도 도입으로 입점소상공인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 및 세대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원·근무하게 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인력을 확보하도록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우선적 주택확보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산형성을 위한 연금체계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지원·공제제도 등 단계별 지원제도를 확립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상설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경영개선·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연금 제도 개선(현 지원제도 및 지원예산 규모 분석, 일본 중소기업 연금제도 조사)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셜 인덱스(Social Index) 제정 등을 통한 대기업 상생협력 유도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지방 기업 유치 해외사례 조사, 교육격차 해소) 세대간 경제격차 해소(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출산 장려, 청년생활 개선 방안(비예산 기반 정책)) 중소기업의 사업의지를 좌절시키는 규제 혁파 등

4) 기대 효과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세대, 지역 모두가 원팀으로 협력하며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통합

1) 추진 배경

‘코리아 르네상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철학을 사회적 가치로 부흥하며, 이를 위해 K-팝·K-드라마·K-영화·K-문학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 자원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삼아 분열된 시민사회의 신뢰 및 소통을 복원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극단적인 세대차와 젠더 갈등 등으로 분열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연결이 사라진 언택트 사회에서 단절된 시민 간의 접촉, 교류 및 소통을 복원하고 ‘열린 시민사회’의 재건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2) 현황 및 쟁점

우리 사회는 진영 대립과 함께 정서 양극화가 심각한 가치 양극화를 초래하여 ‘헝그리(hungry) 사회’에서 ‘앵그리(angry)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문명적 전환’의 시기에 이르러 갈등과 분열의 극복, 대통합의 과제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 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각 부문에 특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정책 대안

코리아 르네상스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대표된다. 첫째, ‘전 국민 문화향유 시대’는 당선인 공약인 ‘만 나이’ 통일 시행과 연계한 문화대축제 ‘다시 돌아 봄(回春)’과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한 ‘국민한마당 in 청와대’를 개최하는 등의 단기 과제부터 지방분권시대를 뒷받침하는 지역문화 거점 확보와 문화 사각지대 해소까지를 포괄한다.

둘째, ‘i-CARE’는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사람 중심의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모델로, i-행복을 추구하는 주체(i)가 통합된 사회에서, C-서로 소통하며(Communication), A-나의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고(Ageing in Place), R-희망과 삶의 에너지를 되찾고(Resilience), E-상호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Embrace) 공존의 삶을 모색하는 가운데 초 건강 시민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청·장·노년의 따로 또 같이’는 2030세대의 좌절과 상실의 정서를 전환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청년정책 제안 마당인 ‘청년아고라’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 정치권 내 청년 일자리 증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상호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넷째, ‘다문화에서 이주배경인으로 새로운 삶’은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 대신 ‘이주배경인’을 법률용어·학술용어로 정립하고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 활용을 장려하여

장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를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로드맵 제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컨트롤 센터 구축 청년세대를 위한 가족 정의의 포용적 전환 및 복지 패러다임의 개선 고령 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 공유 제도 검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방안 설계

국민적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나도 한국인’ 챌린지를 진행하고, 해외동포·입양 한 인들과 소통하는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메타버스)를 설립하여 해외동포 역이민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4) 기대 효과

코리아 르네상스의 성공적 수행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람 간 갈등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사회적 문해력(literacy)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공고화하고,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회갈등지수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코리아 르네상스의 철학과 가치는 배제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없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람의 얼굴과 향기를 가진 품격 사회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될 것이다. 한국 문화의 혁신과 부흥을 통해 획득한 세계성을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삼아 ‘지방의 세계화(localization)’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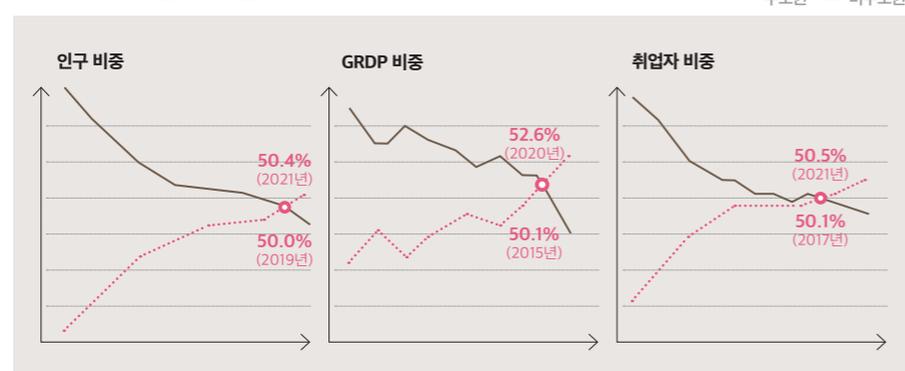
05. 지방시대 개막

1) 추진 배경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정하였다. 정부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justice)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도록 요청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주요 지표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격차 등은 지역소멸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은 ①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 ②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③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 등이 있다.

3) 논의 과정

(1) 국정과제 분야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하여 있고,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당선인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분과별 토의와 현장방문, 전체회의를 거쳐 공정·자율·희망을 3대 핵심가치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를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으로 제안하였다.

15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추진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고, 논리적 정합성·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과별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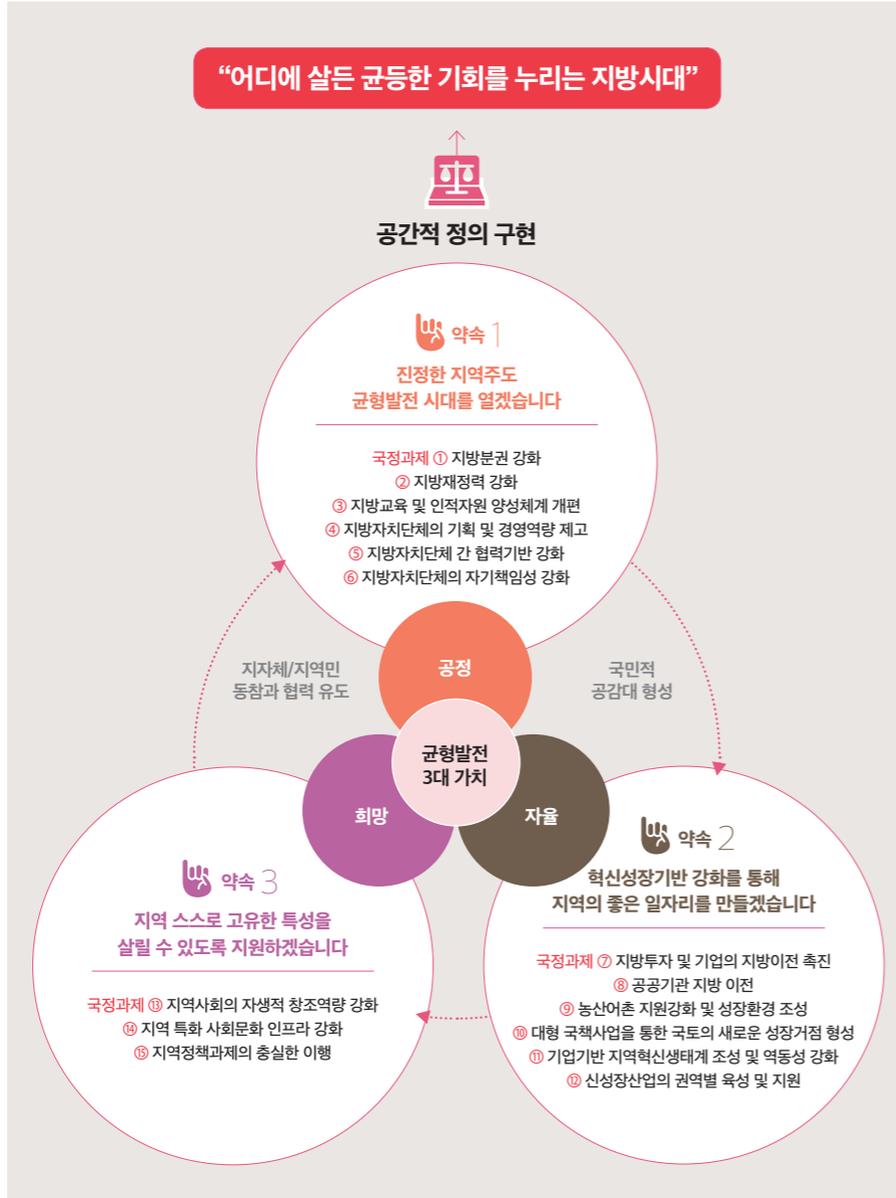
(2) 지역정책과제 분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정책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 공약 및 당선인 현장 유세, 인터뷰, 메시지·공약 추가 검토, 지역정책과제의 단순 나열에서 공약과 과제 간 정합성 제고, 통일된 지역정책과제 수에 따른 세부과제는 과제카드로 별도 관리하고 검토하였다.

지역정책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이행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정책공약집 수록 지역공약 및 추가 지역공약(당선인 현장 유세, 인터뷰, 메시지 등) 목록 재작성 후 관계부처에 1차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다. 지역정책과제 관련 부처 1차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시·도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위 내 6개 권역별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 및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의견을 마련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검토의견에 대한 부처 2차 재검토 의견 요청 및 회신 과정을 거쳐 지역정책과제를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역정책과제는 사업 내용별로 ▲지역경제 활력 ▲지역사회 활력 ▲SOC ▲제도혁신 등으로, 추진 방식별로 ▲조속 추진 ▲입법 추진 ▲사전절차 추진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개념도



4) 정책 대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는 3대 약속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와 연결하였다.

또한 시·도별 지역균형발전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 7대 공약(119개), 15대 지역정책과제(255개)를 제안하였다. 시·도별 세부내용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백서’에 수록하였다.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국정과제		실천과제 (76개)	
1	지방분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 (제주·강원·세종)
2	지방재정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3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4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6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7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기침)’ 지정 및 운영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8	공공기관 지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혁신거점 기능 강화
9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10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11	기업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연계 글로벌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역혁신 벤처모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지역혁신생태계 전담 추진기구 개편



국정과제		실천과제 (76개)	
12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 전략산업 선정·육성 지원체계 구축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기업혁신파크) 조성 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13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14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15	지역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지역정책과제 이행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 지역정책과제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 지역정책과제 및 세부 정책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5) 기대 효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권한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운영과 분권혁신특구 조성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둘째,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비롯하여 농산어촌 지원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셋째, 지역주도 성장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산업 육성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기본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및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현할 것이다.

넷째,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06.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

1) 추진 배경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로 규정하고 출범 초부터 수요억제 정책에 매몰되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심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11~2015년 사이 무려 292개에 달하는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도심공급 부족 상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 및 시장 내 유동성 과잉으로 촉발된 자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시장불안을 가속화하였다. 자금이 풍부해진 수요층은 지하철역, 직장 인근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심 수요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는 장기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2019~2020년까지 입주를 완료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소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15.7년, 길게는 무려 19.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 수요정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시장불안이 현실화 된 2020년도 이후였다.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대다수 청년과 무주택자를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뜨렸다. 단순히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문제를 넘어 세대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뿐 아니라 중장기적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궁극적 안정과 세대·계층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공급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2) 현황 및 쟁점

이를 위해서는 임기 초반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내 집 마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수요에 부응하는 도심 공급 확대 및 공급의 근본적인 시차를 고려한 안정적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각종 민간 도심사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영역의 공급을 촉진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시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각종 공급사업 추진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과정에서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시장안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논의 과정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과제 간 논의와 조율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3월 30일 부동산TF를 구성하였다. 부동산TF(팀장 : 심교언)는 금융, 세제, 공급·주거복지 분과로 구성되었다. 인수위 내부 전문위원 9인, 외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 9인이 참여하였다.

3월 30일 부동산TF 키포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세제, 금융, 공급·주거복지 분과별로 세부과제 추진 방향과 시기 등을 논의하였다.

새 정부 핵심과제인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SH로 구성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TF’를 별도 구성하고 총 2회(4.6, 4.14)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TF에서는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의 공급 모델, 연차별 공급계획,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부동산 시장은 세심한 추진방안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 협회, 유관기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과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정책 대안

(1) 정책 목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째, 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이행한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화하여 민간영역의 공급 기능을 회복한다. 다만,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다.

(2) 정책 방안

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급 로드맵에는 새 정부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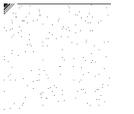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주택수급의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택지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고, ‘영끌’이나 추격매수가 아닌 계획적인 생애주기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급촉진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각종 인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 있는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여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주도 사업은 보완·승계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민간과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도심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도심 선호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가 행사하는 정비사업 인허가에 대해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 안정과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절차의 간소화, 건축 규제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 순차적 정비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고, 향후 철도 입체화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주택 50만 호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적정수준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2030세대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중산층 진입으로의 발판을 지원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택지, 역세권, 도심 인근 특별공급 물량,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년들이 희망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형 평수 추첨제를 도입하고, 내 집 마련 수요를 감안하여 특별공급 개선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모기지 등을 통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정책모기지 신설이 필요하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를 80%로 완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주단위 DSR가 LTV 완화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면서,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노후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재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해야 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규모 현실화, 청년 분리지급 확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고령친화 주택공급 활성화, 주택개량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부터 거주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추진 계획

주택공급 로드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은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비사업·1기 신도시 등은 시장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순차적 추진일정을 마련한다.

특히 시장안정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필요한 만큼 정비사업 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합원 지원양도 제한 조기화 입법 추진, 관계기관 간 금융·과세 정보 등 공유 강화, 투기 의심거래 검증 강화, 외국인 투기성 거래 조사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공급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 공약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와 공급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5) 기대 효과

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는 주거안정으로 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단순히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된 목표의 추구가 아닌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근본적 집값 안정과 함께 시장기능 정상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면 부담 가능한 가격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거나 민간·공공임대를 통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취약계층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07.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추진 배경

부동산 문제는 국민 민생과 직결된 최대 현안 과제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수익성에 민감한 투기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빨리 처분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수십 차례의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과세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투기 세력으로 몰린 다주택자들은 급증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매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확실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줄어들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평생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던 실수요자 가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은퇴한 고령 가구의 경우 늘어난 보유세를 낼 형편이 못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서민 주택들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실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 세수 비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위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취득세 등 거래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기 시작하였다. 더 나은 곳으로의 주거 상향 이동도 막혔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부동산 세제가 중심을 잃음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제는 부동산 세제를 정책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세 원리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부동산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쟁점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대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였다. 취득세는 종전 1~4%였던 세율을 2주택자에 대해서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로 인상하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0.5%~2.0%였던 세율을 2주택 이하는 최대 3%,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최대 6%까지 인상함에 따라 과세 인원과 총세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최대 82.5%라는 과도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도권 소재 주택가격 지수는 2017년 12월 85.1에서 2021년 12월 106.1로 25% 상승하였고, 수도권 소재 주택거래량은 2017년 연간 50.4만 건에서 2021년 연간 47만 9,000건으로 5% 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납세자의 담세력이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세 부담 격차를 확대시켰고,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조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고가주택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뽕뽕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된 반면, 지방 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하여 낙후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등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되어 세입자·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게 되었다.

3) 논의 과정

3월 24일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위원회 부동산 TF(팀장 : 심교언, 금융·세제분과 4명, 공급·주거복지분과 4명, 외부자문위원 9명)를 구성하여 전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다. 3월 30일에는 외부 자문위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키포프 회의를 진행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황을 도모하면서, 시장 소외계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4월 5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과별 공약 이행계획을 취합하고 논의하였다.

4) 정책 대안

(1) 정책 목표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부동산 세제를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에서 개편하기로 하였다.

첫째,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둘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셋째,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 정책 방안

우선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여 세 부담 적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에 비해 17.22% 상승함에 따라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종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도한 세 부담의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세율 체계 등 근본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개편하는데, 우선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새 정부 출범일 다음날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추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서민 주거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추진 일정

위에서 제기한 정책 대안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2022~2023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5) 기대 효과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정책 목적 남용을 벗어나 조세 원칙에 따른 적정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세 부담이 적정화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제거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 등으로 가중되었던 서민 주거비 부담도 월세세액 공제 확대,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로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 절벽에 부딪혔던 부동산 거래도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 효과는 일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조세 원칙에서 떨어져 있었던 부동산 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은 일관되고篤심 있게 가져가되, 구체적 정책 대안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제반 요인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점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08. 디지털플랫폼정부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분야 간 경계가 붕괴하고, 예측이 어려운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역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은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정운영의 과학화 등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1월 2일 발표하였으며, 인수위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지난 20여 년 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정부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유엔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2020),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2019)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정부 업무 프로세스의 전산화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국민의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2022.4.5)

서비스 이용, 정부의 일하는 방식 및 산업적 효과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있다. 이는 부처 간 고질적인 칸막이 구조, 공공데이터 개방·연계 미흡, 업무혁신에 미치지 못한 전산화, 민간의 혁신역량 활용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

먼저, 각 행정·공공기관이 부처·기관 간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방대한 정보자원을 독자적으로 구축·운영(2021년 기준 1,111개 행정·공공기관, 1만 7,060개 정보시스템)함에 따라 국민의 통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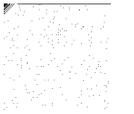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과 기관의 소극적인 법 해석 등으로 인해 전체 46만 개의 공공데이터 중 14만 8,000개(32%)만 개방된 상태이고, 특히 금융·복지 등 민간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률은 10%대에 불과하다.

디지털 신기술 도입 시에도 조직 변화에 대한 비전 없이 기술 도입 자체와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마스크 앱 개발 등 민관이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사후대처·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논의 과정

이에 인수위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3월 29일 학연 민간전문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이루어진 디지털플랫폼정부TF(팀장 : 고진)를 출범하였다. 민간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에서 강용성·김지영·송승재·오종훈·유병준·유용하·유태준·윤두식·이상근·이재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추진전략

첫째, 새 정부 출범 직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추진체계를 발족시킨다.

둘째, 단기적으로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셋째,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조원우·조준희·하정우 위원이, 정부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감사원·통계청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협업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4월 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획조정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 고진 팀장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전자정부·디지털 정부 및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관계부처로부터 듣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정보화 사업 설명 워크숍을 개최하여 22개 부처 및 기관들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현황 및 한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들을 청취하였다. 민간 위원들과 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 전자정부를 국민의 달라진 요구와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4월 8일부터 21일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프라·거버넌스 등 주제별로 심층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민관이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로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 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및 기본원칙,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4) 정책 대안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명확히 하고, 9대 기본원칙과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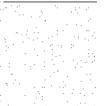
또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비전과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1)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민·기업·정부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의료·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540개의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그 중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과제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골목상권 별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등 지원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울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이 협업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 등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선제적으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알림·추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경험(UI/UX) 혁신, 공공 웹사이트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민관의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행정에서 탈피해 국가현안 관련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조기경보 및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현안대응을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민관 간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신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4)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민관협력에 기초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하에 전면개방하는 한편,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처리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 연계·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제도도 적극 개선한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하여 ‘(가칭)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유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서버 점검서비스 및 보안 취약점 제거·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국민은 편안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발과 전달에 참여하는 한편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09.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1) 추진 배경

2022년 3월 11일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특정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조항 중 56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만 55세’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로, 제1심법원은 다시 ‘만 55세’로, 제2심법원은 ‘만 56세’로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체계와 체결 및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55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22.3.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이러한 분쟁은 법적인 문서 작성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나이(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 평택시는 2월 22일 ‘만 나이’와 ‘한국 나이(세는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일선 행정현장에서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만 나이’로 연령 계산을 통일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태어난 청년 세대의 경우 교육·취업·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K-나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연령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라고 일컫는 한국 나이(K-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하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을 유발하고, 앞 사례와 같이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종 문서나 서류에 기재된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알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감기약 등 상비약을 복용할 때도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한국 나이’로 오인하면 섭취량이나 복용량을 잘못 계산할 위험성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 사례도 발견된다. 운전 특약상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가입한 사람은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민사 분야 외에 행정 현장에서도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여러 혼선이 발생하곤 한다. 코로나19 관련 행정 지침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권장 접종 연령은 ‘연 나이’ 30세 이상으로 설정된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 연령은 ‘만 나이’ 60세 이상으로 축소된 적이 있다. 일반국민은 물론 현장 실무자들도 한 번은 ‘연 나이’로, 다른 한 번은 ‘만 나이’로 기준을 설정함에 따른 현장 혼란을 호소하였고, 나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보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반국민이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의 계산이나 표시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민법>의 해석상 법적 문서나 법률관계에서는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민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읽어도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규정(<민법> 제158조)만 보일 뿐이고,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국민이 관행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그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논의 과정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61년 12월 당시 송요찬 내각수반은 1962년 1월 1일부터 단기연호 대신 서기연호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와 함께 만 연령(만 나이) 전용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에 1962년 1월 1일부터 ‘만 연령’으로 통일하도록 지시했음을 밝히고, 일반국민도 이와 같은 정부조치에 협조해 줄 것과 일반생활에 만 연령제가 널리 확산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 사용은 일상생활에 파고들지 못하였다(부산일보 온라인판 2012.12.27).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외국과 다른 연령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12월 출산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22일 이장섭 의원이 다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한국 나이’와 ‘만 나이’ 사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2월 리얼미터가 일반국민 529명을 대상으로 ‘한국 나이’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8%,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뉴닉이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021명 중 83.4%는 ‘만 나이 표준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반대한다’와 ‘기타’는 각각 12.8%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같은 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7명이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5년 10개월 만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46.8%에서 70% 내지 80%대로 급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는 4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실천하고, ‘세는 나이’와 ‘만 나이’ 혼용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사회·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방침을 밝힌 후 다음 날인 4월 12일 오전 8시까지 방송·신문 등 총 359건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만 나이’ 통일 추진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 나이’로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4) 정책 대안

‘세는 나이’와 ‘만 나이’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해소하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에 관한 규정과 ‘만 나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없

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두는 것이 일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2023년 국회통과를 고려했으나,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높은 긍정적 여론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임을 고려해서 법률안 제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이다.

‘세는 나이’의 사용을 줄여 나가고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가는 과정은 법률 개정과 함께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행정기본법>을 담당하는 법제처, 그리고 국정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상호 협력하여 ‘만 나이’ 사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만 나이’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개별법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입법적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분야별로 행정 현장에서의 법 집행 상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토론 및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고,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나이를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때 더 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도 오해 발생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특히 연령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는 나이’ 사용의 부작용으로 여겨졌던 ‘나이집단을 기반으로 한 서열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이 법적으로나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약간의 불편함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는 더 효율적이고 상식이 지배하는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적 과정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 나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 나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발적 ‘만 나이’ 캠페인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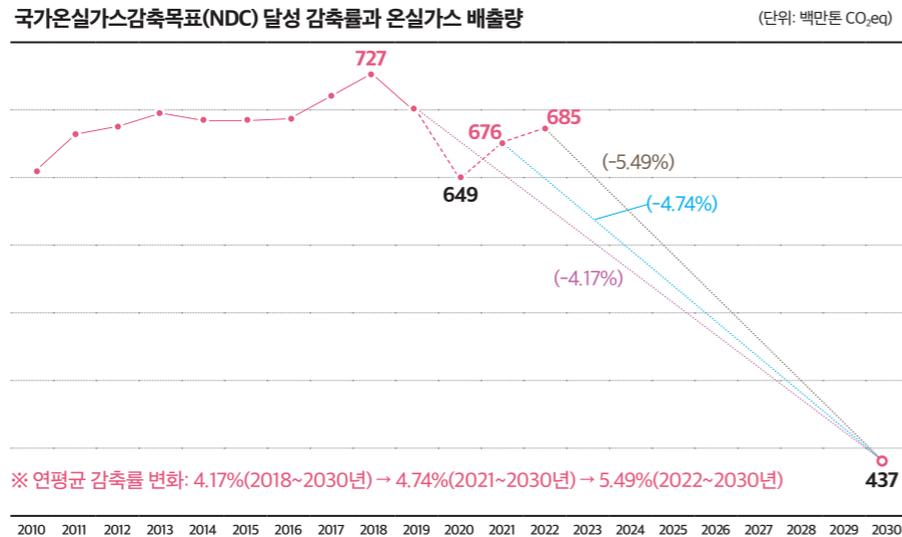
10. 탄소중립 정책

1) 추진 배경

탄소중립은 글로벌 목표이자 주요국 정상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탄소중립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커다란 도전이지만 여기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대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복합적 마찰을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팀’(팀장 :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을 구성,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문재인정부는 2021년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검증한 결과 2021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궤도를 크게 이탈해 2022년부터 연평균 5.49%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한 것이다.



아울러 원전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1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르면 전기요금에는 매년 4~6%의 인상 압박요인을 안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7%p, 2050년까지는 연평균 GDP 0.5%p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외에 발표한 야심찬 목표와는 달리 실제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되 ‘국가적 여건(National Circumstance)’을 감안,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4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반론도 있었는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정부의 감축 노력으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다가 2021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균 4.17%씩 줄여나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며 감축 궤도를 크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새 정부는 2022년 전망치 기준으로 2030년까지 매년 5.4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환경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주요국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4.9% 증가세를 보인 반면 우리는 4.2% 증가했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2021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9%인데 비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0%에 불과해 경제성장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을 비교하면 결코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려면 EU(연평균 1.98% 감축)보다 두 배 이상 감축률을 보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팀의 작업 목적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있는 만큼 진영논리와 정파를 벗어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에 주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논의 과정

기후·에너지팀은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와 토론을 시작으로 10여 개 관련 부처와 심층 면담을 하였다.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대표, 주요국 대사, 국내외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4월 12일에는 원희룡 위원장이 김상협 상임기획위원과 함께 주요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4월 26일에는 기획위원회 전체보고에서 32쪽 분량의 ‘새 정부 기후·에너지 탄소중립 전략방안’을 요약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제출하였다.

기후·에너지팀 활동 일지

일자	업무보고 및 토론	비고
3.2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 에너지기술
3.30	환경부, 온실가스센터	기후전략, 온실가스 배출계획
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정책, 원천기술
	외교부	기후외교, 국외감축 전략
4.1	한국전력	탈원전 현황, 탄소중립 전략
4.4	덴마크 대사 서한 교환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4.5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현황, 향후 과제
4.6	금융위원회	녹색금융정책
4.7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거버넌스 개혁방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 개발금융 및 GCF 현황
4.12	원희룡 기획위원장 및 김상협 상임기획위원 언론 브리핑(중간발표)	
4.13	외부 전문가 그룹 및 인수위원회 관련 분과 의견 추가 청취	
4.14	영국대사 면담	탄소중립 국제협력
	지구와 사람 세미나	학계·경제계 의견 청취
4.15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지속발전방안 청취
4.18	기획재정부(2차 보고), GGGI	대외경제국(경제협력기획과)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	8개 시민단체 의견 청취
4.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카본 프리 향후 과제 청취
4.20	국토교통부	저탄소 건물, 교통, 도시 정책
	Climate Group	RE100 정책 동향
4.2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산림청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해양수산부	해양 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4.22	독일대사 면담	탄소중립 국제협력, G7 동향
	환경연합	환경 관련 연합단체 의견 청취
4.22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탄소중립 글로벌 전략
	대통령당선인 보고	

4) 정책 대안

탄소중립·에너지 이슈는 세대와 국가를 아우를 뿐 아니라 각 분야와 부처 간에 촘촘하게 연결된 복합적 특성이 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와 환경은 물론 국가안보와 주권, 민생과 경제,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이슈이다. 탄소중립은 또한 과학기술과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위기와 맞물린 사회 안전 이슈이자 농축림과 해양, 국토와 교통 그리고 도시의 회복탄력성과 직결된 이슈이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 미래를 살아갈 2030 청년세대의 핵심 이슈이며 따라서 정치가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탄소중립의 복합적 연계성



그런 점에서 기후·에너지팀은 2050년까지 앞으로 여섯 명의 대통령이 이어나갈 탄소중립의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초당적 관점에서 실효성 정책과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천(Orderly Transition, Responsible Action)’을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5대 전략과제를 통해 당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부사항은 전략보고서에 기술하였다.



5) 기대 효과

탄소중립을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와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는 가격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강행하면서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하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해 다음 정부로 그 부담이 넘어왔다.

차제에 미국·유럽 등과 같이 제3의 독립기구를 두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공정하게 전력망을 감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나 한국은행처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가 형성되면 시장의 왜곡을 막고 정부 차원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같은 보편가치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역량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불가결한 나라(Indispensable Korea)’로 손꼽히고 있다. 글로벌 목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에 ‘상응하는 역할(due part)’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 대체 불가능한 초(超)격차 기술을 확보하며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한국은 임기 중 ‘G9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해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인구 정책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02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현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심화 등 다양한 인구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그에 맞춰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출생아 수는 2005년 44만 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18만 명 감소하였고, 고령인구의 빈곤율이나 건강수명도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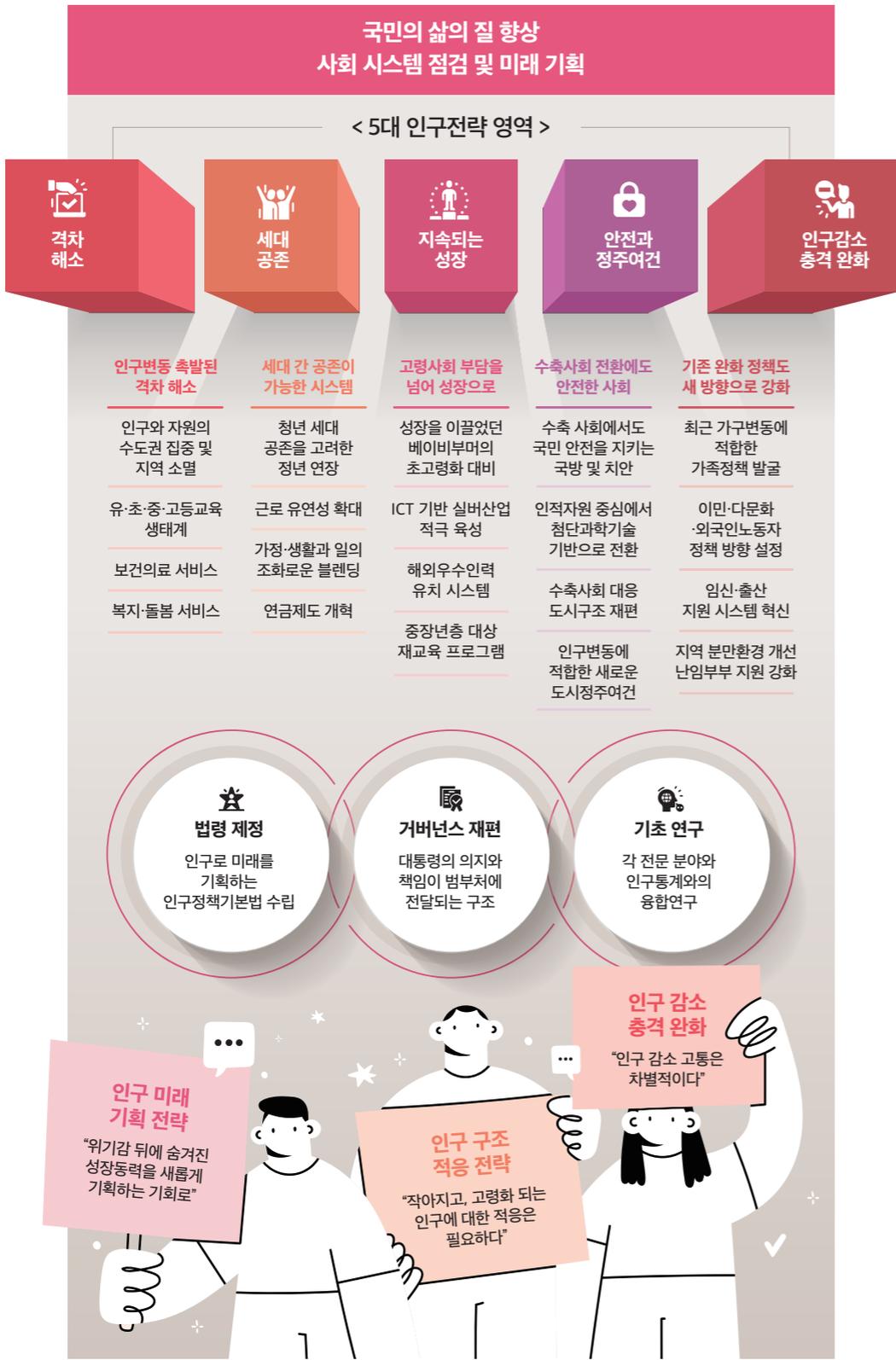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지난 16년 간 효과가 크지 않았음에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인구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는 ‘인구와 미래전략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인구 정책은 일반적으로 인구 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사회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인구로 인해 발생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정책은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성은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랐기에 이들을 완화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했다. 보육 혹은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들, 일과 가정에서 젠더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모두 완화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효과를 그리 내지 못하면서 인구는 더 빠르게 변동하였고, 그 결과 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게 되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25~59세 일하는 인구는 2021년부터 2032년까지 부산광역시 인구 규모인 324만 명이 줄어들 예정이고, 신규 노동시장에 들어 올 25~34세 청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650만 명에서 477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와 각종 정책은 대부분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에 마련된 것들이다. 인구가 이렇게 축소되고 또 다양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 과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 놓은 정책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만일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와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인구 정책은 완화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떤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또 어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획해야 하는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완화 위주의 인구 정책은 보육·양육 관련 정책들처럼 실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적응과 기획 중심의 인구 정책은 사업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전략에 더 가깝다.

윤석열정부의 인구 정책은 '인구전략'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전략은 후속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희망차며, 세대·지역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3) 논의 과정

인구와 미래전략TF는 9명의 인수위 내부 인원과 11명의 인수위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에는 인구학, 가족학, 건축학, 교육학, 국방학, 산업공학, 보건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와 1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2명의 정부 관료가 참여하였다.

TF는 4월 10일, 4월 13일 그리고 4월 17일 온라인 비대면 회의와 4월 20일 온라인 보고서 회람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본인 전공 분야의 입장에서 오늘의 인구변동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할 수 있을 법한 사항들을 망라하고, 왜 지금부터 인구 정책의 초점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4) 정책 대안

지난 정부까지 진행해 온 저출산 대응 중심의 인구 정책은 이제 효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 영역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청년들의 반감과 미래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도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인구로 미래를 기획하



는 윤석열정부의 인구전략은 아래와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를 기획하는 윤석열정부의 인구전략은 최소 5가지의 전략 영역을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각종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 시장에서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미 기정사실인 빠른 고령화는 미래 한국 사회에 위기가 아닌 기회이고, 부담이 아니라 지속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인구절벽이 심화되는 수축사회로의 전환에도 국민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완화정책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인구와 가구 변동에 맞추어 꼭 필요한 정책은 더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의 전략 영역과 앞으로 추가될 영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인구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형식적인 위원장에 그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사무처 중심의 인구 정책 관련 거버넌스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5) 기대 효과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물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본 TF가 제안하는 윤석열정부의 인구전략이다.

이 인구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민에게 변화될 미래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미리 알려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전략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12.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1) 추진 배경

최근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

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당선인은 선거기간부터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핵심은 자유무역질서의 균열과 공급망 교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분과위원회(이하 ‘외교안보분과’)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포괄적·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쟁점은 자유무역질서의 약화와 그에 따른 공급망 교란 및 블록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공급망 교란은 코로나19 대유행,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변화는 물론 주요국 간 안보 갈등 차원에서 취해지는 수출규제 등 경제의 안보 무기화에서 기인한다. 2021년 요소수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경제안보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높은 대외 경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체계를 관리하는데 소홀했다는 데 있다. 또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쓰이는 경제안보 핵심 우선관리 품목 20개 중 14개 품목의 중국 수입 비중은 70% 이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경제안보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이외에도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의체널이 취약하다는 점, 정부 내 경제안보 관련 효과적인 정책결정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도 경제안보를 약화시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3) 논의 과정

3월 26일 인수위 워크숍 계기 분과별 토론에서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토론에서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새 정부가 경제안보를 핵심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조기대응 체제 보완·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 강국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자원강국들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경제안보 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하에 민관이 쌍방향으로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3월 2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안보 문제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새 정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주요 현안 및 여러 가지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제안보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에 있어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 정책 대안

(1) 글로벌 공급망 관리 강화

안정적인 경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이를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꾀해야 한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외발 수급 교란에 대비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원자재와 산업 공급망이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중국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발 위기를 포함한 해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 탐지·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급망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국가 정부와 공급망 협력체계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응만큼이나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협의체를 통한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미국·일본·EU·호주 등 주요국과 ‘외교·경제 2+2 장관회의’ 신설, 그리고 여건이 무르익는다면 한·미·일 3국 간 ‘외교·경제 2+2+2 장관회의’ 개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자원과 기술 측면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협력 파트너국 선정 기준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핵심 여건을 갖추었는가에 더하여 규범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가꿀 수 있는 나라인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3) 경제안보 강화 협조체계 강화

경제안보 현안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기업을 제치고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관 간 쌍방향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에도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기대 효과

새 정부는 범정부적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제안보 충격에 대한 면역력과 회복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한편, 우리 기업들은 투자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안보 추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급망·환경·보건·인프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현안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면 세계 정치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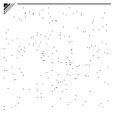
1) 추진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적 불확실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고, 4월 16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이에 외교안보분과위원회(이하 ‘외교안보분과’)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핵무기 투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또한 영변 원자료를 재가동하는 등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가용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등 한미 동맹의 능력을 통합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위성 기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과 고위력 미사일 타격 능력,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등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간 정례적 확장억제 연습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논의 과정

외교안보분과는 3월 22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3월 2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발전과제를 보고하였다.

4월 7일에는 당선인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이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여 연합사 일반현황,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 연합위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연합사령관을 포함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 개념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4월 19일에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국방부·합참의 핵심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했다. 지난 5년간 진행되어 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수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작전수행 개념, 향후 중요 전력 증강계획 등을 검토하고 북한 도발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외교안보분과에서는 국방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선정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①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②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한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③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④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등을 실천과제로 채택하였다.

4) 정책 대안

(1)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핵심시설에 대해 고위력·초정밀 타격 수단을 활용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보강하고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형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을 강화하고, 패트리어트·천궁 II·L-SAM·사드·장사정포 요격체계 등으로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배치는 우리 군이 연구개발 기획 중인 L-SAM II의 조기개발 가능성과 병행 검토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북한 도발 시 북한

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는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 전략사령부 창설로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의 창설이 필요하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사이버·전자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3)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를 조기에 전력화하여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최단시간 내에 배치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의 방어망을 보강하고,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4)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군 독자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심표적과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를 전력화하여 북한 핵심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유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하여 북한 중심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5) 기대 효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전자기·우주 등 확장된 전장 영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하이브리드 전쟁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소요를 창출하여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유연히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1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당선인의 공약이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업이다. 외교안보분과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였다.

2) 현황 및 쟁점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국가적 보상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병사들을 최저임금의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과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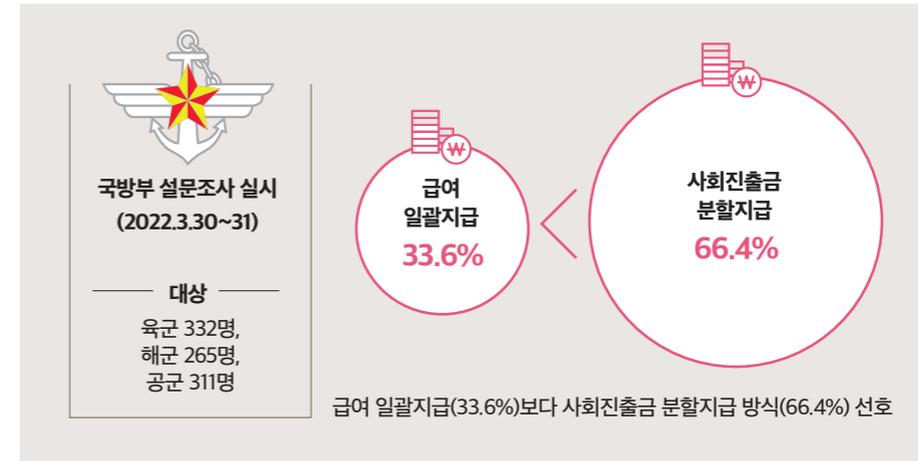
외교안보분과는 군 복무에 임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3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첫째,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하되 군 초급장교·부사관 등과 보수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병사 봉급 인상 시 상당 규모의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바, 이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안보분과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상황과 함께 병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사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전역 시 자산형성 및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회진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수위 차원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정책 대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병사 봉급 인상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마련 등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추진,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등의 어려움으로 병사 봉급 인상은 군 보수 역전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자산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병사 의견수렴 결과 다수가 급여와 사회진출지원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동시에 초급간부(중·소위, 중·하사)와 봉급 역전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대 효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아울러 전역 시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선순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1) 추진 배경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 엑스포이다. 등록 엑스포는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같은 인정 엑스포와는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당선인도 일찌감치 이런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의 의미를 통찰하여 부산 시민의 숙원인 엑스포를 국운을 걸고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3월 4일 부산 사하구 괴정역 거리 유세에서 피력하였다.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세계박람회 유치는 개최 준비과정 자체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박람회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선도 등을 추진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국력 신장과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 현황 및 쟁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TF 업무보고를 통해 3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①대내적으로 정부 유치역량은 강화하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박람회 유치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것, ②대외적으로는 회원국 득표를 위해 정교한 유치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것, ③최대 규모 국제 행사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박람회장 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3) 논의 과정

상기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 추진계획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쟁점이었던 유치체계 개편 관련 그간 유치위원회 조직이 가지고 있던 유치체계의 한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민간 합동 유치조직을 통해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유치교섭 전략 마련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경쟁국 동향과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지지 성향 등을 우선 파악하여 중점 교섭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교섭이 진행될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공적개발원조(ODA)나 산업협력 등 맞춤형 방식의 교섭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세 번째 쟁점인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해서도 유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갔다. 현지 실사가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만 재개발 사업, 부두 이전, 군사시설 이전 등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정책 대안

(1) 범국가적 유치동력 확보 역량 결집

외교안보분과는 첫째, 범국가적 유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유치지원 회의체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교섭 활동을 강력하게 조정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최상위 회의체 신설과 함께 세계박람회 유치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부서별로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둘째,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부처별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유치지원단을 신설하고 외교부 내에도 유치 교섭을 전담하는 유치교섭본부설치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셋째, 글로벌 기업들이 각자 특화된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하면서 유치 교섭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유인체계 마련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2) 대외유치 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첫째, 국가 간 유치경쟁이 2022년도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박람회 유치교섭 전략 로드맵을 실행단계 수준까지 마련한 후 민관 합동으로 유치교섭전략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둘째, 외교부 내 전담조직과 상황실의 즉시 가동 운영 방침을 수립하였다. 2023년 말 개최장소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국가, 도시별로 유치 총괄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에 인수위 기간에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주요 회원국에 박람회 유치 어젠다를 지속 제시하였고 이러한 외교활동이 앞으로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였다.

(3) 안정적 유치 기반 조성

첫째, 안정적인 박람회장 예정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최 예정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예정부지 내 이전에 검토되고 있는 부두와 시설도 차질 없이 이전을 추진해나간다는 기본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항만과 철도 부지, 낙후된 원도심 통합재개발 사업이 중국에는 글로벌 해양산업의 중심지 육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둘째, 개최 예정지에 인접한 군사시설이 지리적으로 도시공간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 개발을 저해해왔다는 점과 세계박람회 행사 기간에도 교통 장애를 만들어내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고위급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적기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속한 절차 추진에 대한 고민과 건설 과정에서의 지연 우려 부분을 검토하면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5) 기대 효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 규모의 행사와 그 의미를 돌이켜 보면 19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국민 단합과 자긍심의 열기를 불태웠다.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자 국가·지역·일반국민은 물론 경제·문화·사회적 역량이 결집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1) 구성

2022년 3월 29일 ‘청년이 듣는다, 찾아가는 인수위’라는 슬로건 아래 제20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였다. 기획조정분과 내에 설치된 청년소통TF는 인수위 각 분과에 배치된 청년 실무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활약했던 장예찬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았다.



2) 기본 방향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청년소통TF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선인은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청년소통TF는 교육·일자리·주거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주제를



웹툰작가 현장 간담회(2022.4.12)

두고 부처 관계자, 정책 전문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실의 요구들이 제도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청년소통TF의 모든 활동들은 권역세 인수위 부위원장,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직접 보고되어 새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활동 내용

(1) ‘청년이 만드는’ 국정과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실천과제	대표 세부내용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원가주택, 청약제도 개선
	청년 취업지원 혁신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청년 창업 기반 강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국가장학금 대상, 지원금 확대
	공정 기반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취약청년 출발 지원	NEET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청년보좌역 설치·운영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맞춤형 원스톱 플랫폼개발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자격제도 실무경력 요건 완화

현장과 책상을 넘나들며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청년소통TF의 노력은 청년 파트가 국정과제 '20개 약속' 중 '17번째 약속'으로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청년'이 상위 20대 국정과제 내 독립된 과제로 포함된 것은 인수위 역사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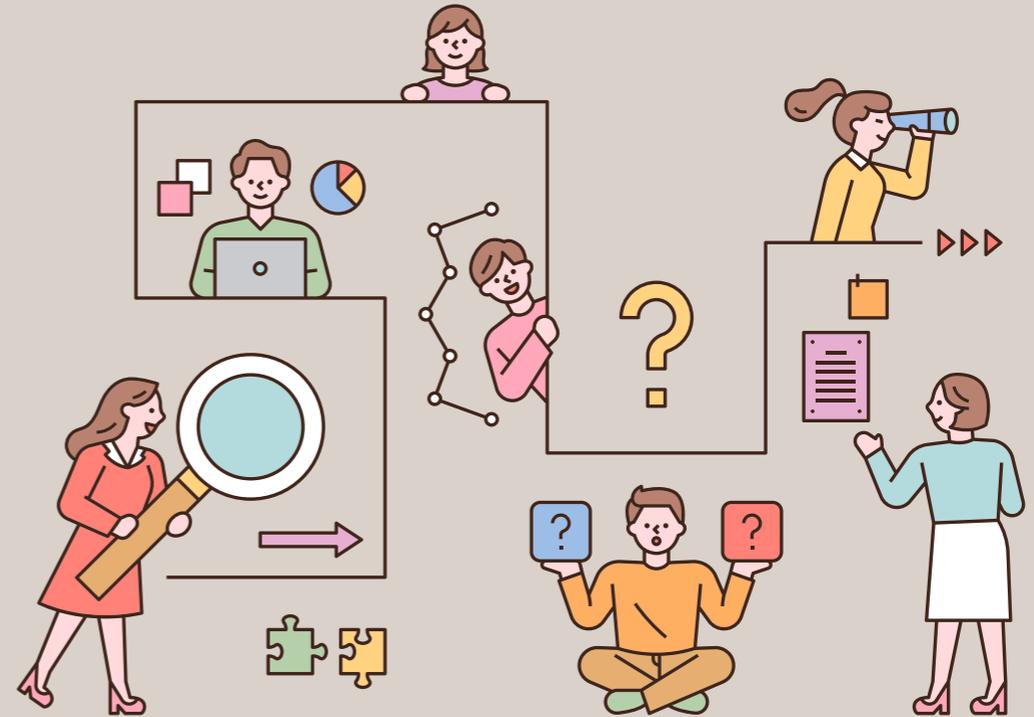
(2) '청년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청년소통TF는 주요 활동으로 주 2회 각 분야 국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을 청취하였다. 또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라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지역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경과가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보고되었다.

청년소통TF 정례브리핑	
1차 (4.6)	1. 청년도약준비금 지원
	2.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오프라인)
2차 (4.13)	1. 청년도약 디지털 베이스캠프 추진
	2. 지방청년의 기업·현장 경험 참여 기회 확대
	3. 취업 및 스타트업 관련 박람회 지방 개최 추진
	4. IP(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5. 기업 주도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플랫폼 등 대기업과 창작자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지원
3차 (4.20)	1.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 개편
	2.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4차 (4.27)	1. 각 부처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 및 청년자문단 구성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및 청년 위촉비율 상향, 비대면회의 활용으로 전국 청년참여 독려
	3. 10만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부처·지자체 청년 패널로 활용
	4.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신설 및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① [은둔청년 간담회] "그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소통TF는 '청년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의 첫 만남으로 탈은둔청년 공동생활공간



'안무서운회사'(2022.4.3, 서울 강북구)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은둔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청년의 사회 재복귀를 도울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청년도약베이스캠프'(청년정책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온·오프라인 정책 플랫폼) 및 '청년도약준비금'(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청년멘토링, 일경험 프로그램 경험을 제공하는 바우처) 등을 청년소통TF 1호 국정과제로 도출하였다.

② [지역 청년 일자리 간담회] "지역 청년들에게도 공정한 일자리 기회"

청년소통TF의 다음 방문지는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 논의를 위한 부산청년센터(2022.4.10, 부산 중구)였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청년소통TF는 지역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청년 특화 취업지원 혁신'(고용노동부 민관 협력 프로그램 대상 지방기업·청년으로 확대, 청년친화 기업에 ESG 지원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수립하였다.

③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정책 공백 세심한 관심으로"

청년소통TF는 '에코로키즈 카페'(2022.4.11,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만났다. 면담을 통해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정부부처 관계자와 정책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④ [K-콘텐츠산업 진흥 간담회] “제2의 ‘오징어 게임’, 문화산업 생태계 혁신으로부터”

청년소통TF는 K-콘텐츠 한류를 이끌어가는 문화산업계 현장을 들여다보고자 ‘박태준 만화회사’(2022.4.12,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웹툰업계 전문인력 부족 현실을 짚어보고, 콘텐츠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콘텐츠 분야 미래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창작자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내용이 전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⑤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스타트업 규제완화 통한 미래 인재양성”

마지막으로 청년소통TF는 스타트업 ‘닥터나우’(2022.4.18, 서울 강남구)와 ‘코드스테이츠’(2022.4.20,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였다. 각각 바이오·헬스, 코딩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 소속 청년들과 만나 글로벌 시장 패권 획득을 위한 규제혁신 및 디지털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신산업 분야 이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로 2022년 내 추진)의 전면개편과 ‘네거티브 규제전환’(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며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일자리 현장 간담회(2022.4.10)



청년일자리 현장 간담회(2022.4.10)

(3) ‘청년이 소통하는’ 인수위

①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국민과 대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은 국민이 자유롭게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적으로 인수위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었다. 청년소통TF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올라온 총 5만 2,000여개의 국민제안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사회복지문화 등 각 분과에 배치된 청년 실무위원들이 전문위원과 소통하며 그 적정성·이행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② 청소년·청년 오픈 컨퍼런스 개최

청년소통TF는 전국 100여명의 청소년·청년과 함께 ‘이청득심(以聽得心): 청소년·청년 오픈 컨퍼런스’(2022.4.24, 정부서울청사)를 개최하였다. 청소년·청년과 함께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세대에 닿아있는 5가지 주제를 두고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다.

(4) ‘청년이 참여하는’ 국정운영

인수위 청년소통TF에 속한 청년 실무위원들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국정과제 수립에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 즉, 청년소통TF가 일종의 메신저가 되었다. 이에 새 정부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과 소통하면서 기존 정책설계 방식을 검증하고, 자칫 놓칠 수 있는 맹점을 파악하는 데 청년의 국정참여가 지속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기획조정본부 청년소통TF 관련 브리핑(2022.3.29)

그리하여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청년보좌역’의 제도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수립하였다. 각 부처에 2030 청년 사무관을 ‘청년보좌역’으로 시범 배치하고, 20명 내외의 ‘청년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발굴·개선하며,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차기 국정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5) ‘청년이 발표하는’ 청년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

청년소통TF는 ‘청년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5.2,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이 행사에서 장예찬 단장은 국정과제 20개 약속 중 ‘17번째 약속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복지·일자리·주거·국정참여 등에 관한 새 정부 청년정책을 최종 공개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각 분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인수위원 전체회의’(5.3)에서 장예찬 단장은 “역대 정부 최초로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이 포함됐다”며 “한달간 여섯 곳의 전국 현장을 다니며 이전 정부에서 다루지 않던 분야도 국정과제로 발굴할 수 있었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국민 다수와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정부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4) 평가 및 제언

청년소통TF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출범하였다. 그간 정치 영역에서 ‘청년’을 주제로 호명했던 시도들은 계속 있었으나, 정작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이 과소화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청년소통TF는 현실 청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요구들을 다각도에서 조명한 후, 이를 법·제도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청년소통TF의 가장 큰 성과는 ‘청년’이라는 주제를 독립적인 국정과제로 수립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정책은 기능이 아닌 대상 중심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통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년소통TF는 우선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들을 ‘청년’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하나로 묶는 작업에 집중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높였다.

아쉬움도 있다. 청년소통TF가 ‘청년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각 분과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TF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기동대(Task Force)라는 형태를 심분 활용해 청년 실무위원들이 인수위와 현장을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이점도 있었다.

윤석열정부의 선봉대라는 마음으로 국민께 진심을 다한 청년들의 50일, 청년소통TF였다.



04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제1장 활동 방향

제2장 국정운영 기조

제3장 주요 연설문

제4장 당선인 주요 일정

04.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제1장 활동 방향

01.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민생 안정'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맞춰 현장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민생 행보에는 선거기간에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2022.3.14)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출근한 첫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현장 행보를 시작하였다. 남대문시장은 지난해 11월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방문한 현장이기도 하다. 남대문시장을 다시 찾은 것은 민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선거 당시 상인들과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당선인은 “시장이야말로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 “시장 상인들이 중산층으로 튼튼하게 우리 사회를 받쳐줘야만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 상인들의 사정을 살피는 일도 잊지 않았다.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2022.3.14)

당선인은 비과학적 영업제한 철폐,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인수위에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반드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2022.4.12)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당선인은 선거기간 뜨겁게 성원해준 시장 상인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민생 안정을 재차 약속하였다. 당선인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리 사회의 튼튼한 허리인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당선인의 시장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국정에 녹여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울진·동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2022.3.15)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당선인은 산불피해 규모와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피해가 큰 민가를 둘러보며 안타까운 탄식을 삼켰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주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을 다독였다.

당선인은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또 다른 산불피해 지역인 동해로 이동한 당선인은 동해시 묵호항 등대감성마을에서 산불피해 이재민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피해 현황을 살핀 당선인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봉사활동(2022.3.30)

가기 힘든 주민들에게 대체 주거를 제공하는 대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을 당부하였다.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봉사활동(2022.3.30)

3월 30일에는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았다. 당선인은 2월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후 명동밥집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순택 대주교는 당선 후 잊지 않고 봉사활동에 나선 당선인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를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잘 챙겨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당선인은 통합의 정치를 약속하였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분들께 먼저 손 내밀고, 힘이 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GTX 및 1기 신도시 현장 점검(2022.5.2)

수도권의 민생 현장도 찾았다. 당선인이 GTX-A, 1기 신도시 현장을 찾은 것은 안정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주거 환경 개선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기 일산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살피고, 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도 재차 강조하였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02.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선거기간 경제 비전에서 민간 주도 '역동적 혁신성장'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겠다는 당선인의 경제철학은 현장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제계, 노동계, 청년들과 소통하며 민간의 도전과 재기의 기회를 막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배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2022.3.21)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2022.3.21)

경제 6단체장과 만난 당선인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이 자리하였다. 당선인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라며 민간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제 6단체장들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2022.3.21)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2022.3.31)

당선인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다른 나라는 최고급 신발을 신겨서 내보내는 반면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내보내는 격”이라면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다.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2022.3.31)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과 만남도 이어졌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GTEP)’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을 만나 “앞으로 청년 여러분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새 정부도 청년 무역인을 키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년들은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업무에 참여하며 느낀 소감, 새 정부에 전하는 청년 무역인의 꿈과 바람 등의 메시지를 당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청년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였다.

또한 당선인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2022.4.15)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 한국노총 2022 대선정책토론회 영상 메시지(2021.11.24)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저 역시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가겠습니다.”

-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2022.4.15)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한국노총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나 사회, 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초저성장 경제 기조,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경제의 초석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당선인은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는 진심을 전하였다.

전주 국민연금공단 방문(2022.4.20)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마음껏 와서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 전주 국민연금공단 방문(2022.4.20)

당선인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어 새만금개발지구에 대한 현안을 보고 받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 여기에 국내의 기업을 유치해 개발을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



전주 국민연금공단 방문(2022.4.20)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2022.4.21)

이라며 활성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영암 대불산업단지 방문(2022.4.20)

당선 후 전남 첫 방문지로 대불산업단지를 찾은 당선인은 조선산업 현장부터 살폈다. 오랜 침체기를 거친 대불산업단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봇대로 인해 대형 선박 블록 운송에 불편을 겪는 관계자의 호소가 이어졌다. 당선인은 전선,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기업인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불산업단지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2022.4.21)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한국 원전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2022.4.21)

선거기간 내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창

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은 원전 부품업체를 방문해 그 의지를 확고히 전하였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조성되어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거점이자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선인은 “탈원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원전 뿌리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였다. 이어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거점”이라며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 진정한 지방시대와 국민통합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하였다. 선거기간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고, 당선 이후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이어진 것이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2022.3.24)

“국가발전은 결국은 지방발전에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2022.3.24)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확고히 피력하였다.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하는 균등 지원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는 방식임을 강조하였다.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지방시대를 열 어갈 청사진 마련을 주문하였다.

홍성 내포신도시, 음성 혁신도시 현장 점검(2022.4.28~29)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당선인은 4월 28, 29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와 충북 음성 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았다.

내포신도시를 방문한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문제에 깊이 공감하였다. 양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2022.4.6)

조 총남도지사는 “충청남도는 새 정부와 국정목표를 공유해가겠다. 당선인의 충남 방문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망 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집중적으로 약속하였다. 공약을 잘 이행해 충남이 미래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튿날 방문한 음성 혁신도시 현장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전하였다.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에 현재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정주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업 유치는 물론 대학, 공공기관, 기업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2022.4.6)

“시도지사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2022.4.6)

당선인은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3대 전략인 ‘공정한 접근성’,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2022.4.1)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이 강조되었다. 당선인은 여러 차례 시·도지사와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2022.4.1)

“서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십시오.”
-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2022.4.1)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당선인은 “마음 속에 이미 국민통합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국민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2022.4.3)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2022.4.3)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2022.4.19)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전하였다. 추념사를 통해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도 다잡았다. 특히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선인은 “제주4·3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제주 4·3의 의미를 기렸다.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2022.4.19)

당선인은 62주년을 맞은 4·19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았다. 당선인은 민주영령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오늘날까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온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위로를 전하였다.

새 정부는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해나갈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당선인은 “우리의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된 4·19정신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있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4·19혁명 유공자 예우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04.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선거기간 외교·안보 비전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연대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 통화를 하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빈틈없는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 의지가 당선인의 행보에 반영되었다.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방문(2022.4.7)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캠프 험프리스' 방문(2022.4.7)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당선인 가운데 최초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 관리상황실을 둘러보며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의 브리핑을 받은 당선인은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기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 방안, 한미연합 대비태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2022.5.6)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



당선인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2022.5.6)

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미·일·중 정상과 통화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전화 통화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통화(2022.3.10)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선인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당선인은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당선인 또한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통화(2022.3.11)

당선인은 3월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고, 당선인은 “축하 전화에 감사하다. 특히 3·11 동일본 대지진 1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가족분들,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이고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2022.3.25)

3월 2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전화를 건넸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선인이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히자, 시 주석은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통화 전날 발생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04.

정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제2장 국정운영 기초

01. 국익과 국민 우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 7개 분과(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와 2개 특위(국민통합·지역균형발전), 기획위원회의 간사들로 구성된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며 국익과 국민 우선의 국정을 강조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정운영 기초는 국익과 국민을 우선으로 두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인수위 현판식 및 전체회의(2022.3.18)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수위 현판식 및 전체회의(2022.3.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3월 18일, 당선인은 인수위 현판식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2022.3.18)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국정과제 수립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각 분과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조율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1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3.22)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새 정부에서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초저성장으로 빚어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선인은 “초저성장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정책, 이를 뒷받침할 노동개혁과 교육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구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3.29)

제2차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한 당선인은 분과별 유기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선거공약의 핵심 내용과 배경 설명이 각 분과에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민과 약

속인 공약이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재차 전하였다.

당선인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것도 실제 제도 안에서 시행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였다. 나아가 저성장, 양극화, 저출생 등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가 많은 만큼 각 분과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제3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4.5)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돼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3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4.5)

분과별 국정과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당선인은 선거공약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거듭 점검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길 바란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4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4.15)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 제4차 인수위 간사단회의(2022.4.15)

당선인은 지방 행보 이후 열흘 만에 제4차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하였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인수위 국정과제 전달식(2022.5.3)

인수위 국정과제 전달식을 통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선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애쓴 인수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하였다.

이어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02.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초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여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국가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뿐만 아니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힌 바 있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 방문(2022.4.20)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 방문(2022.4.20)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한 당선인은 광주와 인공지능 집적 단지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였다. 당선인의 광주 방문은 AI와 인연이 깊다. 정치를 시작한 후 첫 광주 방문에서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찾았고, 2021년 12월에 한 차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찾은 바 있다. 당선 후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다시 찾아 “광주는 일찌감치 AI 대표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고,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지원만 남아있다”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미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데이터와 AI 기술에 있다고 강조한 당선인은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재 양성과 R&D,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주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 방문(2022.4.20)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방문(2022.4.25)

AI 센터를 통해 미래에 백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방문(2022.4.25)

당선인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 개발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특히 “작년 가을, 안동 공장을 방문해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면서도 이게 언제 될까 싶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밝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연구원을 둘러본 당선인은 “국가의 엄청난 잠재력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우리나라의 경제·보건·안보가 다 담겨있다”며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 현장 방문(2022.4.29)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반도체는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 현장 방문(2022.4.29)

당선인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찾아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반도체 기술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진단키트 상용화와 항암 진단 나노센서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며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당선인은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

축해서 대학과 기업의 연구성과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구 개발 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실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대책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KAIST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당선인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결국 과학기술 밖에는 없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입국(科學立國)’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현장 방문(2022.4.29)

“오창이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연구중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현장 방문(2022.4.29)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당선인은 4월 29일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현장을 다시 방문하였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살핀 당선인은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 연구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고성능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된다면 반도체, 소재, 바이오 분야에 활용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였다. 새 정부에서 지자체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2022.4.22)

선거기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공약한 당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2022.4.22)

인은 4월 22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성공적 유치에 힘을 불어넣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또는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만큼 유치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당선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인수위에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TF를 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부산광역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기업인들을 독려했다.

03. 연대와 책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 정상과 통화 또는 주요국 대사 접견에서는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1)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 통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통화(2022.3.14)

당선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존슨 총리는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당선인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즉위 70주년의 이정표를 세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화답하였다. 이어 양국의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동반자 관계를 배터리,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당선인과 존슨 총리는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미국, 유엔 안보리와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통화(2022.3.16)

당선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당선인은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1만 7,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전한 나라로, 우리 국민이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당선인과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격상된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확대해 탄소중립, 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을 비롯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리슨 총리가 “조만간 서울을 방문해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하자 당선인도 “이른 시일 내 뵙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통화(2022.3.1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통화(2022.3.17)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가 이어졌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역내 선도국 인도와 외교 안보의 실질적 협력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내년 두 나라의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계기를 맞아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이에 모디 총리는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당선인 임기 동안 우호 증진 관계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모디 총리는 “당선인을 직접 환영할 기회를 희망한다”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한국어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당선인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총리님과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유익한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한다”며 통화를 마쳤다.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 통화(2022.3.23)

당선인은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주석의 전화를 받았다. 당선인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자고 전하였다. 이에 폭 주석은 방한을 희망하며, 당선인의 베트남 방문도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한 당선인은 작년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베트남의 즉각적 협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폭 주석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경제, 노동,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5세대 이동통신



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선인과 폭 주석은 북한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및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2022.3.29)

당선인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통화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통화(2022.3.30)

당선인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였다. 당선인은 루터 총리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한·네덜란드 양국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우호 관계를 지속·확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특히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 선도국가인 만큼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으며, 긴밀한 양국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적당한 시기에 네덜란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하였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통화(2022.3.31)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축하 전화에 당선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당선인은 한국과 EU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협력해 오면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 보건·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과 EU가 국제사회 주요 도전 과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였다. 당선인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선인 취임 후 이르면 올 하반기에 한국에서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통화(2022.4.8)

당선인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통화하였다. 당선인은 스포츠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개발 증진에 기여해 온 IOC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총회와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될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흐 위원장과 IOC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IOC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가겠다고 밝혔다. 당선인과 바흐 위원장은 2022년 10월 국가올림픽연합회 총회를 계기로 서울에서 회동하기로 하였다.

2) 주요국 대사 접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2022.3.11)

당선인은 3월 11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였다. 당선인은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시진핑 주석의 축하 서한을 전달받았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한 시 주석의 축전에 윤 당선인도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어진 면담에서 당선인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책임있는 세계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해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하였다.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2022.3.11)

같은 날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였다. 당선인은 한미 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경제와 기후협력 등의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델 코스 대사대리는 주한 미국대사관 전체를 대표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과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주한 미국대사관 모든 직원이 새로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한다고 밝혔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접견(2022.3.24)

당선인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토르 대사는 이츠하크 헤르츠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한을 전달하였다. 당선인은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다.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하였다.

당선인은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첨단 과학기술에 관심이 크다고 전하며 양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연구개발국인 만큼 로봇과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르 대사는 한국과 함께 정보,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당선인과 토르 대사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역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2022.3.28)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2022.3.28)

당선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이 진행되었다. 당선인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변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로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하였다.

당선인은 특히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와 관련,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 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주한 걸프협력회의 대사단 접견(2022.4.1)

당선인은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5개국 대사단을 접견하였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는 걸프 연안 6개국(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간 협력체로 이날 접견에는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대사,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대사, 알-사디 주한 오만대사, 알-쿠와리 주한 카타르대사대리, 알-사마히 주한 UAE대사대리가 참석하였다. 당선인은 “라마단을 앞두고 주한 GCC 국가 대사단을 만나게 되어 더욱 의미 깊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GCC 국가가 에너지 및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GCC 국가 간 에너지 분야의 공고한 유대를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취임하면 GCC

국가들과 신재생에너지, 국방·방산, 농업,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주한 GCC 국가 대사단은 한국과 GCC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과 아랍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 접견(2022.4.6)

당선인은 4월 6일 오전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하였다. 당선인은 먼저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한 뒤, 오랜 세월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돈독한 협력을 이어온 양국이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산업에 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하였다. 라이펜슈틀 대사는 공감의 뜻을 밝히고 주한대사로서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당선인과 라이펜슈틀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공감대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접견(2022.4.15)

4월 15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접견이 진행되었다. 당선인은 크룩스 대사가 북한 주제 대사에 이어 주 대한민국 대사로 발령받은 것을 축하하였고, 이에 크룩스 대사는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였다. 이날 접견에서 당선인과 크룩스 대사는 한국과 영국 간 우호 협력관계 강화에 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접견(2022.4.27)

4월 27일 진행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접견도 건설적 협력관계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연임에 성공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르포르 대사는 20년 전에 양국이 고속철도, 원자력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3) 기타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접견(2022.4.27)

당선인은 같은 날 오후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하였다. 풀너 창립자는 한미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헤리티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미국 정치를 발전시켰다며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2022.4.27)

당선인은 연이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였다. 당선인은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정의를 내려준 것이 우리가 AI와 로봇,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슈밥 회장은 “당선인이 WEF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기쁘다”며 “WEF는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0개의 연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국에도 4차 산업혁명 연구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04.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 약속은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재방문을 약속한 곳을 다시 찾으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또한 당선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 번째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2022.4.13)

경청식탁 시리즈(2022.4.13/4.19/4.27)

당선인은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과 식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첫 번째 경청식탁은 4월 13일 '지혜를 구합니다'라는 주제로 국가 원로들로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구하였다.

4월 19일 경청식탁에는 후보 시절 찾았던 울진 산불 현장 이재민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피해자 등 우리 사회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초청되었다. 용산가족공원에 오찬 장소를 마련한 당선인은 1월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자녀를 위로했고, 산불피해 주민에게는 임시주택이 잘 배정되었는지를 물으며 지원 현황을 챙겼다.

4월 27일 마지막 경청식탁은 체육·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어려울 때마다 뛰어난 활약으로 국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준 스포츠와 예술 분야 종사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2022.3.20)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3월 20일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공원 조감도'를 공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두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며,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2022.3.20)



안동 유교문화회관 방문(2022.4.11)

당선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 국민께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앞으로도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방문(2022.4.11~12)

당선인은 4월 11일, 12일 양일간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다.

상주 중앙시장(4.11) | 상주 중앙시장을 찾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추운 날씨에도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해준 상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부터 전하였다. “이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안동 유교문화회관(4.11) | 2021년 가을, 안동 유림을 찾은 당선인이 다시금 안동 유교문화회관을 찾았다. 당선인은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조상의 뿌리와 문화를 제대로 배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하였다.

안동 중앙신시장(4.11) |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은 당선인은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몸 바쳐 노력하겠다. 그동안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



마산 어시장 방문(2022.4.21)

다. 시민들의 격려를 잊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포항 죽도시장(4.11) |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 당선인은 대구·경북이 정치적 고향이라며 시민들의 환영에 뜨겁게 화답하였다. 당선인은 “과거 대구에 근무할 때도 죽도시장을 종종 찾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찾았다. 열렬한 지지가 큰 힘이 되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말은 하나하나 챙겨서 전부 잘 이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 동성로(4.12) | 당선인이 초임 검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구에서는 더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오면 늘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며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일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경남 방문(2022.4.21~22)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부산·경남 지역 방문에서 당선인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진주 유등시장(4.21) | 진주 유등시장을 찾은 당선인은 “국민을 잘 모시고,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 함을 선거운동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며 헌법정신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대전 중앙시장 방문(2022.4.28)

마산 어시장(4.21) | 마산 어시장으로 이어진 행보에서도 국민의 뜻을 강조하였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직을 시작해 5년 후에 청사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보여준 지지와 기대를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직을 수행하겠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부산 반송큰시장(4.22) | 부산 반송큰시장을 찾은 당선인은 “경제번영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시장의 민생현장에 있다는 것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충청 방문(2022.4.28~29)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청 지역 행보에 나선 당선인은 민심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시장으로 향하였다. 4월 28일, 29일 양일간 충청권 민심에 귀를 기울인 당선인은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발전을 약속하였다.

대전 중앙시장(4.28) | 당선인은 넉 달 만에 대전 중앙시장을 다시 찾아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의 마음부터 전하였다.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제 뒤에 늘 대한민국 국민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4.29) |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민생 현장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여러분이 잘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또 자유민주



강릉 중앙시장 방문(2022.5.4)

주의가 여러분을 잘살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5년간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환영에 화답하였다.

경기·강원 방문(2022.5.2/5.4)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역 방문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국정운영의 원칙과 소신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경기 용인 중앙시장(5.2) | 선거운동 후 두 달 반 만에 용인 중앙시장을 다시 찾은 당선인은 상인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부터 전하였다. 당선인은 “새 정부의 기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와 약자의 보호,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국정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민생을 잘 살피겠다”고 강조하였다.

강원 강릉 중앙시장(5.4) |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한 당선인은 “강릉의 아들, 강릉의 외손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찾아왔다”며 반갑게 인사하였다. 강릉에서의 어릴 적 추억을 언급하며 강원도 발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강원도가 새로운 경제특별도로 성장하도록 복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멋진 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하였다.

04.

정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제3장 주요 연설문

01. 당선 인사 (2022.3.10)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벽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 집니다. 국민께서는 26년 간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



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2022.3.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으나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쓸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본부에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 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젠테이션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2022.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환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집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곳 제주4·3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 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행사 (2022.4.7)

올해 66돌을 맞는 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기념 축하연 자리를 마련해주신 임채청 신문협회 회장님,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 김동훈 기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취재 현장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 집필을 향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다양성의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지식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요체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와 문

화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 강화에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66회 신문의 날을 대단히 축하드리며 언론인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05.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2022.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이 6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곳 국립4·19민주묘지에 모인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외침, 그리고 목숨보다 뜨거웠던 불굴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상처로 오늘날까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우리의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된 4·19정신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



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설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나아갈 길을 밝혀준 4·19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거룩한 희생을 바치신 4·19 혁명 유공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04.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실한 약속 |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제4장 당선인 주요 일정

일자	내용
3.10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화 통화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당선 인사
3.11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전화 통화 -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3.13	-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3.14	- 서울 남대문시장 방문 상인연합회 간담회 및 오찬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전화 통화
3.15	- 울진·동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 및 이재민 위로 방문
3.16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전화 통화

일자	내용
3.17	- 모디 인도 총리 전화 통화
3.18	-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
3.20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
3.21	-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
3.22	- 인수위원회 간사단회의
3.23	-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 전화 통화
3.24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및 임명장 수여식 -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접견
3.25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화 통화
3.26	- 인수위원회 워크숍
3.28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
3.29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화 통화
3.30	-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봉사활동 -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전화 통화
3.31	-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4.1	-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4.3	-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4.4	-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4.5	- 인수위원회 간사단회의

일자	내용
4.5	- 인수위원회 간사단회의
4.6	-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 접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 제66회 신문의날 기념 축하행사
4.7	- 캠프 험프리스(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방문
4.8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전화 통화
4.11	- 구미 국가산업단지 방문 - 포항 죽도시장 방문
4.12	-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4.13	- 첫 번째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4.15	-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4.17	-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4.18	- (사)서울국제포럼(SFIA)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
4.19	-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 두 번째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4.20	- 광주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 방문 - 영암 대불산업단지 방문
4.21	- 광양제철소 방문 -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
4.22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대회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건설현장 방문
4.25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방문

일자	내용
4.27	-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접견
4.28	-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다례제 - 내포신도시 현장 점검 -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4.29	-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 현장 방문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현장 방문
5.2	- GTX-A 터널구간 공사현장 점검 -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 아파트 방문
5.3	- 제32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전달식
5.4	- 강원 철도 인프라 점검 - 원주 부론산업단지 방문
5.6	-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 - 인수위원회 해단식
5.10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The 20th 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y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05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제1장 개요

제2장 추진 과정

제3장 취임행사

제4장 취임사

05.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 대통령 취임행사



제1장 개요

01. 취임행사 개요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는 ‘국민이 주인 된 국민의 나라’로 가는 윤석열정부의 첫걸음을 국민과 함께 구현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축복과 환영 속에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약 4만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조출하고 감소한 취임식이 되도록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바람에 따라 취임행사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소박한 국민축제의 장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이 함께하며 진정한 국민화합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

국민이 소망하며 염원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자 하는 대통령당선인의 뜻을 담아 취임행사의 기조와 맥락은 ‘취약계층과 동행’과 ‘국민통합’으로 정하였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루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드는 역사적인 첫날이 취임행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02. 기본 방향

당선인은 3월 15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하였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취임식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국민여론, 전문가 자문과 회의·토론을 거쳐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는 새 정부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할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기 위하여 산하에 취임사준비위원회(위원장 : 이각범), 취임식기획위원회(위원장 : 김수민), 국민통합초청위원회(위원장 : 김장실)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2022.4.24)

1)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취임식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취임식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세부 기획을 추진하였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차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취임식에서 구현되도록 준비하였다.

2) 국민 대통합과 국민 소망이 이루어지는 취임식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갈등과 분열의 늪을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유족의 초청이 이루어졌다. 일반국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신청도 받았다.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민 등을 특별초청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질 어린이와 꿈나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도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소망이 대통령 임기 중에 꼭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랐다.

3) 겸손하고 격조 있는 취임식

국민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내실 있는 취임행사를 갖자는 당선인의 뜻에 따라 조출하되 국민의 축복과 성원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호화롭지 않은 무대를 꾸미고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취임 경축연회와 외빈 만찬 등에 있어서도 의전 관례를 지키면서 국내외 각계 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합창단(2022.5.10)



제20대 대통령 취임식(2022.5.10)

표인사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겸손한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4)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역사적인 행사를 앞두고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감염자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취임식에 초청된 인원은 4만 1,000명으로 이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취임식이 되었다는 평가다.

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

취임준비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영상에 담도록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국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 공모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취임식 캠페인에서 취합된 결과물은 취임식 본 행사에서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취임식에서 모두 함께 한 합창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가자는 우렁찬 울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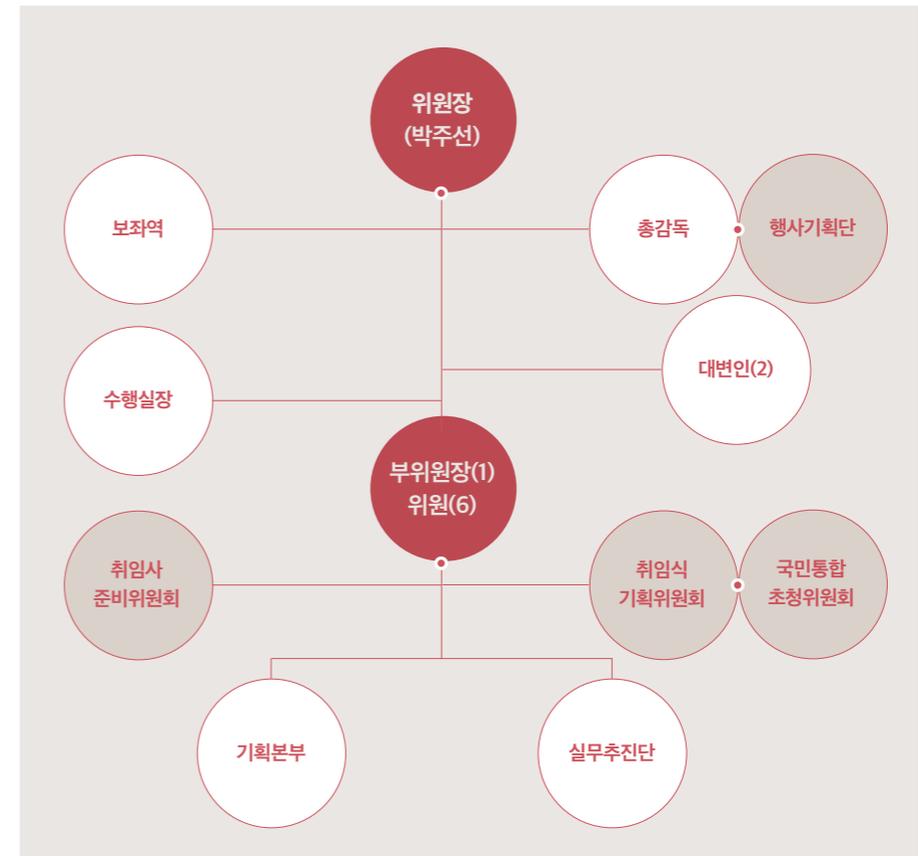
03. 조직 구성

취임준비위원회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취임행사 운영 및 기본 방향 추진을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였다.

1) 취임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부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국회의원과 당선인 특보인 박수영 국회의원, 김희곤 국회의원을 포함해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도훈 당선인비서실 특보 겸 홍익대 교수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상임자문위원으로 김선교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2명이 선임되었다. 이도훈 위원이 총감독을 맡아 기획사와 함께 행사의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협의·추진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 조직도



취임준비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취임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극대화하였다. 취임사준비위원장에는 김영삼 전(前) 대통령 시절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에는 이재호 전 동아일보 논설 실장을 임명하였다. 취임식기획위원장에 김수민 전 국회의원을, 부위원장에 홍대순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하였다. 국민통합초청위원장에 김장실 전 국회의원을, 부위원장에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임명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의 실무 총괄 등을 담당하는 기획본부는 경규상 본부장 및 이창호 기획실장 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안혜진·김연주 대변인을 두어 언론 브리핑과 공식 입장 및 대국민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취임준비위원장의 업무추진을 보좌·수행하도록 김상인 보좌역과 채명성 수행실장을 두어 위원회 활동의 실무적 기능도 제고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 조직이 구성되고 두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주선 위원장의 열정과 노력, 온 국민의 성원과 애정 그리고 인수위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사 관계자 등의 긴밀한 협력과 준비 덕분에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거행되었다.

2) 정부

정부는 대통령 취임행사를 위하여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취임행사실무추진단’과 ‘방송기획합동위원회’를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의전행사 주무부처로서 2021년 하반기부터 취임행사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산안은 제18대 대통령 취임행사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연 3%)을 고려해 편성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취임준비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박주선 위원장에게 행사 추진 방향과 일정을 보고하고 취임식 준비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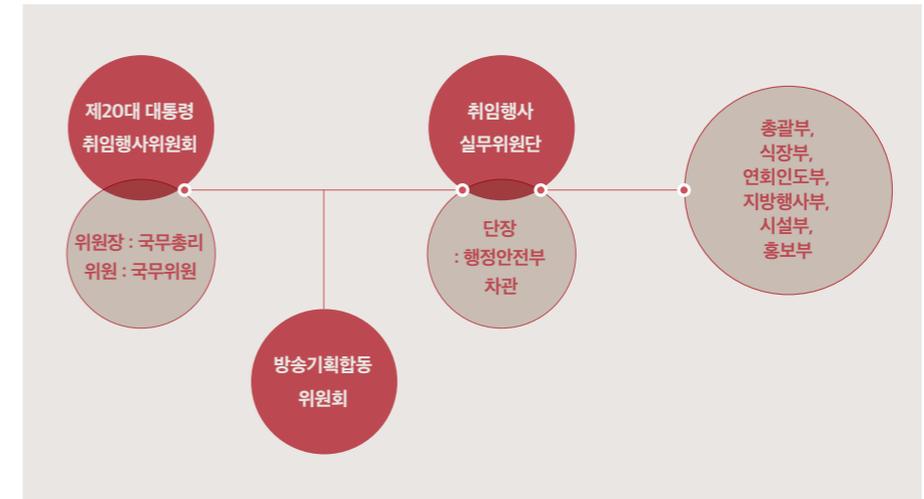
3) 행사 기획사

‘(주)HS에드’는 3월 28일 취임행사 기획사로 선정된 이후 취임준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반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4) 기타 관련 부서 협조

외빈·교포 초청 업무뿐만 아니라 취임식 당일 외빈 초청 만찬, 재외동포 리셉션 등은 외교부에서 전담하여 추진하였다. 경호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였다.

취임행사위원회 구성도



서울경찰청은 전반적인 안전 확보와 교통관리 및 테러 대비 등 각종 우발상황에 대처하였다. 또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취임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언론·방송사 기자단과 협의를 위해 인수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취임식 중계방송·취재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추진하였다.

05.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 대통령 취임행사

제2장 추진 과정

01. 장소 선정

취임준비위원회는 역사적인 새 시대를 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마당,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민공원 등 복수의 장소를 비교·검토하였고,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우천 시 등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취임식 장소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곳이며,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인식과 선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3월 23일 결정하였다.

02. 슬로건 및 엠블럼 선정

1) 슬로건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 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

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취임식 공식 슬로건으로 결정하였다.

2) 엠블럼

취임식 공식 엠블럼은 행사 기획사, 당선인비서실 홍보팀 등에서 제시한 시안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하여 ‘연결, 약속,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엠블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힘찬 날갯짓으로 형상화하였다. 취임식을 통한 국민통합의 과정을 풀기·뉘기·잇기라는 ‘연결’의 과정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03. 취임식 초청자 선정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알리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임식의 기본 추진 방향에 따라 각계각층의 국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초청인사 선정은 세대·계층 간 적절하게 배려하여 각계각층의 대표 인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인물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취임식 슬로건이 의미하는 희망과

국민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취임준비위원회 산하에 국민통합초청위원회를 두고 초청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국민통합초청위원회에는 국민 각계각층의 감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1) 국민 참여(인터넷, 각계 추천 등)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모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취임식이 되도록 일반초청과 특별초청으로 구분하여 국민 참여를 대폭 넓혔다. 대상자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 단위 참여 신청,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첨으로 공정하게 선정·초청하였다.

일반초청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4.8~14)하여 1만 9,099명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입회하여 추첨을 통해 9,813명을 선정하였다. 추첨 결과는 4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개인별로 확인하게끔 하였고, 초청장은 5월 2~3일 양일간 발송하였다.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 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언론에 소개된 봉사과 미담 사례 등을 참고하였다. 이어 17개 시·도를 통해 추천받았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았다. 이를 통해 최종 2,700여 명을 추천받았고 그중 700명을 최종 특별초청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700명 가운데 ①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②자랑스러운 우리 시대 ‘숨은 거인’, ③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④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국민, ⑤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⑥기타 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국민 등 6가지 초청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특별초청 사연을 가진 20명을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다.

특별초청 사연

이름	사례내용	분류
김나윤(29)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 성공	장애 극복
김성민(37)	보호종료로 보육원을 떠나는 형제들의 지킴이 브라더스키퍼 대표	자립 청소년 지원
김형규(47)	청각장애 아동 이식수술 후원 음악밴드 리더(이츠크버)	청각장애 지원
김혜연(37)	스마트팜 스타트업 (썬엔싱 창업자)	2030세대
남궁선(44)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 일망타진	경찰
박무근(73)	10년 만에 모습 드러낸 '키다리아저씨' (매년 익명으로 1억 원 기부)	익명 기부자
박재은(35) 캄보디아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로, 거동 불편한 시부모 봉양	다문화가족
송주연(47)	'방호복 화투' 사진으로 큰 감동을 선사한 간호사	코로나19 극복 간호사
신진서(22)	한국 바둑의 새로운 리더로, 2022년 바둑 세계랭킹 1위	세계 바둑 1위
임계숙(58)	웃음이 그치지 않는 행복한 13남매 엄마	저출산 극복
오영수(77)	영화배우이자 '오징어게임'의 간부 할아버지	한류 문화
육지승(9)	게임기 살 돈으로 달걀 기부해 기부 도미노 현상 일으킨 어린이	어린이 기부자
이성구(62)	대구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700여 명의 의료진에게 감동 메시지 전달	코로나19 극복 의사
이승진(57)	대형화재 당시 주민 40여 명 구한 시민영웅	시민영웅
이은영(47)	남한 정착에 성공한 '행복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인대위(50)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	귀화인
임기중(65)	행복을 나르는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으로, 번 돈 대부분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	나눔과 기부
전환수(32)	조국수호의 소중함 일깨운 천안함 생존자	호국
최덕근(32)	역대 최장기, 최대 피해를 기록한 산불진화에 22회 투입된 공군 헬기 조종사	산불진화 공군
최사라(19)	소리만으로 설원 위 바람을 가르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시각장애 극복

2) 외빈 초청

취임식 외빈으로 주한 외교단장인 봉구 주한 가봉대사를 비롯한 상주대사 113명, 비상주대사 9명, 국제기구 대표 24명, 주한 명예영사 대표 3명 등 총 149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였다.

주한 외교사절과 별도로 각국에서 전·현직 정상 가운데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팅 아르상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더글러스 엠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 등이 참석하였다. 여타 각료급 이상 정부 대표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셰이크 압둘라 빈 사우드 알·타니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아르샤드 라시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데이비드 맥밀런 프린스턴대 교수 등 각국 정계·경제계·학계 주요 인사도 특별 인사로 참석하였다.

3)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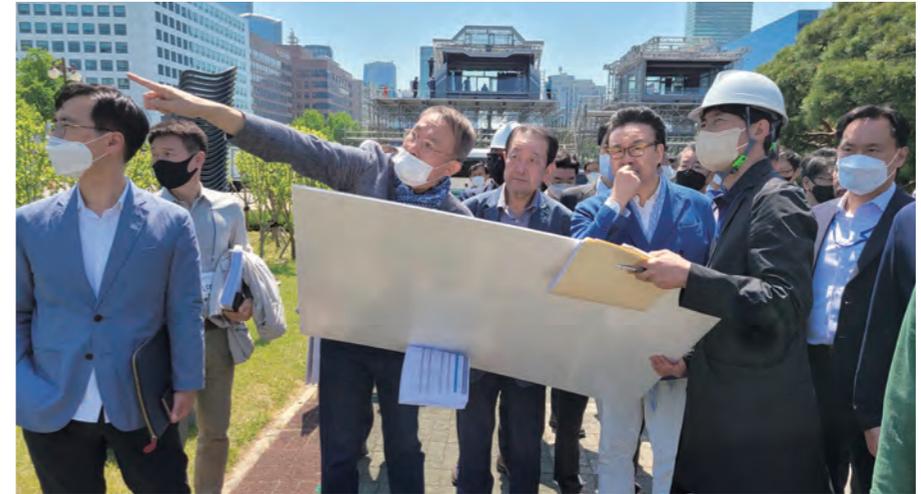
전직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초청 예우도 정중하게 이루어졌다. 박주선 위원장은 4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 임기철 위원은 4월 28~29일과 5월 6일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 및 유가족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고(故)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의 장남 내외,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 윤상구 윤보선사업회 이사 내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남 최규홍 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내외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에게는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봉하마을을 찾아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 유족들 초청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정중히 예우하여 참석을 당부하였고, 참석을 약속한 유족들 역시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한 취임식 준비

박주선 위원장은 ‘취임행사의 완성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취임식 당일 예정된 이동 동선에 맞춰 서울 서초동 당선인 자택, 국립서울현충원, 국회의사당 앞마



국회의사당 앞마당 현장 점검(2022.5.5)

당, 용산 집무실 주변 놀이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취임준비위원장과 총감독, 전문위원 등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개선할 내용 또는 새롭게 반영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였다.

5) 국민대표 단상 좌석 배치

국민대표 20명의 좌석이 우선적으로 취임식장 단상 앞쪽으로 배치되었다. 국민 대통합, 국위선양, 민생안정, 봉사과 희생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대표 20명이 대통령과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단상에 초청된 국민대표

초청 범주	세부사항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및 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국민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을 준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시대 '숨은 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말없이 헌신한 국민 • 지역의 가치성장을 위해 힘쓰는 국민 • 지역내 커뮤니티 형성에 힘쓰는 국민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맨파워를 가진 청년 •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또는 재능기부에 힘쓰는 국민 •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 •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국민 • 국제구호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여한 국민
기타 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국민 • 기타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

04. 단상무대

단상무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상징을 강조하였다. 무대 배경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커다란 하나의 벽으로 재구성하여 꾸몄다. 이는 종전에 유명 화백들의 그림을 활용한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그림을 기념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승화시킨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장 단상

05. 기타

1) 기념우표 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새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여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푸른 하늘과 함께 표현하였으며, 전지 배경에는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국정을 펼쳐나갈 대통령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았다.

기념우표첩에는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대통령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을 담은 나만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의 우표,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초일봉투’가 포함 되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 1종 300만 장, 시트 1종 50만 장, 기념우표첩 1종 2만 부를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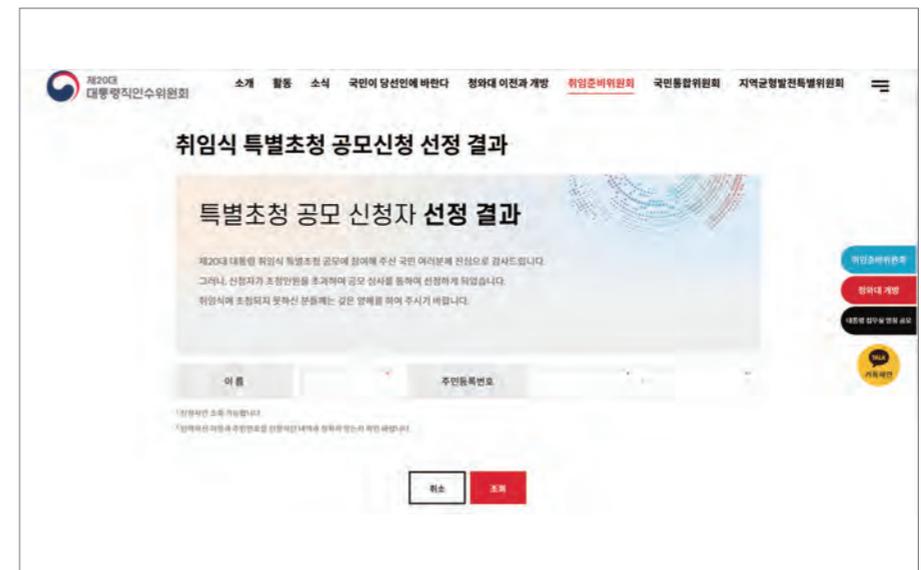
2) 취임사 전통한지 사용

취임준비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취임사를 한지에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박주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취임사를 전통한지와 전통형식을 접착한 서첩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취임사를 전통한지에 작성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전통한지에 취임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한지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한편 ‘국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헌법정신 구현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다. 한지로 만들어진 취임사 서첩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 되어 문화유산으로 남겨진다.

3) 인터넷 홍보

취임준비위원회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내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독려했다. 홈페이지에는 취임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와 공지사항 등의 코너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곳을 통해 누구나 쉽게 취임식 참가 신청과 공모신청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수위 홈페이지 내 취임준비위원회 웹사이트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2022.4.24)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2022.4.24)

4)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취임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관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4월 24일 서울 용산공원 잔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장소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출발의 상징인 용산구로 정하였다.

취임행사의 사전 캠페인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한 그림그리기 축제는 취임행사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마음껏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어린이 100명과 동반가족을 합하여 2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은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다.

그림그리기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그림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재구성되어 취임식 단상 무대의 배경으로 꾸며졌다.

5) 임기개시 상징행사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5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5월 9일 23시 30분부터 임기 개시 상징행사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보신각 타종 인원인 국민대표 20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대표는 4개 조로 편성되어 각 조마다 9, 8, 8, 8회씩 나누어 전통에 따라 총 33회를 타종하였다. 국민대표로는 청년, 소상공인, 코로나19 의료진, 재난 복구, 선행 봉사, 국제평화, 산업화, 다문화, 과학기술 등 각 분야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선정하였다.

타종식 전에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하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국민대표 20인이 소개되고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붓글씨로 써 내려가는 타목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청년, 자영업자, 국민영웅, 배려계층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였다.



타목 퍼포먼스(2022.5.9)

타종행사 참여인사 명단

타종 인사	정지예(서울, 베이비시터 플랫폼 대표), 이준수(전남, 레티스랩 대표), 김조이(전북, 다문화 주인), 김도혜(충남, 청년 농업인), 차평근(경남, 20년 기부), 김윤경(광주, 소상공인), 심채경(대전, 한국천문연구원), 이성호(경북, 미디어아트), 민병언(충북, 장애인수영 선수), 김미래(대구, 코로나19 의료진), 엄일용(경기, 독립운동가 손자), 한용수(북한이탈주민, 철도기관사), 권이중(전북, 파독광부), 김연식(인천, 환경감시선 일등항해사), 인요한(귀화, 선교사 가계 4대 후손), 박수출(부산, 선행 봉사), 임주현(제주, 인명구조), 신대승(강원, 산불 초기진화), 윤종혁(세종, 소방관), 최동욱(울산, 비보이)
타종행사 출연진	조수빈(사회), 리홍재(서예가), 제니스(아카펠라 그룹)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념촬영(2022.5.10)

6) 연도행사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주민들도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취임식 후 사저로의 귀환을 고려하여 환송이 아닌 간단한 축하로 진행하였다.

취임식 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인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전하였다. 용산구 삼각지 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삼각지 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꿈과 염원이 담긴 손편지로 만든 소나무(용산구 구목(區木)) 모양 액자를 환영 선물로 전달하였다.

윤 대통령은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대통령실 정문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취임을 축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7)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2.5.10)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작성(2022.5.10)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지역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였다. 현충원 참배는 의례에 따라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8) 취임식 행사 편의 제공

취임식 당일 코로나19 상황 및 따뜻한 날씨 등을 감안하여 참석자들에게 부채 및 마스크를 제공하였다. 음수대와 간이화장실을 행사장 곳곳에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석을 좌석 맨 앞에 배치하고 외빈용 동시통역 장비를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편의 제공 기념품

05.

경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 대통령 취임행사

제3장 취임행사

01. 취임행사 진행

1) 임기개시 상징행사(5.9/23:30~00:10)

임기개시 상징행사 프로그램

항목	시간	행사내용	비고
식전행사	23:30~23:42	합창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
타종식	23:42~00:08	국민대표 20인 소개	
		현장 인터뷰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취임준비위원장, 시민
		카운트다운 영상	
		보신각 타종	국민대표 20인
		대북 타목 퍼포먼스	서예가 율산 리홍재
폐식	00:08~00:10	행사 종료	

2) 식전 연도행사 및 현충원 참배(5.10/10:00~10:42)

식전 연도행사 및 현충원 참배 프로그램

항목	시간	행사내용	비고
주민 축하 행사	10:00~10:05	지역 주민과 악수	서울 서초동 자택 앞
현충원 참배	10:15~10:42	현충원 헌화 및 참배, 방명록 서명	국립서울현충원

3) 식전행사(5.10/10:00~10:52)

식전행사 프로그램

항목	시간	행사내용	비고
식전행사	10:00~10:06	'꿈의 비상' 프롤로그 공연	청년
	10:06~10:23	'꿈의 비상' 1막 우리의 꿈 공연	어린이, 청년
	10:23~10:39	'꿈의 비상' 2막 내일의 꿈 공연	장애인, 비장애인 청년
	10:39~10:43	국민 희망영상 상영 + 클로징 멘트	사회자
공식행사 안내	10:43~10:52	취임식 안내	사회자

4) 본행사(5.10/10:52~12:05)

본행사 프로그램

항목	시간	행사내용
대통령 입장	10:52~11:00	국회 정문 하차, 도보로 200m 단하까지 이동 후 국민대표 20인과 함께 등단
개식영상 상영	11:00~11:01	국민 속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용산시대의 개막
개식선언	11:01~11:02	팡파르 연주(사회 : 행정안전부 의정관)
국민의례	11:02~11:06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식사	11:06~11:08	국무총리 식사(武辭), 국민에 대한 감사 및 대통령 취임 축하인사
취임선서	11:08~11:10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11:10~11:15	의장대 행진, 예포발사(21발), 축하비행(블랙이글스) 등
취임사	11:15~11:45	대통령 취임사
축하공연	11:45~11:53	이마에스트리 남성합창단 '아리랑', 서울시향 및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연주
이임대통령 환송	11:53~11:56	이임·신임 대통령 내외
대통령 행진	11:56~12:05	국민과 인사 나누며 퇴장

5) 식후 연도행사(5.10/12:25~12:32)

식후 연도행사 프로그램

항목	시간	행사내용
삼각지 쉼터 방문	12:25~12:27	쉼터 어른신께 인사, 답소
삼각지 어린이공원 방문	12:27~12:29	어린이집 아이들과 인사
대통령실 정문 앞	12:29~12:32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인사

6) 예비계획

행사 당일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취임행사가 옥외에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옥내 행사로의 전환 기준, 전환 시점 등 취임행사 예비계획과 매뉴얼을 사전에 수립하였다. 옥내에서 행사를 추진할 경우 4만 1,000명의 초청인원을 전직 대통령, 5부 요인, 국빈, 국내외 주요 인사, 국민대표 등 단상 인사 중심으로 축소(500여 명)하기로 하였다. 장소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고, 옥외 행사에서 예정된 식전공연, 군악대 및 의장대 행진, 예포발사 등은 생략하고 최소한의 교향악단 및 합창단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TV, 라디오 속보를 통해 취임행사 변경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일반초청자에게도 안내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옥내 행사 전환 기준

방법	• 기상청과 공군기상대의 행사 당일 일기예보 상황을 참고하여 당선인비서실과 협의 결정
기준	• 강우 : 시간당 5mm 이상, 바람 : 초속 9m/초 이상 • 비가 약하게 내릴 경우(5mm 미만) 참석자 우의 등을 준비하여 옥외 행사로 진행

옥내 행사 결정 절차

5.3(화) (D-7)	• 기상청 약천후 예측시(7일 : 중기예보) 전환대책팀 구성 • 언론을 통해 실내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도
--------------	--



5.9(월) 10:00	• 기상청 약천후 예측시(단기예보) 비상대책회의 소집 결정 (당선인비서실, 경호처, 기상청, 실무추진단 협의)
--------------	---



전일 전환 결정 시	당일 전환 결정 시
5. 9(월) 16:00 발표	5.10(화) 06:00 발표

02. 취임행사 안내

1) 안내계획 및 조직 구성

취임준비위원회는 '취임식의 성공은 안내가 좌우한다'라는 인식 아래 안내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을 구성하였다.

안내 조직은 안내본부팀, 비표교환팀, 식당내부팀, 식당외부팀, 중간집결지팀, 주차관리팀 등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역할에 있어 ①안내본부팀은 행사 안내 전반에 대해 총괄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다른 분야의 안내요원들이 제 위치에서 원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②비표교환팀은 초청인사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검증된 인사에 한해 비표를 교부하여 행사장 입장을 도우며, ③식당내부팀은 비표를 받은 초청인사를 해당구역의 좌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안내하였다. ④식당외부팀은 행사장 인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호선 여의도역 및 여의나루역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는 초청인사들의 질서유지 및 행사장 이동 방법과 셔틀버스 이용 등을 안내하고, ⑤중간집결지팀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초청인사들이 편리하게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광화문, 충무로, 용산 등 행사장 인근에 중간집결지를 지정하여 초청인사들을 버스로 행사장까지 단체 인솔하였다. 마지막으로 ⑥주차관리팀은 행사장에 오는 버스 및 승용차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입·퇴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안내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은 4월 13일 행정안전부에 안내요원 선발을 요청하였다. 당초 초청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제18대 취임식(약 7만 명 초청)을 기준으로 830명의 인원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초청 규모가 4만 1,000명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안내요원 규모를 축소하여 4월 28일에 총 773명의 안내요원을 확정하였다.

안내조직은 당초 실무추진단에 포함된 22명과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773명을 활용하여 총 795명 규모로 편성되었다. 안내본부팀 46명, 비표교환팀 312명, 식당내부팀 179명, 식당외부팀 36명, 중간집결지팀 108명, 주차관리팀 1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안내요원이 명확한 목표의식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안내요원 교육도 5월 2~9일 분야별로 나누어 서울과 세종에서 진행하였다. 5월 2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권을 대상으로 안내본부팀과 비표교부팀 일부를 교육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본인의 근무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도 병행하였다. 5월 3~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비표교부팀, 식당내부팀, 식당외부팀, 중간집결지팀, 주차관리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만,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 현장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반장·조장 등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5월 9일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2) OCR 참석자 확인 시스템 도입

이번 취임식에서는 광학문자인식(OCR) 참석자 확인 시스템 도입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졌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새로 도입한 OCR 참석자 확인 시스템은 휴대폰형 단말기를 통해 신분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스캔하여 초청인사 본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비표교부대에 초청인사가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과 입장카드 제시를 요구하고 노트북에 있는 명단과 대조하여 초청인사 여부를 확인한 후 비표를 교부하였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OCR 참석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신분 확인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 사용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경호처와 협의하여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OCR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 때 안내하였다.

3) 자원봉사요원의 적극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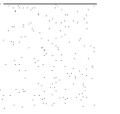
대통령 취임식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행정안전부 안내요원 이외에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각 200명을 지원받아 총 400명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요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초청인사들을 출입문부터 좌석까지 친절히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념품 배부, 식수대 운영, 화장실 주변 질서유지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자원봉사요원 조장급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할과 임무에 대해 5월 6일 사전교육과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약 800명의 행정안전부 안내요원 및 약 400명의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내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현장답사를 병행함으로써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03. 취임행사 주요 일정

일시	주요 내용
2022.3.15	•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선임
2022.3.17	• 취임준비위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취임행사 준비사항 보고(행정안전부, 외교부)
2022.3.21	•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제1차 회의 - 국민통합 초청을 위한 위원 의견 수렴 및 토의
2022.3.22	• 취임준비위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관련 보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취임식 행사 장소 후보지(안), 기획사 선정계획(안) 등 준비사항 보고(행정안전부) - 외빈 초청 등 취임식 준비상황 보고(외교부)

일시	주요 내용
2022.3.23	• 취임행사 준비사항 당선인 보고(준비위원장) - 준비위원회 구성, 행사장소, 기획사 선정 등 • 취임식 개최 장소 대국민 발표(준비위원장) - 준비위원회 구성, 행사장소(국회의사당) 발표
2022.3.23	• 취임사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취임사 집필 기본방향 기획
2022.3.28	• 취임준비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기획사 선정 제안 설명 평가회 개최(취HS애드 선정)
2022.3.28	• 취임사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 취임사 컨셉 및 7대 분야 중요도·배치 토의 및 분야별 집필자 결정
2022.3.29	• 국무회의(제14회) 보고 -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사항 • 국회의장 예방 및 총리 공한문 전달
2022.3.29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 취임식 기본 컨셉 및 방향 토의
2022.3.29	•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제2차 회의 - 취임식 초청자 선정 기획,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 특별초청 대상(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사례 발굴) 선정 업무 착수
2022.3.30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 취임식 주요 키워드·슬로건·뉴미디어 활용방안 토의
2022.3.31	• 취임행사 준비사항 당선인 보고(2차) - 참석규모, 외빈초청 만찬 등 - 취임사 1차 초안
2022.3.31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 취임식 연출 및 무대 설치·장식 등 토의
2022.4.1	• 취임준비위 제4차 전체회의 및 실무 워크숍 개최 • 취임행사 프로그램 연출(안) 보고(준비위원장)
2022.4.4	• 취임행사 실무추진단 인사발령
2022.4.4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 보신각 타종, 사저 출발, 현충원 참배, 사전행사, 본 행사 등 토의
2022.4.5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 탈권위 행사 방안, 국민참여형 연출 방안 등 토의
2022.4.5	• 취임행사 준비사항 당선인 보고(3차) - 취임행사 기본방향 및 프로그램 PPT 보고
2022.4.6	• 취임사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 취임사 1차 초안 토론 및 보완, 인수위 국정비전과 목표 등 검토작업
2022.4.7	• 취임준비위 제5차 전체회의 - 국민참여 홈페이지 개설, 참석 규모 검토 - 기상 현황 및 우천시 예비계획(기상청) -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2022.4.7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회적 약자, 청년, 어린이와 함께 하는 취임식 행사 방안 토의

일시	주요 내용
2022.4.8	•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제3차 회의 - 일반 국민의 취임식 참석 및 특별초청 신청을 위한 인수위 홈페이지 팝업 게시 (4.8~14), 17개 시·도를 통한 감동 인물 발굴 업무협조(행정안전부) 및 1차 선정
2022.4.8	• 취임행사 준비사항 당선인 보고(4차) - 슬로건(주제어), 엠블럼 보고 • 인터넷 국민참여 신청 접수(~4.14)
2022.4.11	• 취임준비위 홈페이지(인수위 홈페이지 내) 오픈 - 준비위원장 인사말씀, 조직도, 국민참여 신청, 특별초청자 공모
2022.4.11	• 취임식기획위원회-이도훈 총감독 1차 합동회의 - 취임식 연출의 기본방향과 공감대 형성
2022.4.13	• 취임행사 관련 실무 워크숍 개최
2022.4.13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 - 어린이, 청년 등을 위한 공연,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초청 방안 등 토의
2022.4.13	• 취임사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 취임사 TF 구성
2022.4.14	• 취임준비위 제6차 전체회의 - 방송기획합동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사전캠페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개최계획, 연회연도행사 기본계획 등 논의
2022.4.14	• 취임사준비위원회 TF 1차 회의 - 취임사 내용 집중 보완 및 의견 수렴
2022.4.14	• 취임사준비위원회 TF 2차 회의 - 취임사 내용 종합정리
2022.4.18	• 취임행사 기본계획 국무총리 보고 • 취임준비위 제7차 전체회의 개최 - 초청 접수 현황, 외빈 만찬 보고 • 주요 추진상황 당선인 비서실과 협의
2022.4.18	• 취임식기획위원회-이도훈 총감독 2차 합동회의 - 무대, 객석, 입장 및 부대시설, 기념품, 본공연, 임기 개시 및 식후 행사 등 협의
2022.4.18	•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제4차 회의 - 국민희망 대표 20인 선정, 국민통합 특별초청 인사 680인 선정
2022.4.19	• 제1차 방송기획합동위원회 개최
2022.4.19	• 취임준비위 제8차 전체회의 개최 및 국회의사당 현장 방문
2022.4.20	• 경호·경찰 관계관 회의 • 국회 관계자 회의
2022.4.21	• 취임준비위 제9차 전체회의 개최 - 취임식 초청규모 및 현황, 참가자 기념품, 초청장 등 검토보고 - 외빈 초청 및 재외동포 리셉션 등 검토보고
2022.4.22	• 취임식기획위원회 제8차 회의 - 기획회의 아이디어 총괄 평가
2022.4.24	• 사전캠페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개최 (용산공원)
2022.4.25	• 제2차 방송기획합동위원회 개최
2022.4.25	• 취임사 당선인 최종보고(위원장)



일시	주요 내용
2022.4.25	• 취임준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 취임식 초청규모 및 현황, 참가자
2022.4.26	•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친필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 (위원장)
2022.4.26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안전점검회의 - 유관기관별 안전관리계획 공유 및 비상시 협력체계 구축
2022.4.26	• 취임식 일반국민 신청 대상 추첨
2022.4.27	• 취임 준비 언론브리핑(위원장) • 인수위 영상백서 제작 KTV 인터뷰(위원장)
2022.4.28	• 취임준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 - 일반국민 인터넷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일반 점검, 초청장 디자인 보고 - 외빈 초청 및 재외동포 리셉션 등에 관한 추가 보고
2022.4.28	•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 취임식 초청장 전달(4.28~29, 임기철 위원)
2022.4.29	• 취임준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 취임식 준비 관련 점검
2022.4.29	• 취임식 일반국민 신청 추첨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2.5.2	• 취임준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 기상예보 현황, 초청자 안내 및 수송계획, 취임사 작성에 전통한지 사용 추진 계획, 재외동포 리셉션 관련 보고
2022.5.2	• 초청장 발송
2022.5.3	• 취임식 언론브리핑(위원장) - 대통령 취임식 국민초청 결과 등 발표
2022.5.5	• 취임식 행사장 현장 답사(위원장)
2022.5.6	• 취임식 언론브리핑(위원장)
2022.5.6	• 취임준비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
2022.5.7	•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 현장 점검
2022.5.9	• 취임준비 국회 현장 리허설
2022.5.9	• 제20대 대통령 임기 개시 보신각 타종식
2022.5.10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04. 평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이 주인 된 국민의 나라'라는 행사 기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담아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섬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국민 대통합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국민축제로 거행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단상 앞까지 차를 타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2022.5.10)

고 왔지만, 이날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국회 정문 앞에서 내려 180m를 걸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단상에 오른 것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가 잘 반영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뒤 단상에서 계단을 내려와 야외 객석을 향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한 것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진 국내적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유통망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이 무척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조촐하고 검소한 취임행사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호화롭지 않게 국민의 축복과 환영을 겸손하게 받들며 추진되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기획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어린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린 그림 100장과 함께 국민 희망 영상 응모 작품이 취임식에 활용된 것도 이러한 취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였다.

취임행사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을 전달해 드리는 데 최우선적 고려를 하였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온전히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취임행사 전반에 걸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박주선 위원장은 수시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을 겸손하게 받드는 대통령의 의지와 누구나 꿈꾸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평소 대통령의 철학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동시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박주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출발 현장에서부터 국립서울현충원, 국회 앞마당 등 취임행사 동선을 따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비연습을 통하여 취임식 거행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취임준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 취임행사라는 막

중한 임무를 추진하면서 기획에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담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일부는 실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취임식에서 단상을 없애고 대통령이 단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현장 방문도 하였지만, 외국 정상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기에 국제사회의 의전 관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단상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취임식 직후 행사도 용산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 외빈 만찬 장소는 원래 청와대 영빈관으로 계획했지만 취임식 날과 같은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어 국민 품에 안겨드리게 되어 있기에 그곳에서 만찬을 진행하려면 국민의 출입이 제한되고 불편을 드릴 수 있어 부득이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호텔에서 만찬을 했어도 실제 비용은 불과 약 50만 원이 추가 발생되어 ‘호화 만찬’이라는 오해는 불식되었다.

단기간에 추진된 대통령 취임 행사를 위한 효율적인 인적 구성의 어려움도 따랐고 물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보완되어야 할 것도 있다. 대통령 취임 행사라는 중요한 국가적 추진업무가 <대통령 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3호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향후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에 관해서는 별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조직 구성 및 예산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행사 활동을 위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롭게 법·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위로·희망·통합’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국민의 직접 참여가 돋보인 행사라고 방점을 둘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전 국민이 어우러지는 품격있고 소박한 국민축제의 자리였다는 평가와 함께 권위와 격조를 갖추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내실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 대통령 취임행사

제4장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푸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0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0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분장업무

0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근무자 현황

0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편집후기

백서 편찬위원회

0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0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실·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88>까지 생략

0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규정 제2호, 202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주요 과제를 관리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를 두며, 기획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활동상황과 각 분과위원회 업무조정을 담당한다.

③각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과 분장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④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팀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대변인실) ①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 공표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을 둔다.

②대변인실에는 대변인 1인을 두며,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행정실) ①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은 인수위원회의 운영, 직원의 인사, 행정지원 및 서무, 취입식 준비지원, 백서발간 등을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사항과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임무) ①자문위원 등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자문·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자문위원 중 일부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에 두어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실무위원·실무요원 등을 둘 수 있고,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장실에 보좌역과 필요한 요원을 둔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실·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체회의 및 간사 회의로 구분한다. 필요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 전체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간사회의는 매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요정책 보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 당면 현안문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 및 그 밖의 주요정책사항을 수시로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요청) 위원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 또는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한다.

제16조(결산) 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인수업무와 관련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며 정산된 잔여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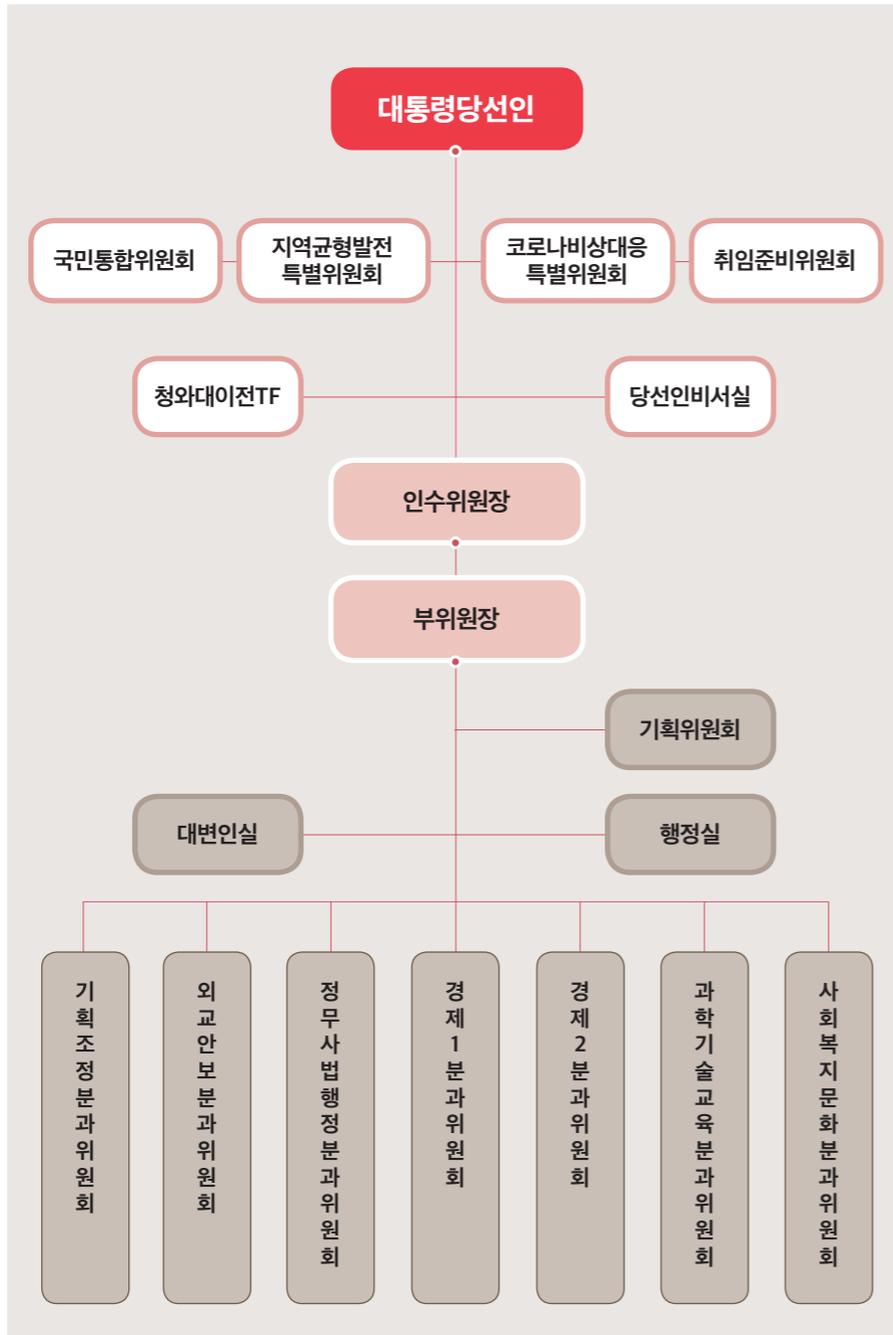
제17조(활동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임)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분장업무

구분	위원 등	분장업무
위원장	안철수	대통령당선인 보좌, 인수위원회 업무 총괄
부위원장	권영세	인수위원회 주요 과제 관리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추경호, 최종학, 박수영	국정비전과 철학 정립, 인수위원회 운영 기획 및 총괄 조정, 국정과제 설정 및 로드맵 작성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김성한, 김태호, 이종섭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외교안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회	이용호, 유상범, 박순애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일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1 분과위원회	최상목, 김소영, 신성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2 분과위원회	이창양, 왕윤중, 유용환, 고 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교육 분과위원회	박성중, 김창경, 남기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위원회	임이자, 백경란, 안상훈, 김도식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신용현	인수위원회 관련 업무의 대외 공표 등
행정실	서일준, 허성우	인수위원회 인사·행정·예산에 관한 사항



0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근무자 현황

위원장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인수위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겸임)



권영세 부위원장
(인수위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추경호 인수위원(간사)



박수영 인수위원



최종학 인수위원

전문위원	이재성(당), 장순철(선대위), 신용출(선대위), 이승현(핀테크블록체인학회), 박성근(변호사), 이영훈(국민미래연구원), 임상준(국무조정실), 김안섭(기획재정부), 김종문(국무조정실)
실무위원	전원(당), 전정욱(당), 김동현(선대위), 홍성범(선대위), 최연우(선대위), 강상원(변호사), 이동훈(금융위원회), 오정윤(기획재정부), 김명규(기획재정부)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김성한 인수위원(간사)



김태호 인수위원



이종섭 인수위원

전문위원	신범철(선대위), 김홍균(선대위), 박철희(서울대학교), 김경순(선대위), 이문희(외교부), 황승희(통일부), 임기훈(국방부), 국가정보원 1명, 오영주(외교부)
실무위원	장영일(선대위), 신인호(KAIST), 신다윗(국방부), 김영무(당), 김서령(선대위), 김진수(선대위), 배현진(외교부), 정윤권(통일부)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이용호 인수위원(간사) 유상범 인수위원 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용선(선대위), 김민수(선대위), 이두아(선대위), 유주상(변호사), 유병호(감사원), 전무근(법무부), 박기동(법무부), 김도형(경찰청), 최병관(행정안전부), 정승윤(부산대학교)
실무위원	서승혜(당), 이서연(당), 임지홍(선대위), 제방훈(선대위), 송영훈(변호사), 박성대(감사원), 남호성(행정안전부), 박종현(경찰청), 지윤경(인사혁신처), 주낙동(소방청), 국가정보원 1명

경제1분과위원회



최상목 인수위원(간사) 김소영 인수위원 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위원	박익수(변호사), 임우근(당),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조규홍(충북대학교), 권남훈(건국대학교), 이한상(고려대학교), 주현철(변호사), 김병환(기획재정부), 김동일(기획재정부), 권대영(금융위원회), 박종희(국세청)
실무위원	정우창(당), 하현수(선대위), 곽준성(선대위), 서종군(한국성장금융), 구성림(공정거래위원회), 정형(기획재정부), 장권철(국세청), 김형원(금융감독원)

경제2분과위원회



이창양 인수위원(간사) 왕윤종 인수위원 유용환 인수위원 고 산 인수위원

전문위원	윤준호(선대위), 정용훈(KAIST), 박주현(동덕여자대학교), 심교언(건국대학교),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 김성보(서울특별시), 전재우(해양수산부), 백원국(국토교통부),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
실무위원	김용수(당), 김지희(한국원자력연구원), 지우호(농협), 박용일(포럼청년미래),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 송남근(농림축산식품부), 안성식(해양경찰청), 정중대(서울특별시)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박성중 인수위원(간사) 김창경 인수위원 남기태 인수위원

전문위원	조철희(당), 김윤정(창업진흥원), 최수영(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동규(중앙대학교), 박철완(서정대학교), 상수중(YTN),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 김일수(교육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
실무위원	김지은(당), 김찬영(선대위), 조영직(선대위), 배윤주(선대위), 안호림(인천대학교), 윤성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선(교육부), 이소라(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임이자 인수위원(간사) 안상훈 인수위원 백경란 인수위원 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위원	백현주(선대위), 채성령(선대위), 장인환(선대위), 정승국(중앙승가대학교), 송재현(아동정책조정위원회),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김동원(서경대학교), 임인택(보건복지부), 이정환(고용노동부), 이병화(환경부)
실무위원	박래혁(당), 문승현(선대위), 신단아(선대위), 김태욱(선대위), 장혜원(선대위), 이부형(위덕대학교), 장철원(선대위), 손혜린(당), 김부희(고용노동부), 강동진(문화체육관광부), 전 완(환경부)

대변인실



신용현 인수위원(대변인)

전문위원	원일희(선대위), 최지현(선대위), 김성범(선대위), 김기흥(선대위), 차승훈(선대위), 김용진(당)
실무위원	장영호(선대위), 장덕상(선대위), 장경아(선대위), 장상훈(당), 임지희(당), 김재현(대한체육회)

행정실



서일준 행정실장 허성우 행정부실장

전문위원	신재경(선대위), 박경로(선대위), 조규보(선대위), 박한석(선대위), 이창연(선대위), 신진욱(선대위), 김일호(당)
실무위원	김정태(선대위), 이승원(선대위), 이인모(서울특별시 중구청), 유윤수(행정안전부), 김동수(국세청)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실무위원	나종윤(선대위)
------	----------

청와대이전TF



윤한홍 청와대이전TF 팀장

0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일자	내용
3.12	-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설치(집무실, 회의실 등)
3.13	-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인선 발표(당선인) - 행정실장, 당선인 집무실 준비상황 점검
3.14	- 당선인, 인수위원장·부위원장·기획위원장 간담회 -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출근 - 인수위원 발표(기획조정분과)
3.15	- 당선인, 경북 울진·강원 동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 - 인수위원 발표(경제1·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분과)
3.16	- 당선인, 인수위원 차담회 - 행정실 운영계획 인수위원장 보고 - 인수위 삼청동 사무실 국가정보원 보안측정
3.17	- 당선인, 국민통합위원장·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취임준비위원장 간담회 - 인수위원 발표(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분과 및 대변인)
3.18	- 인수위 현판식, 당선인 주재 제1차 전체회의 - 위원장,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 -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s://20insu.go.kr) 개통
3.19	-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방문(정부서울청사, 용산 국방부) - 민원·제안 분야 전문가 간담회
3.20	- 당선인 브리핑,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기자회견 - 인수위 구성 확정(184명)
3.21	- 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코로나19비상대응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
3.22	- 당선인 주재 간사단회의 - 국방부 업무보고 - 천막기자실 설치(통의동 1층 앞마당)
3.23	- 당선인, 응우옌 쉘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 통화 - 당선인, 기자실 즉석 티타임(인수위 앞마당 천막)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방위사업청·통일부 업무보고

일자	내용
3.24	- 당선인, 주한 이스라엘대사 접견 - 위원장, 제3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 -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부동산TF 1차 회의
3.25	-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 - 위원장, 간사단회의 - 국토교통부,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업무보고 - 콜센터·청년 분야 전문가 간담회
3.26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워크숍
3.27	- 위원장, 간사단회의 - 4월중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단장 : 박진)' 파견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수위의 간담회 요청 거부 기자회견 - 불편민원 방문 간담회(통의동 한복집)
3.28	- 당선인, 주한 일본대사 접견 - 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 / 제4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국가정보원, 소방청,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산림청 등 업무보고 - 제2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3.29	- 당선인, 간사단회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 -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간담회 -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기상청·해양경찰청·새만금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업무보고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 간담회 / 예술인복지재단·문화예술위원회 간담회 등 -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현장 방문 및 면담
3.30	- 당선인,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통화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 - 여성단체대표단 간담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담회 등 -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기자회견

일자	내용
3.31	- 당선인 주재 분과 업무보고 - 당선인,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통화 - 위원장,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코로나19 대면진료 현장 방문(서울직접병원) -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 고용노동 정책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 / 원전 정책 현안 논의 / 글로벌 K-컬처 1차 회의 등
4.1	- 당선인,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대사단 접견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청소년·가족단체 간담회 -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 환경부 ESG 관련 회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담회 / 국토교통 분야 유관단체 간담회 등
4.2	- 당선인, 국무총리 내정자 비공개 회동
4.3	- 당선인,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당선인,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 - 위원장, 간사단회의 -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단장 : 박진)' 방미 - ICT·소부장·출연연 전문가 간담회 / 미디어 분야 간담회 등
4.4	- 당선인,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 주재 - 위원장, 제4차 전체회의 / 제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국민제안센터 개소 및 현판식 -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행정안전부 간담회 등 - 인수위원회 정보 보안점검(4.4~8)
4.5	- 당선인, 간사단회의 / 분과 업무보고 -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접견 - 인수위 홈페이지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신설 - 디지털플랫폼정부 TF 1차 회의 / 문화예술공약 전문가 간담회 / 물 관리 정책 관련 회의 / 대학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 등
4.6	- 당선인, 주한 독일대사 접견 / 주한 중국대사 접견 - 당선인, 17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연금제도개혁 전문가 간담회 / 글로벌 곡물 공급망 위기 대응 업계 간담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농민단체 면담(국민통합위원회) - 정보화기기 보안 강화 조치 시행(4.6~8) / 온·나라 문서유통 지원

일자	내용
4.7	- 한미연합사(캠프 험프리스, 경기 평택) 방문 - 위원장, 정부조직개편 브리핑 /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유아용 투명마스크 활용 현장 방문(서울 사직어린이집)
4.8	- 위원장, 현대기아자동차남양기술연구소 방문(경기 화성) / 분과 실무위원 차담회 - 콘텐츠 제작·유통업계 간담회 / 불교계 간담회 / 보도채널 간담회 / 새만금발전기확산 개최 등
4.9	- 국민통합위원회 워크숍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1차 지역현장 방문(대구) - 장애인단체 차담 및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자 면담
4.10	- 당선인, 1차 내각 인선 발표(경제·국방·국토·문체·보건복지·산업통상·과기·여가)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서울 통인시장) - 부산청년센터 방문(청년소통TF)
4.11	- 당선인, 순직 해양경찰관 합동분향소 조문 - 위원장, 제5차 전체회의 / 제10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 매뉴얼' 배포 -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관련 기자회견 - 국민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등 - '국민제안센터' 콜센터(1392) 개시
4.12	- 위원장, 범죄예방정책 현장 방문(서울경찰청) / 광주광역시장 접견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국민제안센터' 운영 간담회 / 환경정책 간담회 등
4.13	- 당선인, 2차 내각 인선 발표(법무·외교·통일·교육·환경·해수·중기·행안) / 첫 번째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참석 - 위원장, 제11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학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흥대부여고) - 외교안보분과, 외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업무보고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차 지역현장 방문(새만금) - '검수완박' 법안 관련 기자회견
4.14	- 당선인, 3차 내각 인선 발표(고용·농식품) - 제12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보고 - 부동산TF 2차 회의 / 라이더 유니온 면담(배달종사자 노조) / 119소방정책 현장 방문 (서울소방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일자	내용
4.15	- 당선인, 주한 영국대사 내정자 접견 / 한국노총 방문 - 위원장, 간사단회의(당선인 참석) -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보고 -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시작 - 순경출신 경찰관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 기자회견
4.16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차 지역현장 방문(광주, 전남)
4.17	- 위원장, 간사단회의 -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단장 : 정진석)' 파견 발표 -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회의
4.18	- 당선인, 서울국제포럼(SFIA) 주최 경제안보정책 간담회 - 위원장, 제6차 전체회의 /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 - 국민통합위원회 4차 전체회의 개최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 장애인단체 간담회 등
4.19	- 당선인,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 / 두 번째 경청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 - '검수완박' 추진 관련(2차) 기자회견 - 서울시 광화문광장 추진단 간담회 / 청와대 개방 연계 도심관광 활성화 방안 회의 등
4.20	- 위원장, 제14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2022 월드IT쇼' 개막식 참석 및 전시관 참관(부위원장)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기자회견 -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 간담회 등
4.21	- 위원장, 제15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국민제안 통합 플랫폼' 운영 브리핑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TF 회의 / 감염병전문병원 보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단 면담 등
4.22	- 간사단회의(부위원장 주재) - 배달종사자 보호방안 관련 간담회 / 건강보험 현안 보고 / 바이오·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 간담회 -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용인 레미콘 공장, 국민통합위원회)
4.23	- '우수제안 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4.24	-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방일 - 청소년·청년 오픈 컨퍼런스 '이청득심' 개최(기획위원회)

일자	내용
4.25	- 당선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SK바이오사이언스) - 위원장, 제7차 전체회의 / 제16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4.26	- 청년 크리에이터 제작·창업 지원 간담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 언론사 반장 간담회 - '우수제안 국민 선호도 조사' 종료
4.27	- 당선인, 주한 프랑스대사 접견 / 에드윈 풀너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 접견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회장 접견 - 당선인,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참석 - 위원장,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보건의료)
4.28	- 위원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회장 접견 / 국민의힘·인수위원회 당정협의 회의 참석 - 위원장,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안 발표 - '우수제안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브리핑
4.29	- 당선인, KAIST 나노종합기술원·오창 방사광가속기 현장 방문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주한 영국대사 접견 /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참석 /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및 간담회(기획위원회)
5.1	-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 개편 - 위원장,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방문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방향 발표(기획위원회)
5.2	-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TF 최종 회의 /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발표 - 국민체력100 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논의
5.3	- 당선인 주재 제8차 전체회의 - 위원장, 국정과제 언론브리핑(6대 추진방향·110개 수행과제) /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 참석
5.4	- 청년 예술인 지원방안 등 논의(서경대 공연예술센터)
5.5	- 당선인,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발표
5.6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 - 당선인, 캐나다 총리 전화 통화 / 주한 인도대사 접견 - 위원장, 간사단회의 - 위원장,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 참석

편집후기

3월 18일 출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5월 6일 해단식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이끌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에 초점을 맞춰 지난 정부가 걸어온 길을 갈무리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설계해 나갔다.

매 순간이 치열했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까지 7개 분과로 구성된 간사단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와 TF는 부처와 현장을 두루 섭렵하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의 뼈대를 만들어 갔다. 수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신념과 원칙을 확인하며 정책의 결을 하나의 방향으로 다듬는 시간이 되었다. 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태어나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은 밤낮없이 이어졌다. 치열하게 부딪힐수록 방향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그렇게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세웠다. 국정과제와 정책 역시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당선인의 신념이 어떻게 국정운영에 녹아들고,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정책이 탄생했는지 가감 없이 공유하며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다. 백서 편찬위원회는 굳이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위한 지도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책을 써 내려갔다. 따라서 이 백서는 인수위 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 정부의 출발을 여는 첫 장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정책 수행을 위한 안내서로, 때로는 초심을 돌아보는 지침서로 5년 동안 두루 활용되길 희망한다.

인수위 활동을 기록하며 통의동과 삼청동을 오가는 사이 꽃이 피고 봄이 왔다. 만물이 역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며 잠시 여유를 찾곤 했다. 겨울을 뚫고 찾아온 봄처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외치는 새 정부의 내일이 대한민국에 포근한 봄날을 선사하길 바란다. 인수위 해단식에서 당선인은 ‘끝’이 아닌 ‘함께’를 외쳤다. 인수위의 찬란했던 봄날이 새 정부의 더 멋진 봄날로 이어지는 바람을 백서의 마지막에 담아본다.

백서 편집위원장
허성우

백서 편찬위원회

편집위원

위원장 허성우(행정부실장)

위원 박경로(행정실 전문위원)

신재경(행정실 전문위원)

이승원(행정실 실무위원)

현해리(당선인비서실 홍보보좌역)

전영옥(행정실 실무요원)

발간팀 이수지(편집,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곽승한(편집,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경력관)

국경원(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경력관)

이학재(영상, 한국정책방송원 PD)

사진제공 김용위(당선인비서실 미디어팀)

신유경(당선인비서실 미디어팀)

집필위원

조지연(당선인비서실)

김성욱(부위원장실)

임상준(기획조정분과위원회)

김민(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주영준(경제2분과위원회)

신단아(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도현(국민통합위원회)

최병호(취임준비위원회)

유윤수(행정실)

이종원(청와대이전TF)

배동수(위원장실)

권신일(기획위원회)

황승희(외교안보분과위원회)

김병환(경제1분과위원회)

손명선(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윤영덕(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김범수(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장영호(대변인실)

이지성(국민제안센터)

장예찬(청년소통TF)